

제23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20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1. 6.

관계부처 합동

교	육	부	법	무	부	농림축산식품부		
보	건	복	환	경	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	촌	진	흥	청	관	세	청

목 차

I . 2020년 추진실적 총평	1
II . 2020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6
III . 분야별 추진 실적	14

I . 2020년 추진실적 총평

1]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제4차('18~'20)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은 5대 분야 138개 과제*를 수립·시행함

(전략 1)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 관리 : 18개 (전략 2)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36개
(전략 3)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 34개 (전략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33개
(전략 5)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17개

* 식약처 74, 농식품부 34, 해수부 9, 관세청 6, 농진청 6, 교육부 5, 복지부 2, 법무부 1, 환경부 1

- (추진결과) 2020년 시행계획 138개 세부과제 중 이행완료 129개, 미흡 6개, 지연 3개 ※ 코로나19 영향 : 5개

- ①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제도 도입 미흡
- ② 영유아용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사전점검제 도입 미흡
- ③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미흡(코로나)
- ④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미흡(코로나)
- ⑤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지연
- ⑥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급식관리 수혜율 100% 달성 지연
- ⑦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연(코로나)
- ⑧ 한·아세안 위생협력사업 자체평가 미흡(코로나)
- ⑨ 불량식품 관련 회의 및 수사전문화교육 실시 미흡(코로나)

※ (점검방법) 부처 추진실적 제출(~2.28) → 국조실 점검(~3.10) → **전문위원회*** 점검(3.12~22) → **운영협의회**** 점검(4.12~16)

* 전문적 검토를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내 위원회(5개 분과, 각 분과별 15인)

** 위원회 **안전심의**를 위한 **사전 협의체**(전문위 분과위원장·간사 및 부처 국장, 19인)

② 과제별 미흡·지연 사유 및 대책

○ '2020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미흡·지연 과제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2-1-②-②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제도 미도입 * (목표) '19년까지 동물복지 직불금제도 도입 / (실적) 미도입 ○ (사유)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2.4조) 과다소요로 개별 직불제 도입이 어려움 * 6개 직불제(쌀고정·변동, 발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통합·개편(20~) ○ (향후대책) 대안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추진(20년 11억원 신규 반영) 하면서 직불제 도입도 지속 추진
3-2-①-② 영유아용 특수 용도식품 해외제조업소 사전점검제 도입(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사전점검제 도입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미개정 * (목표) 개정안 국회 제출 / (실적) 미제출(대안 마련·추진) ○ (사유) 해외 운영사례가 부재*하고 수입과 국내식품 간 관리체계 형평성 문제 존재 → 법 개정 대신 영유아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대안) 마련·추진 * 법제연구원을 통해 EU, 중국 등 영유아 수입식품 사전점검제 사례 연구(20.5~8월) ○ (향후대책) 해당 없음(대안 추진 완료)
3-2-①-③ 수입위생평가 확대 및 전문화(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미흡 * (목표)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건수 2건 / (실적) 無 ○ (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이동제한 조치로 수행 불가 ○ (향후대책) 수입위생평가 비대면 현지조사(서류검토+영상회의) 추진
3-2-④-① 보따리상 등 휴대 반입식품 관리 강화(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미흡 * (목표) 화객선 휴대반입식품 수거·검사 건수 1,300건 / (실적) 35건 ○ (사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월 부터 보따리상 반입실적 無 ○ (향후대책) 휴대반입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반입시 검사 지속 추진
3-3-③-②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김치, 떡 등 나트륨·당류가 많은 식품 및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 확대 지연 * (목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12월) / (실적) 시행규칙 입법예고(6월) ○ (사유) 김치류 영양표시 반대 의견, 김치류 중 적용 품목 및 적용 시기 조정*을 위한 전문가, 소비자, 업계 간담회 등에 시간 소요 * 배추김치 우선 의무화, 300억 이상 업체부터 우선 적용 ○ (향후대책) 합리적 방안 마련 협의 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21.6)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4-1-2-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충(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급식관리 100% 달성 지연 * (목표) ('19) 75% → ('20) 100% / (실적) ('20) 90% ○ (사유) 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위한 법안개정 지연, 일부 지자체 예산 미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 지연 ○ (향후대책) 센터 설치·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급식소가 차질없이 관리되도록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2.29) 및 시행('21.12.30)
4-1-2-②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연 * (목표) 프로그램 참여 아동 비만을 유지/ (실적) 산출 지연 ○ (사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건강증진업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입력·제출 및 취합·분석 등 일정 지연 * 점검 당시에는 산출이 어려웠으나 '21.5월 현재 측정 가능 → 평가반영 표본수 3,280명 중 과체중비만아동 (기존) 1,154명(35.2%) → 1,149명(35.0% 0.2% 감소) ○ (향후대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형태(대면, 대면-비대면, 비대면) 다양화
5-2-2-②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한-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자체평가 미 실시 * (목표) 한-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자체평가 결과(등급) A/ (실적) 미 실시 ○ (사유)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위생협력사업 개최 취소 ○ (향후대책) '21년 한-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 개최 추진
5-3-1-①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불량식품 관련 회의 및 수사전문화교육 실시 미흡 * (목표) 불량식품 관련 회의개최 실적 16회 (실적) 12회(목표대비 75%) * (목표) 수사전문화 교육 실적 30회 (실적) 24회(목표대비 80%) ○ (사유)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취소 ○ (향후대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화상간담회 개최 및 온라인교육 확대 개편으로 탄력적 운영 추진

< 참고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미흡·지연 과제 >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p>①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농식품부) * '20년 시행계획 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제도 미도입 * (목표) '19년까지 동물복지 직불금제도 도입 / (실적) 미도입 ○ (사유) '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2.4조) 과다소요로 개별 직불제 도입 어려움 * 6개 직불제(쌀고정·변동, 발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통합·개편 ○ (향후대책) 대안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추진('20년 11억원 신규 반영) 하면서 직불제 도입도 지속 추진
<p>② GAP인증 농가수 2배로 확대(농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GAP인증 농가비율 확대 목표 달성 미흡 * (목표) '20년까지 전체농가 대비 GAP 인증농가 수 15.6% / (실적) 11.3% ○ (사유) 인증제의 양적 한계 도달 ('18) 86,789 → ('20) 114,000호 ○ (향후대책) 'GAP인증 내부감독제' 시행 등 인증관리의 질적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
<p>③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등 단계적 확대 (농식품부·식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관련법 개정 미흡 * (목표) '18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실적) 미개정 ○ (사유) 생산자단체 반대 등으로 법 개정 지연 → 20대국회 종료로 폐기 - 대안으로 축산농장 HACCP 안전관리 방안을 축산업 허가자 등 준수사항에 반영(「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9.12) ○ (향후대책) 축산물 HACCP인증 활성화'를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
<p>④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선 (식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이력추적관리 정보 표준화 도입 미흡 * (목표) '20년까지 이력추적정보가 도·소매의 유통·판매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물류단위에 표준화된 코드 적용 추진 / (실적) 미도입 ○ (사유) 물류단위 표준화코드 적용을 위한 연구결과, 표준화코드 도입으로 중간유통단계 이력추적 사각지대 문제점 해결이 어려움 - 대안으로 유통·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 연계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등록 의무화* 등 제도개선('20.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7월 개정, '20.6월 시행) ○ (향후대책) 통신판매, 물류업체 등 식품판매 중·대형업체가 매출액 규모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자 영업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 도소매 유통·판매까지 이력추적정보 연계가능(「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 추진('21~)

세부과제	사유 및 대책
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소) 현장검사소 100% 설치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농산물 현장검사소 100%(32개소) 설치 미흡 * (목표) ('17) 50%(16개소) → ('20) 100%(32개소) / (실적) ('20) 81.3%(26개소) ○ (사유) 일부 지자체 설치의지 낮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확보 어려움 ○ (향후대책) 기설치된 26개소 유통물량이 전체의 97.2% 차지 → 미설치 6개소 비용편익분석결과 인근검사소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설치 불필요
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확충(식약처) * '20년 시행계획 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급식관리 100% 달성 지연 * (목표) ('19) 75% → ('20) 100% / (실적) ('20) 90% ○ (사유) 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위한 법안개정 지연, 일부 지자체 예산 미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 지연 ○ (향후대책) 센터 설치·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급식소가 관리되도록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2.29) 및 시행('21.12.30)
⑦ 유통축산물 검사권한 명확화(복지부·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권한 명확화 지연 * (목표) '18년까지 보건환경연구법 개정 (실적) 미개정 ○ (사유) 보환연 업무에 유통축산물 검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보환연법 개정안이 발의('18.9) →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 (향후대책) 제5차 기본계획 과제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⑧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결과)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지연 * (목표) '18년까지 집단소송법 개정 / (실적) 미개정 ○ (사유) 식품사고에 따른 효율적 피해구제 도모를 위해 식품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미도입 * 개정법안 발의('18.9) → 20대 국회 심사지연으로 폐기 → 정부입법 재발의('20.9) ○ (향후대책) 제5차 기본계획 과제로 반영하여 지속 추진

Ⅱ. 2020년 과제별 추진실적 요약

① 과제 현황

구 분	과제	세부과제
총 괄	50	138
전략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0	18
1-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3	5
1-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3	8
1-3.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4	5
♣ 식약처 11, 해수부 3, 농식품부 2, 농진청 2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2	36
2-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6	22
2-2. 가공식품 제조 관리	3	8
2-3. 인증제도 개선	3	6
♣ 농식품부 18, 식약처 10, 해수부 4, 농진청 3, 환경부 1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12	34
3-1. 유통 관리체계 개선	5	13
3-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4	15
3-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3	6
♣ 식약처 23, 관세청 5, 농식품부 4, 해수부 1, 농진청 1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9	33
4-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2	14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활동	4	13
4-3.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3	6
♣ 식약처 19, 농식품부 6, 교육부 5, 복지부 2, 해수부 1		
전략 5.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17
5-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2	5
5-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2	5
5-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3	7
♣ 식약처 11, 농식품부 4, 법무부 1, 관세청 1		

② 과제별 추진결과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전략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①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③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1-1-②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1-1-③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		
	①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	식약처	이행완료
1-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	농진청	이행완료
1-2-②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	해수부	이행완료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①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농진청	이행완료
	②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확대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1-3.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1-3-①	유전자변형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1-3-②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		
	① 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1-3-3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개발		
①	환경오염·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등 대응체계 마련	식약처	이행완료
1-3-4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①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전략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2-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2-1-1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①	농경지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농업용수 모니터링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농식품부	이행완료
2-1-2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농식품부	미흡
③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법제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2-1-3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닭 진드기 방제기술 연구 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도축장 오염 방지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2-1-4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①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	해수부	이행완료
②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이행완료
2-1-5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①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해수부	이행완료
②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해수부	이행완료
2-1-6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부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③	HACCP 축산물 적용 확대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④	HACCP 수산물 적용 확대	해수부	이행완료

2-2. 가공식품 제조 관리

2-2-①	일반식품		
①	HACCP 적용식품 확대 및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2-2-②	건강기능식품		
①	제조기준 강화(GMP 적용 의무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기능성 검증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2-2-③	주류(술)		
①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②	주류업체 식품용수 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③	소규모업체 안전·품질 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2-3. 인증제도 개선

2-3-①	친환경인증 기준 강화		
①	인증체계 개선	농식품부	이행완료
2-3-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①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농식품부	이행완료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③	축산농장 HACCP 관리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전략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3-1. 유통 관리체계 개선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② 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③ 계란·닭·오리의 이력제 안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해수부	이행완료
3-1-2]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			
	①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3-1-3]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①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농식품부	이행완료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① 농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③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1-5]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	식약처	이행완료
3-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3-2-1] 수입 전(前) 관리			
	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해외제조업소 사전점검제 도입(신규)	식약처	미흡
	③ 수입위생평가 확대 및 전문화	식약처	미흡
	④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적용 추진(신규)	식약처	이행완료
3-2-2] 통관 단계 관리			
	① 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	식약처 관세청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보세구역 등 재고조사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③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3-2-3] 수입 후(後) 관리			
	① 거래내역 신고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②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③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① 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관세청	미흡 이행완료
	② 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	관세청	이행완료

3-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3-3-1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① 영업자 실증(實證) 및 자율심의 제도 정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품 등의 표시정보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식약처	이행완료
3-3-2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		
	① 민간 플랫폼 등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3-3-3	식품의 영양·위생 정보제공 확대		
	① 알레르기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지연
	③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민간제공 확대	농진청	이행완료

전략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4-1-1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② 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식약처	이행완료
	③ (학교) 나트륨·당류 저감화 실천	교육부	이행완료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식약처	지연
	②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지연
	③ (어린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④ (청소년) 학교 내 고카페인 판매금지 등 영양·안전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⑤ (청소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교육부	이행완료
	⑥ (성인)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	식약처	이행완료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⑦	(고령자) 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식약처	이행완료
⑧	(취약계층)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농식품부	이행완료
⑨	(취약계층) 우유급식지원	농식품부	이행완료
⑩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부	이행완료
⑪	(환자) 환자용 식품의 맞춤형 기준 마련(신규)	식약처	이행완료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식약처	이행완료
②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①	지하수·생산해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	해수부	이행완료
③	범부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④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⑤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	식약처	이행완료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①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	교육부	이행완료
④	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교육부	이행완료
4-2-④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①	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	식약처	이행완료

4-3.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①	(학생)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교육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고령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4-3-②	지역 먹거리 통합관리		

과 제 명		추진부처	추진상황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농식품부	이행완료
4-3-③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① GAP 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농식품부	이행완료

전략 5.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①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식약처	이행완료
	③ 지자체 역량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5-1-②	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	식약처	이행완료

5-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① 전문가·소비자 등 참여 확대	농식품부	이행완료
	② 국민청원 창구 등 운영	식약처	이행완료
5-2-②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① 국제식품 기준·규격 설정 대응	농식품부 식약처	이행완료 이행완료
	②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식약처	미흡

5-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① 식품범죄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	미흡
	② 감시기법의 과학화	식약처	이행완료
5-3-②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① 전통시장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②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식약처	이행완료
	③ 취약계층 보호	식약처	이행완료
	④ 수입식품 관리 강화	관세청	이행완료
5-3-③	농축수산물 생산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① 축산농가 살충제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	농식품부	이행완료

Ⅲ. 분야별 추진 실적

1 [기준 관리]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①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장미란·김용무 연구관 T.043-719-2422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김은정 연구관 T.043-719-3853
 첨가물기준과 선남규 연구관 T.043-719-2502)

1. 과제내용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과학적으로 재평가
 - 오염물질, 잔류물질(농약), 미생물(식중독균),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오염물질(아플라톡신 3종*) 기준·규격 재평가(1~12월) *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₁, 아플라톡신 M₁ ○ 농약(40종) 사용방법, 잔류량, 노출량 등 재평가(1~10월), 재평가 결과 부처 협의(10월),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플라톡신 3종 노출량 평가(6.30), 기준·규격 재평가(7~11월) 및 결과 심의(12.30) ○ 잔류물질(농약 46종)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디플루벤주론 등 46종)의 사용방법, 잔류량, 노출량 등 재평가(4~10월) - 재평가 결과 농촌진흥청 협의(4회 2~10월)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4, 6, 9, 12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등 10개 식품유형*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성평가 결과 검토(8월), 개정안 마련(9월) * 김치숙, 김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발효식초, 희석초산, 카레분, 카레 ○ 식품원료(500품목) 기준·규격 재평가(12월)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7월) - 품목별 성분규격 적절성 검토, 식품첨가물 함량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3~10월) - 기준·규격 개정여부 검토 및 개정(안) 마련(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등 10개 유형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위해성평가 수행 및 규격 재평가(6월) - 개정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회의(8월) - 규격 개선(안) 행정예고(9.28) ○ 식품원료 기준·규격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원료 700품목에 대한 국내·외 사용기준, 안전성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재평가(11월)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유화제 등 20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7월) - 성분규격 검토 완료, 모니터링(323건) 및 섭취량 평가(10월) - 성분규격(6품목) 및 사용기준(1품목) 개정(안) 마련(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해오염물질 ¹⁾	15	15
○ 잔류물질(농약) ²⁾	40	46
○ 저위해성 식중독균 ³⁾	10	10
○ 식품원료 ⁴⁾	500	700
○ 식품첨가물 ⁵⁾	20	20

1) 재평가 건수(누적)(%) : (재평가 유해오염물질 수/재평가 대상* 유해오염물질 수)×100

*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4)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재평가 대상

2)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행정예고)

3) 저위해성 식중독균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4) 식품원료 기준·규격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건수(재평가 결과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기후·환경 변화, 식습관 등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등의 위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 정비 및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 3종(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₁, 아플라톡신 M₁) 기준·규격 재평가
 - 국내 등록 농약의 사용방법, 잔류량, 노출량 등을 재평가하여 디플루벤주론 등 4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식품의 제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미생물 오염도 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규격 재평가 및 정량규격 도입
 - 식물성 원료 700품목에 대한 섭취근거, 인체영향자료 및 독성시험 자료 평가를 통한 안전성 재평가 및 기준 개선안 도출
 -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재평가를 통한 기준 및 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4. 향후 추진계획

- 기후, 환경오염, 섭취패턴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지속 추진('20~)

예)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해 기준·규격 재평가가 필요한 유해오염물질 추가 등

2020년(19종)	2021년(21종)
중금속(8종), 곰팡이독소(7종), 벤조피렌, 다이옥신, PCBs, 3-MCPD	중금속(8종), 곰팡이독소(7종), 벤조피렌, 다이옥신, PCBs, 3-MCPD, 3-MCPDE, GE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②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김동규 연구관, T.043-719-2504)

1. 과제내용

-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적정성 재평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항목 모니터링(2~10월) 및 안전성 평가(11월) * 대상재질 : PE 및 PP, PET 등 9품목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 및 PP 등 9개 재질에 대한 기준·규격 항목 모니터링 조사 (10월, 기준·규격에 적합) 및 안전성 평가(11월, 안전한 수준) 완료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12월) - 안전성 평가 및 국내·외 기준규격 등 비교 결과, 현행 기준·규격 유지 타당(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기구·용기·포장 재평가 건수	9	9

3. 성과 및 한계

- 기구·용기·포장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의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기준·규격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 기준·규격 항목(이행물질)의 인체노출량이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적정한지 평가
 - 기준·규격의 유지, 강화,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 가정간편식 등 포장음식의 소비 증가에 따라 기구·용기·포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준·규격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에 기여

4. 향후 추진계획

- 기구·용기·포장의 재질별 기준·규격을 중심으로 재평가 지속 추진
 -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항목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재평가 실시('21~'24년)
 - * '21년 대상 재질(8개) : 유리제·도자기제·법랑·용기류, 불소수지, 금속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비닐알코올, 아크릴수지, 이오노머수지, 에폭시 수지

1-1-①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③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이화정 연구관 T.043-719-4253
미생물과 김미경·황진희 연구관 T.043-719-4304·4303
첨가물포장과 남혜선 연구관 T.043-719-43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윤태형 연구관 T.043-719-4402)

1. 과제내용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법 마련 및 개선

- 유해오염물질, 미생물(식중독균),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 식품 등에 적용성 향상 및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중 유해금속(크롬·니켈·바륨·안티몬), POPs(헥사클로로부타디엔), 자연독소(쿠쿠르비타신·아미그달린·리나마린·아자스필산) 시험법 9종 확립(12월) ○ 식품공전 중 곰팡이독소 동시 분석법 1종 개선(12월) ○ 공인미생물 시험법 및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선(12월)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 분석법 개발·개선 - 보존료·발색제 시험법 개선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수산물 중 유해금속(크롬·니켈·바륨·안티몬) 시험법 확립(9월) ○ POPs(헥사클로로부타디엔) 시험법(GCMS), 수산물(이매패류) 중 아자스필산독(3종) 시험법 마련 및 위해평가(12월) ○ 식품 중 식물독소 3종 시험법 확립(9월) ○ 식품공전 중 곰팡이독소 동시 분석법 1종 시험법 개정(4월) *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 공인미생물 시험법 3종 및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12종 개선 * (공인시험법)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추진계획	추진실적
<p>착색료·유화제·소포제 시험법 개발(12월, 총 5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형 기구·용기·포장 중 항균제 분석법 1종 개발(11월) ○ 식품 등의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시험법 개선(12월) - 복잡·다양한 식품 매트릭스 특성을 고려한 미량영양성분(비타민K₁, 판토텐산) 시험법 2종 개선 -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 및 시안화합물 기기분석법 2종 개발 	<p>중균배양법 및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진균수 시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조사시험법) 비브리오 콜레라 O1, O139 PCR 시험법 등 12종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법 개발 - 식품 중 보존료 및 발색제 시험법 개선 식품 중 착색료, 유화제 및 소포제 시험법 개발 완료(12월) - 기능형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벤조산 등 항균제) 분석법 개발 완료(11월)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시험법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선 및 개발(12월) -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K₁, 판토텐산 시험법 개선 -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중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 매실추출물 중 시안화합물 기기분석법 개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시험법 개발 건수	30건	34건

* 유해물질 및 미생물 시험법 24건,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 시험법 6건,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선 및 개발 4건

3. 성과 및 한계

□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및 식품공전 개정

- 유해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식물독소 등 유해오염물질 9건 시험법 확립
- 식품공전 중 곰팡이독소 동시분석법 1종 시험법 개정 완료
- 공인 미생물 시험법,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등 15건 개선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시험법 개발
 - 식품 중 보존료 및 발색제 시험법 개선, 식품 중 착색료, 유화제 및 소포제 시험법 개발
 - 기능형 기구·용기·포장 중 이행물질(벤조산 등 항균제) 분석법 개발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최신 과학적 시험법 마련으로 사전 안전관리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다양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매트릭스에 적용 가능한 미량영양 성분 시험법 2건 개선
 -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표성분 등 시험법 2건 개발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마련 및 식품공전 개정 지속('21년)
 - 가공식품 중 유해금속(크롬·니켈·바륨·안티몬) 시험법 확립(9월)
 - 패류가공품 중 아자스필산독 시험법 마련 및 실태조사(11월)
 - 캄필로박터 등 시험법 15건 지속 개발·개선(11월)

1-1-②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T.043-719-3853)

1. 과제내용

- 수산물의 중금속 노출 저감화를 위한 중금속 기준 강화
 - 환경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중금속 인체 노출량을 반영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이 높은 중금속 기준 강화
 - * 강화 : 오징어(카드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강화 추진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고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강화 추진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고시 완료(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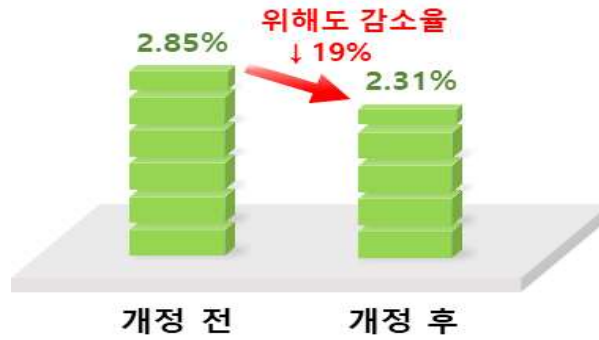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중금속 기준 개정(전)	1	1

* 수산물 품목별 중금속 기준 강화(신설) 건수(고시)

3. 성과 및 한계

-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강화로 인한 오징어 섭취에 의한 노출량 감소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2.0 → 1.5 mg/kg) 고시 완료(4.14)



오징어 카드뮴 기준 강화에 따른 위해도 변화

4. 향후 추진계획

- 기후, 환경오염, 섭취패턴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중금속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오염도 조사 추진('21)

1-1-③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위해성 평가
①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 평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4)

1. 과제내용

□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물질에 대한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제품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의 통합위해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스페놀류 등 총 14종의 통합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스페놀류(3종), 프탈레이트류(7종), 파라벤류(4종) - 물질별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연구 및 평가 추진(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5종), 다이옥신류(28종) 등 33종 통합위해성평가 완료 * 과불화화합물(2종), 브롬화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8종), 노닐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13종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연구 신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제품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의 통합위해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스페놀류 등 14종 통합위해성평가 보고서 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4.9) - 중금속(5종), 다이옥신류(28종) 등 33종 통합위해성평가 완료(12월) - 과불화화합물, 브롬화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노닐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내 인체 노출안전기준 평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10종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내 인체 노출안전기준 평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불화화합물 4종,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오크라톡신A, 아플라톡신B1, 글리시딜에스테르, 코마포스 등 10종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완료(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화학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평가건수(누계)*	74	74
○ 통합위해성평가 완료 건수	33	33

* 재평가 건수 포함 누계

3. 성과 및 한계

□ 다양한 제품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 중금속 등 33종 통합위해성평가 완료

* 중금속(5종), 다이옥신류(28종)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과학적 위해평가 결과 해석 필요

* 통합위해성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홍보

□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관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부처간 지속적 협의 필요

- 관계부처와 저감화 방안에 대한 부처협의회 개최(4회)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 물질별 통합위해성평가 지속 추진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브롬화화합물, 노닐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모니터링 자료 및 추가정보 확보를 통한 통합위해성평가 수행

1-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정착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김은정 연구관 T.043-719-3854)

1. 과제내용

- 농산물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잠정기준의 정식기준 전환 및 신규 등록 농약의 기준 설정 등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에 대해서 정식기준으로 전환(4, 7, 12월) ○ 국내 등록 및 수입식품의 잔류 허용기준 지속 설정(4, 7, 12월) ○ PLS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2, 3, 4월) - 외국대사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3, 9월) - SNS, 관련 기관, 회사 등 홈페이지에 PLS 관련 홍보(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기준으로 설정된 농약(531건)을 정식기준으로 전환 완료(4, 6, 9, 12월) ○ 국내 등록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농약(936건)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완료(4, 6, 9, 12월) ○ PLS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4회, 2, 6, 7, 11월) - 외국대사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5회, 5, 7, 11, 12월) - SNS, 관련 기관, 회사 등 홈페이지에 PLS 관련 홍보, KTX, 지하철 역사 광고, 옥외광고 등(연중)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140	153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건수(행정예고)

3. 성과 및 한계

□ 잠정기준을 과학적 시험자료에 근거한 정식 기준화

○ PLS 도입이전 유사농산물의 기준 등을 차용하여 잠정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대해 과학적 근거자료에 따라 531건 정식기준화(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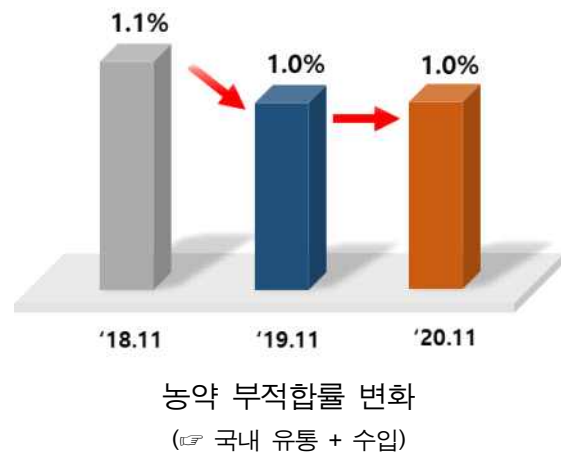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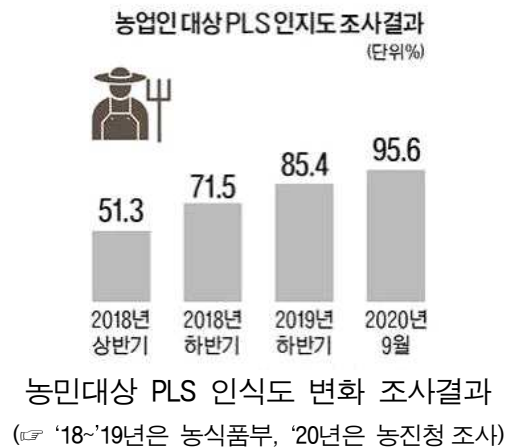
* 국내 470건, 수입 61건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대한 신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 신규·직권 등록 농약 및 수입식품 기준신청 농약 936건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4~12월)

* (국내) 신규·직권 등록 농약 844건, (수입) 외국의 합법적 농약 92건

□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농민들의 농약 안전사용 인식개선으로 농약 사용량 및 부적합을 감소



4. 향후 추진계획

□ '18년 설정된 잠정기준(3,500여건)에 대해 과학적 시험자료에 근거한 정식 기준화(지속)

□ PLS 제도 완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지속)

1-2-①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②	소면적 재배 농산물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이경원 사무관 T. 063-238-0824
농자재산업과 이선영 사무관 T. 063-238-0833)

1. 과제내용

- '19. 1. 1일부터 전면시행된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 사업 추진
 - 잠정(임시) 등록농약(약 5천여개)을 '21년까지 직권등록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필요한 농약의 추가등록 추진
 - 약효·약해, 잔류성 시험을 통한 농약직권등록 및 기준설정
 - * 잠정등록(5,597개) 전환계획: ('19) 1,075개 → ('20) 2,200 → ('21) 2,322
- 재등록 농약 및 국제 위해성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직권등록 확대(2,853개, ~'21.4월) - 직권시험(3~12월): 1,720시험(약효 약해 400, 잔류 1,320시험) - 직권등록(~'21.4월): 2,853개 * 식약처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잔류 기준 조기설정(수시) ○ 재등록 농약 안전성재평가: 110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직권등록(1,616개 완료, '20.12월) - 직권시험(3~12월): 1,720시험 완료 (약효약해 400, 잔류 1,320시험) * 과제선정(1월), 시험설계(~3월), 시험 수행(~12월), 중간진도관리(7~8월), 결과평가(11월) - 직권등록: 1,616개 완료(12월까지), 1,195개 등록검토 중('20.4월까지), * 농약전문위원회(5회), 잔류농약 공동 협의체(4회) ○ 재등록 농약 안전성재평가: 244품목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약 직권등록(건수)	2,853	1,616*
○ 재등록농약의 안전성평가(건수)	110	244

* 농약 직권등록은 '20.12월까지 시험완료 후 '21.4월까지 2,853개 등록 목표로 추진중임

* 농약직권등록 건수: 해당년도 농약직권등록사업을 통한 농약직권등록 건수

* 재등록농약의 안전성평가 건수: 해당년도 10년 경과 등록농약의 안전성 평가 건수

3. 성과 및 한계

□ 당초 계획대로 '20.12월까지 농약 1,720시험 완료, 1,616개 농약 직권등록했으며, 1,195개 농약에 대하여 평가 중임으로 '21.4월까지 목표한 2,853개 농약 직권등록 예상

○ 농약직권등록 사업을 통하여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약 등록(직권+회사신청)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

* 등록농약(누계): ('17) 16,349개 → ('18) 23,367 → ('19) 26,368 → ('20.11) 29,344

* 잔류허용기준(누계): ('17) 7,910건 → ('18) 12,735 → ('19) 13,203 → ('20.11) 13,783

○ 농약등록 이외에도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

* (동시방제) 여러 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등록 확대: 40품목→50

* (사용기준) 복숭아: 수확 7~14일전 → 수확 3일전, 감귤(만코제브): 4회 → 7회 처리

* (후작물잔류) 프로사이미돈, 플루린코나졸 등 농약 20종(토양 중 반감기 60일이상)

□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작물의 재배,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일부 작물의 등록농약이 여전히 부족한 등 현장애로 지속 해소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당초 계획대로 '20년 시험결과를 검토 후 직권등록 완료(~'21.4)

○ 시험결과 검토(1월), 농약전문위원회(2월), 식약처 협의(3월), 직권등록(4월)

□ '21년 농약직권등록 사업 추진 * 공모·선정(12월), 협약착수·설계심의('21.1)

○ 소면적작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물, 병해충에 대한 농약등록

1-2-2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①	농장단위 전수검사 및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 병 용 사무관, T. 044-201-2975)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남궁종환 사무관, T. 044-201-2978)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 화 태 사무관, T. 044-201-2561)

1. 과제내용

-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장 단위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지속하고, 축산물 PL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대책 강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계란, 산란노계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1분기) ○ 계란, 산란노계 전수검사 추진(1~12월) * 계란은 연간 1회 이상 검사, 산란노계는 출하시 검사 ○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대비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조사 등 추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20.2.4) ○ 산란계 농장의 계란, 산란노계 전수검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산란계 농장(1,288호)의 계란에 대한 검사완료, 부적합 1호* * (부적합 1호) 11.27 경남 고성 - 도축예정 산란노계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전수 검사(1,616건) 완료 ○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방안 마련(부처합동 보도자료 배포, '20.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 지속 * 휴약기간 재설정을 위한 대상 가축의 잔류성 시험 수행 추진(24품목) - 동물용의약품 품목확대를 위한 농가 사용실태 조사('20.5~12, 11천호대상) - 축산물 PLS 설명회 개최(3회, 식약처 합동)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산란계 농장의 계란검사 건수	1,239	1,288

3. 성과 및 한계

□ 2020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

□ 2020년 살충제 계란검사 추진 결과, '17.8월 살충제(피프로닐 등) 계란 사건 발생 이후, 산란계 농가 대상 계란검사와 지도·홍보 등을 통해 검출농가 지속 감소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생산 및 유통단계) 감소

* ('17) 78호 → ('18) 9호 → ('19) 2호 → ('20) 1호

□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방안 마련(부처합동, 12.23)

○ (1단계) 한육우·젖소(乳)·돼지·닭·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2단계) 농약은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4년 이후 적용 추진

* 농약성분 실태조사, 소수동물용 동물약품 확충, 기준확대 등 준비를 거쳐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20년 12월)

□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21년에도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지속 실시

□ 축산물 PLS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정비·확충 추진

○ 사업예산 추가확보 및 시험기관 확대를 통해 '23년까지 축종 확대 필요 품목의 허가사항 및 기허가제품 안전사용기준 등 정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정지윤 연구관 T.043-719-3852)

1. 과제내용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살충제) 오·남용 방지 및 수입 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 합법적 동물용의약품 및 비의도적 오염가능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관리
 - * 단, 성장호르몬,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3회)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관리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기준 면제물질 목록 신설(6월) - 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강화(9월)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설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4회 개최(3.31, 6.30, 9.28, 12.22)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 기준 설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의약품 기준 면제물질 목록 신설 고시 완료(4.14) - 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강화 (0.03→0.01 mg/kg) 고시 완료(5.27) -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고시 완료(10.16) * 동물용의약품 7종, 농약성분 1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횟수)	3	4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행정예고(횟수)	1	3

3. 성과 및 한계

- 부처협업*을 통한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추진
 - 단계별 도입방안(동물용의약품→농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제도정비
 -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PLS 우선 도입을 협의(행정예고 12.23, 시행 '24.1.1)
-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범부처 협의체 4회 개최(3.31, 6.30, 9.28, 12.22)

-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잔류물질 기준 확대
 -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축·수산물에 잔류하지 않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기준 면제물질목록 신설(177종, 고시 4.14)
 -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0.03 →0.01 mg/kg으로 강화(고시, 5.27)
 - 동물용의약품(린코마이신 등 7종) 및 농약(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 개정(고시, 10.16)

4. 향후 추진계획

- 부처 협업을 통한 축·수산물 잔류물질 PLS 도입 추진(지속)
 -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확대 및 동시시험법 개발
 -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개최

1-2-②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손외학 사무관, T.044-200-5617)

1. 과제내용

- 패류에 대한 농약류 및 다이옥신 조사계획 수립·추진('19.12~)
 - 패류 전체 생산해역 71개 해역에 대하여 농약류* 조사 실시, 다이옥신은 예산을 확보하여 '21년부터 조사 실시
 - * 유기염소계 농약 14종 : HCH 3종, Aldrin, Dieldrin,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DDE 2종, DDD 2종, DDT 2종, Endrin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 추진계획 마련('19.12월)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에 대한 농약류 조사('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9.12.24)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 전체 생산해역 71개 해역에 대한 농약류(14종) 조사 실시 * 대상품종: 이매패류, 피낭류 및 복족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100	100

* 측정산식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실시 건수/ 위생조사 목표 건수(142건)]×10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패류 생산해역 농약류 조사를 통한 패류 안전성 강화 및 패류 수출상대국 안전성 규제에 적극 대응
 - 패류 생산해역 71개(지정해역 7, 일반해역 64)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유기염소계 농약 14종 조사 실시
- (한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일부는 국내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검토 단계에 있어 안전관리에 조사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모니터링 실시
 - 패류 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해 다이옥신 조사 추진
- 식약처 기준규격 설정 시 그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①	판매기록 관리대상 확대

(담당자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소재성 농업사무관 T. 063-238-0835)

1. 과제내용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농약 유통 관리 강화
 -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유도를 위한 농약 판매·구매 정보 전산화(~'20)
 -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활용('19), 예산 확보 후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구축('20)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유통이력관리 서비스 개발 ○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서비스 개발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20.4~12, 2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이력 및 처방관리, 미등록 농약 판매제한, 부정불량 농약 회수·폐기, 안전사용 등 정보관리 및 서비스 개발 ○ 시스템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판매기록 현장점검 및 계도 (1,690업체), 사용자 매뉴얼(6천부), 구매자 안내 홍보물(128만장) 배포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및 운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율(%)	85	99.5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율: (가입 판매업체수/전체 판매업체수)*100

3. 성과 및 한계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정착을 통한 농약 안전관리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20.4~12, 29억원)

- * 착수(4월) → 설계·분석(6월) → 중간보고(10월) → 시험운영(11~12월) → 최종보고 및 서비스 개시(12월)
- * 시스템 고도화에 차질 없도록 TF운영(3회): 농업인, 농약업체, 농과원 등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내용 >

- * (정보제공) 농업인 구매내역, 저항성 등을 고려한 농약 추천 및 처방 서비스 개발
- * (유통관리) 미등록 농약 판매제한, 부정·불량 농약 회수·폐기 서비스 개발
- * (안전사용)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정보관리 및 제공 서비스 개발
- * (시스템통합) 농약등록 및 판매관리인교육 시스템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 (민원편의) 농약 등록신청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구매자, 판매관리인 등) 불편사항 개선

- 농약의 포장 단위별 바코드 관리를 통한 농약 판매 기록 편의성 제고

- * 제조·수입 80 개소, 3,402 품목 4,786 포장단위별 바코드 생성 및 등록
- * 기준: 「농약등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제정('20.8.11.시행)

- 농약 구매자(농업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전자화 등

○ 시스템 정착을 위한 판매업체 점검·제도 및 농업인 대상 홍보

- 농약 판매기록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현장점검, 전화, 공문발송 등)

- * 현장점검(1,690업체): 정상기록·제공(1,227), 미기록·미제공(359), 기타(104)

- 판매업체의 정보기록, 개인정보 사용·활용·제공범위 등 홍보물 배포

- * 시스템 사용방법 매뉴얼(6천부, 3월), 구매자 안내 홍보물(128만장, 4월, 11월)

※ 가입: 제조·수입 112개소(100%), 판매 5,437개소(전체 5,463업체 중 99.5%)

※ 판매기록: 구매자(1,613천명), 구매건수(15,596천건), 구매량(68,825천개)

4. 향후 추진계획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21, 18억원)

- 농약 처리량 자동계산, 농약 사용기록 관리기능, 모바일을 활용한 농약 판매이력관리, 정부 챗봇 활용 민원상담 등 기능 개선

□ 농업인대상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가입 및 활용 리플렛 배부('21.4~5월)

1-2-3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②	수의사 처방 항생제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화태사무관, T.044-201-2561)

1. 과제내용

-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항생제 내성 방지를 위한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지정 품목(성분) 확대
 -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20종 → 50종 이상, ~20년)
 -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수의사 처방 항생제 확대 - 20종 → 50종 이상, ~ ‘20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 완료 - (종전 20종 →(‘17.11월 25종 →(‘18.5월 32종 →(‘20.11월 79종(국내 허가 전 성분 확대)* * 축산농가, 수의사, 약사, 동물약품 제조·유통 업계 사전준비지도 홍보 기간 필요로 2년후 시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 확대	50종 이상	79종

3. 성과 및 한계

-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을 전 성분으로 확대
 - (종전, '13.8월) 20종 → ('18.5월) 32종 → ('20.11월) 79종(국내 허가 전 성분)
 -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른 항생제 사용으로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 사용량 감소 및 항생제 내성 감소 효과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동물용 항생제 처방제 본격 시행('22.11월) 이전 농가·관련업계
지도·홍보 및 사전 준비
 - 축산농가 및 수의사 대상 항생제 내성방지 및 신규 처방대상
항생제 지도·홍보(항생제 안전사용 메뉴얼 배포 등)
 -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에 대한 신규 처방대상품목 안내
및 표시사항 변경 등 사전 준비 안내 등

1-2-③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③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소정화 사무관, T.044-200-5624)

1. 과제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
 - 수산용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 실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기준 설정 추진
 - 어종별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연구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
 - 수산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양식 수산물의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수산용의약품 사용실태 조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수산용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실시(1~12월) ○ 2021년도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품목 공고(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 후 4년 도과 약품 재심사 및 제네릭약품에 대한 재평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항생·항균제 5품목(건) * (재평가) 항생·항균제 81품목(건) ○ '21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 심사 자료 최종 접수 완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수과원 고시) 개정(10월) ○ 어종별 맞춤형 수산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위한 과제 수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개정(안) 검토 중('21.5. 완료 예정) ○ 어류에서 신규 구충제2종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안) 설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성분: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제 / 페반텔, 펜벤다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실사 및 수거·검정 실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실사(20개소) 및 약품 수거·검정(9개시도, 119건)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발간·배포(11월)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2개, 16개 시·도, 2,290개소) ○ 2020 수산용의약품 제품요약 해설집 발간·보급(3,000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용의약품 수거검정횟수(건)	105	119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재평가(건)	66	81
○ 수산용의약품 사용 양식장 지도·점검(건)	연2회	연2회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법 홍보(건)	연1회	연1회

* 지표 산출 근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성과 및 한계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 약품의 유효성·안전성·잔류성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재심사(품목허가 후 4년 도과) 및 재평가(재심사 후 3년 이상 도과) 완료

* (재심사) 항생·항균제 5품목 / (재평가) 항생·항균제 81품목

□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연구로 신규약품 허가 기반조성

- 가축용 구충제(2종)의 어류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연구 및 업계 기술이전
 - 임상시험을 위한 전(前)임상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신규품목허가 취득기간 단축

* 구충제(페반텔, 펜벤다졸)의 조피블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잔류성 기술이전 예정('21.4.)

□ (한계) 양식현장의 미승인의약품 등 약품 오·남용 사고 발생이 속출하고 있으나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단속 등에 관한 전문인력 부족

- 수산용의약품 사용 지도·단속 등 인력 확보 시급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용의약품 사용 지도·단속 등 인력 충원 요구

1-3 기술발전 · 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1-3-①	유전자변형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심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주인선 연구관 T.043-719-2359)

1. 과제내용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확보를 통한 표시제도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확인 등 사전안전관리 강화(연중)	○ 승인 후 10년 마다 재심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7건, 3월~11월) 및 유전자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조건부 승인 등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행정예고, '20.7.27~9.25)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확보를 통한 표시제도 지원	○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마련(6품목, 10월) 및 개선(7품목, 12월)
○ 유전자변형동물 안전성 심사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등을 통한 심사 기준안 마련(12월)	○ 유전자변형동물 안전성 심사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심사 기준안에 대한 해설서(안) 마련(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건수	7	7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최초 안전성 심사를 받은 이후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재심사(10년 주기) 건수

3. 성과 및 한계

승인 후 10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 재확인(7품목, 3월~11월)

- * 유전자변형 옥수수 GA21(3월) 및 MIR162(10월), 유전자변형 콩 GTS40-3-2(3월) 및 DP-305423-1(10월),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8월) 및 말토게닉아밀라아제(11월), 유전자변형 면화 GHB614(10월)

신규 안전성 심사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시험법 지속 확보

- * 유전자변형 콩 GMB151, 옥수수 MON87429, DP-202216-6, 카놀라 NS-B50027-4, 미생물 BD002 및 DS00002(10월)

4. 향후 추진계획

승인 후 10년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재심사 지속('21년)

- * 유전자변형 콩 A5547-127 등 4품목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개발 및 개선 지속('21년)

- *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95379 등 4품목

1-3-①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강화
②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김미자 사무관 T.043-719-21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주인선 연구관 T.043-719-2352)

1. 과제내용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 검토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개선 검토
-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온라인 소통강화를 통한 GMO 인식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월~) ○ 협의회 권고안을 토대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 추진(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 주도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5회, 1~12월) * 총 15명 : 식약처(1명),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7명), 산업계(7명) ○ 'Non-GMO 표시기준*'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12월) *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블로거 등 소통채널을 활용한 신소재식품 정보 확산(3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식품 서포터즈' 구성운영을 통한 SNS 정보 제공(60회, 3월~11월) ○ 식품안전나라 및 홈페이지를 통한 GMO 정보 제공(1회,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GMO 바로알기' 교육(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책자 등을 활용한 대국민 'GMO 바로알기' 교육(59회, 연중)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MO 교육·정보제공 횟수	120	120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GMO 교육·정보제공을 위해 SNS, 홈페이지, 교육 책자 등을 활용한 횟수

3. 성과 및 한계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0.1월~)
 - 정부 주도의 실무협의회 운영 결과, 'Non-GMO 표시기준'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에 한계가 있어, SNS, 홈페이지, 교육 책자 등을 활용한 비대면교육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지속 운영
- 대상 맞춤형 『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 교육 및 정보제공 지속(21년)

1-3-2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
①	유전자 가위기술 및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장미란 연구관, T.043-719-242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한정아 연구관 T.043-719-2352)

1. 과제내용

- 세포배양고기, 유전자가위기술 등 신기술 이용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원료 안전관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단백식품 전문가 협의체 개최(5월) - 배양육 등 배양세포단백식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유전자가위기술 이용식품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LMO법 개정(안)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계부처 논의(연중) ○ 나노기술 이용식품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2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원료 안전관리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및 간담회 개최(7월, 11월) - 배양육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12월) ○ 유전자가위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관련 LMO법 개정(안) 마련, 하위법령 등 논의(7회, 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주관), 과기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 나노기술 이용식품의 실태조사(2~11월) 및 나노기술 이용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나노기술 이용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	1	1

* 신기술 이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 마련건수

3. 성과 및 한계

□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원료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대체 단백질식품 전문가 협의체 및 간담회 개최(7.29, 11.5)
 - 세포배양 대체 단백질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리방안 논의
- 배양육(가축 유래 배양육 중심)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12.30)
 - 배양육 특성, 안전성 등 일반 평가 원칙 및 평가 항목 등

□ 유전자가위기술 등 바이오 신기술 규제방안 논의(7회, 1~11월)

- 유럽 등 국제 규제 동향 조사 및 공유
- 유전자가위기술 이용 산물의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안 마련 및 하위법령 등 논의

□ 나노기술 이용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12월)

- 나노기술 이용식품 실태조사(2~11월)* 및 나노기술 이용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안) 마련(12월)
 - * 복합분말 8종, 액상 6종, 당류 3종, 단백질류 13종, 지방류 24종(총 54종)
- 국외 나노기술 이용식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규제 현황 파악

4. 향후 추진계획

- 배양육 등 바이오식품원료 안전관리 기반 마련
 - 개발 선도국가 연구·개발 현황 및 안전 관리 현황조사('21)
 - 배양육 안전성 평가 세부지침(안) 마련('21~)
- 유전자가위기술 이용 식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지속('21년)
- 나노기술 이용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지속('21년)
 - 국외 나노기술 이용식품 규제 현황 자료집 발간('21년)

1-3-③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개발
①	환경오염·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등 대응체계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 T.043-719-322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김미경 연구관 T.043-719-4304
 식품위해평가과 김승환 연구관 T.043-719-4503)

1. 과제내용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비브리�균 선제적 안전관리
 - 관계부처 해양환경인자*를 반영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발생 예상 지역 집중 관리 및 예방 홍보활동 실시
 - * 해수 온도, 해류교환율 및 검출이력 등을 토대로,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예보
 -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의 예보지수 경고(40~85) 및 위험(86이상) 지역
- 미생물 생육예측모델 개발로 기후변화 대비 사전예방관리강화
 - 기후변화에 따라 위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미생물*에 대한 생육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 병원성 비브리오팀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 ** 온도 등 환경인자 및 식품특성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대비, 병원체 등 위해요인 대응체계 마련
 -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파악 등 기초자료 확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균 안전관리(6~10월)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균 안전관리(6~10월) - 식중독차량을 이용한 수족관물

<p>지역 횃감용 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홍보</p>	<p>현장검사 실시(552건)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비브리오균 등 검사(1,095건) - 수산물 취급시설 지도·점검(1,352개소) - 보도자료·기고문 배포 3회, 언론사 동행취재 1회(KNN, 부산청),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물 배포, 식중독신속차량 이용 홍보화면 송출</p>
<p>○ 미생물 생육예측모델 10건 개발(12월)</p>	<p>○ 미생물 생육예측모델 14건 개발(6~12월) - 신선편의 샐러드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생육 예측모델 4건(6월) - 생굴, 넙치, 전어, 우렁쉥이, 산낙지, 간장게장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 생육 예측모델 6건(9월) - 절임식품·김치류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생육 예측모델 4건(12월)</p>
<p>○ 수산물 또는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품목별 섭취량에 기반한 노출량 평가</p>	<p>○ 소금류, 장류, 젓갈류 등 14종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 및 오염도 조사 - 해당 식품 섭취에 따른 1인당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 추정</p>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비브리오균 검사건수*	1,250건	1,647건
○ 미생물 생육 예측모델 개발 건수	10건	14건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대상 건수**	10종	14종

* 비브리오균 검사건수 측정방법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된 수거검사 건수

**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 식품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식중독 발생 위험지역 집중관리로 비브리오균 선제적 안전관리
 - 비브리오 발생 가능성 예측을 통해 하절기 비브리오 발생 위험 지역의 횃집, 항·포구 수산물 취급시설에 대해 집중관리, 식중독 검사차량을 활용한 현장검사로 신속검사 및 대응 실시
 - 최근 기후변화로 비브리오패혈증균(법정 3균 감염병)의 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신선편의샐러드, 생굴 등 바로 먹는 식품에서 위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세균에 대한 생육예측모델개발로 사전예방관리 강화
- 수산물 또는 천일염 주원료 사용 식품의 미세플라스틱 함량 조사
 - 소금류, 장류, 젓갈류 등 총 14종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확립 및 모니터링(2~11월)
 - 국민건강영양조사 섭취량 등을 고려한 미세플라스틱 노출량 추정(11월)

4. 향후 추진계획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안전관리 강화(지속)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측 지점별 예측수식 리모델링
 - 환경인자 제공기관의 관측 지점 변경사항*, 해역별 비브리오균 실제 검출 이력** 시스템에 반영
 - * 해수부, 기상청 등에서 Open-API로 제공되는 지점별 수온자료 등
 - ** 질병관리본부의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 자료
-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지속)
 -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보고된 식품 등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평가 지속 수행

1-3-4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①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유흥식 연구관 T.051-720-2630)

1. 과제내용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관리방안 연구(연중)
 -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의 모니터링
 - 전국 연안 패류생산 해역(71개소) 패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 해조류 중 중금속 제거 기술을 이용한 현장 적용시험
- 패류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인공정화 조건 구명 및 매뉴얼 마련
 - 패류 품종별(피조개, 서해안 굴) 대장균 등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최적 정화조건(유수, 순환, 유량, 적재량, 수온 등) 구명(연중)
 - 패류 품종별 인공정화 매뉴얼 마련('20.12)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시구아톡신)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실시
 - 제주도 연안 수산물(어류)에 대한 시구아톡신 모니터링 실시(연중)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저감화 및 관리방안 연구(연중) ○ 패류 중의 유해세균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연중) 및 인공정화 매뉴얼 마련('20.12)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256건) 및 해조류 중금속 제거 기술을 이용한 현장 적용시험 실시 ○ 패류(2품종) 중 유해세균 인공정화 최적조건 구명(2건) 및 패류 인공정화 매뉴얼(1건) 마련('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개) 대장균 인공정화 조건 구명 - (서해안 굴) 대장균 및 장염비브리오균 인공정화 조건 구명 ○ 제주도 연안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 (26건) 실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중금속 관리방안 연구(건수)	256	256
○ 패류 정화 조건 구명(품종)	1	2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 모니터링(건수)	10	26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중금속) 당해연도 총 분석시료 건수 / (패류 정화) 정화 조건 구명 품종수 / (해양생물독소) 당해연도 총 분석시료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 모니터링

- 전국 연안 패류생산 해역(71개소) 패류(190건) 유해중금속 및 다소비 해조류(미역 등 66건) 요오드 모니터링

□ 피조개 및 서해안 굴 중의 병원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화조건 구명 및 인공정화 매뉴얼 마련

- 피조개 및 서해안 굴의 최적 인공정화조건 구명
 - * (피조개) 20℃ 이상의 수온에서는 24시간, 18℃ 이하의 수온에서는 48시간 이후 대장균 기준치 이하 감소
 - * (서해안 굴) 20℃ 수온에서 24시간 이내에 장염비브리오균이 기준치 이하 감소
- 패류 오염도를 줄이는 “패류 인공정화 매뉴얼” 마련(‘20.12)

□ 아열대성 해양생물독소(시구아톡신)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실시

- 제주도 연안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26건) 실시(전 조사시료에서 불검출)

4. 향후 추진계획

□ 유해 중금속의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수산물 중의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 모니터링 추진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추진

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2-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① 농경지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오재협 사무관 T.044-201-236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박영석 사무관 T.054-429-4135)

1. 과제내용

-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사전 차단
 - 농경지 중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조사
 - 화학비료, 퇴·액비 등 토양에 투입되는 양분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검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중금속 실태조사 ○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3~7월) - 국내실정에 맞는 토양양분산정법 확립(8월, 환경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농지 중금속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황조사 50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지구(농공단지 13, 저수지 6, 하수처리장 31) 6,093건 조사 ○ 축산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0~'21.1) ○ 관계기관 전문가 작업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토양양분산정법 확립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추진실적	6,000건	6,093건
○ 가축분뇨 자원화율(%)	91.4	91.6

* 지표 내용 : 중금속 실태조사 물량 달성도를 지표로 설정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관리정보시스템(SafeQin)에서 실적 확인

* 자원화율 측정산식 : 자원화물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자료출처 : 퇴비 판매량, 액비이용량, 공공처리물량 등을 농진청, 환경부에서 취합)

3. 성과 및 한계

□ (중금속 실태조사) 전체 50개 지구 조사결과 19개 지구에서 오염 확인되었으며, As, Cd 오염확인 필지는 11개지구 62필지 77점

□ (양분관리제)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환경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중금속 실태조사) '21년 조사부터 「농지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오염이 확인된 필지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As, Cd 오염이 확인된 필지(19개 지구 62필지)에 대해서는 '21년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양분관리제) 환경부와 협업하여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경축순환활성화를 통한 화학비료 감축 등 양분감축방안 마련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농업연구관 T.063-238-3236
토양비료과 김명숙 농업연구관, T.063-238-2440)

1. 과제내용

- 농업환경 중 농약 잔류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 농경지 및 농용수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 다빈도 검출 농약의 농경지 및 농용수에 대한 위성 평가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
 - 유기농업자재 원료 식물추출물의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유기농업자재 유효성분의 안정성 평가
-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 일반농경지 및 취약농경지(공단)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변동평가
 - 농경지 토양 중금속의 안전관리기준 설정 및 개량기술 개발
- 농산물 위해요소 안전관리기술 개발
 - 잔류농약 분석기술 개발 및 국가정도관리(QC) 체계 구축
 - 오염 우려지역 작물의 중금속 흡수 저감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기술 개발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2종 - 유효성분 안정성 평가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기술 개발 - 지표성분 및 분석법 개발 * 윗나무, 자몽종차 추출물 2종 - 유효성분 안정성 평가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우려지역 작물의 중금속 흡수 저감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농업환경 중 농약 잔류 실태조사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5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 추진 : 토양 중금속('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취약 농경지 토양 모니터링 및 정보화 <p>* 일반농경지('20) : 시설재배지 1,374점 * 취약농경지('20) : 공단인근 60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트로넬라, 대황, 향련 추출물 3종 ○ 시비관리를 통한 쌀의 비소 저감 영농법 개발 ○ 시설재배지 500지점, 호소수 100지점 농약 잔류 실태조사 완료 ○ 제5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사업 추진 : 토양 중금속('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평가 및 DB화 <p>* 전국 시설재배지 1,374점 - 취약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평가 * 공단인근 600점(권역별 150점)</p>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경지, 농용수 잔류농약 DB 구축자료 건수	500	600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종, 누적)	20	20
○ 일반·취약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DB 구축자료 건수	1,974	1,974
○ 중금속 오염 농경지 저감화 기술개발(건,누적)	3	4
○ 난분석 신규등록농약 분석법 개발(건, 누적)	10	10

- * 농경지, 농용수 중 잔류농약 DB구축자료 건수 : APRAS 시스템에 업로드 된 DB 자료 건수
-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설정 : 원료식물 지표성분 분석법개발 건수(해당년도 정책 자료 제출 건수)
- * 일반·취약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DB 구축자료 건수 : 휴토람 시스템에 업로드 된 DB자료 건수
- * 중금속 오염 농경지 저감화 기술개발 건수 : 해당년도 영농기술·정보 및 정책 제안 기관제출 건수
- * 난분석 신규등록농약 분석법 개발건수 : 해당년도 정책제안 및 대내외협력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유기농업자재 지표성분 정량분석법 개발 및 온도 안정성 평가
 - 분석법 개발 : 옷나무 추출물(fustin 등 4종), 자몽종자 추출물(naringin)
 - 온도안정성 확인 : 시트로넬라(citronellal 등 3종), 대황(emodine 등 3종), 황련(berberine)
-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논 토양(500 지역), 농업용수(지하수 100 지역) 잔류농약 모니터링
- 비료시용을 통한 쌀의 비소 저감 영농법 개발
 - 황, 또는 규산질 비료 이앙 전 토양처리와 엽면살포 병행 시 쌀의 비소 저감
- 조사한 공단인근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필지정보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추진함.
 - 중금속 8종 분석, 시설재배지 1,374지점·취약 농경지 600지점 조사
 - 중금속 오염 농경지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살포 효과 등의 연구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농업환경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지속 추진
 - 밭 500지역(120여 성분), 농업용수 100지역(100여 성분)
- 잔류농약 정밀분석법 개발 및 잔류분석기술 교육 추진
 - '농산물 중 잔류농약 신속 분석 매뉴얼' 발간
 - 지방농촌진흥기관 잔류분석기술 교육 추진
-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조사·평가 추진 및 중금속 안전관리기술 개발
 - 밭토양(1,760점), 공업단지 인근 농경지(4개 권역별 150점, 총 600점) 조사(21)
 - 농경지의 카드뮴(Cd)·납(Pb)·비소(Pb) 안전관리 기준(안) 연구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②	농업용수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강창엽 사무관, T. 044-201-1857)

1. 과제내용

- 농업용 호소 수질 정기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
 -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마다 수질조사*
 - * TOC, T-P, 중금속(Pb, Cd 등) 등 19개 항목
 - 수질조사 결과,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TOC 6.0mg/L)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저수지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수질 개선
 - * 저수지 호내에 인공습지, 침강지, 물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여 자연정화능력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농업용 호소 수질 정기 모니터링 * 농업용 호소 975개소 분기별 수질조사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수질조사
○ 수질 IV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추진	○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 초과 87개 저수지에 대해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 '20년까지 40개 저수지 사업 완료 * '20년 25개소(기본조사4, 신규7, 계속10, 준공4)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90.0	90.9
○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44.8	46.0

* 수질기준 IV등급 만족도(%) = (IV등급 이하 측정망 수/총 수질측정망 수) * 100

**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 (완료지구 수/대상지구 수(87지구)) * 10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초자료 구축 및 저수지 수질개선

-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저수지 953, 담수호 22)를 대상으로 TOC, T-N, T-P 등 수질판단인자 19개 항목을 분기별 조사 실시
 - 조사결과 886개소(90.9%, 저수지 870, 담수호 16)가 수질기준 IV등급 이하 만족
- 수질개선사업을 계획한 87개 저수지 중 '20년까지 40개 저수지 (46.0%) 사업 완료

□ (한계)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여건 악화로 수질개선 전반적으로 정체

- 기후변화 및 상류오염원 증가로 수질관리 여건 악화
 - 최근 5년간 농업용수 관리목표인 IV등급 초과 농업용 호소 비율*이 10% 내외에서 정체
- * ('15) 9.8 → ('16) 10.1 → ('17) 8.3 → ('18) 11.2 → ('19) 9.8 → ('20) 9.1
- 호내대책 중심의 수질관리에서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병행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

- (모니터링) 주요 농업용 호소(97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수질 조사
- (수질개선) 수질 모니터링 결과, 수질이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관리 목표인 IV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은 수질개선사업 시행

□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강화

- 수질개선사업 추진시 상류유역 주민의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프로그램 등 도입 및 추진
- 환경부(상류대책)·농식품부(호내대책) 중앙부처간, 지방(유역)환경청·지자체·농어촌공사 등 지역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등 추진

2-1-①	(농산물)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③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한국탁 연구관 T.054-429-4166)

1. 과제내용

- 농산물 생산자재 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오염 사전 차단
 -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자재(버섯배지)에 대해 농약, 중금속 잔류 실태조사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자재(버섯배지)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140건 조사	○ 생산자재(버섯배지)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140건 조사 완료

* 잔류농약 320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중금속 8성분(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조사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자재 위해요소 실태조사 실적(건)	140	14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자재(버섯배지)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잔류실태 조사를 통해 농산물 생산기반의 안전성 확보
 - 버섯배지 잔류실태 140건(잔류농약 70, 중금속 70) 조사 완료, 버섯배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과 재배 농산물의 안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버섯배지에서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참고 시 모두 기준 이내, 잔류 농약이 검출된 버섯배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

4.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자재(버섯배지)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 지속 추진
 - 생산자재(버섯배지) 잔류실태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
- * 잔류농약 검출, 중금속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검출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박천복 사무관, T. 044-201-2335)

1. 과제내용

-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시설 자금을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표준설계도 보급 - 양돈 및 반려동물 분야 축사표준설계도 보급 ○ '20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침통보 및 시도별 자금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통보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 시 우대 지원(지원단가 및 상한액 10% 상향 지원) ○ 양돈 축사표준설계도 기본설계 완료 등 보급준비 절차 진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사표준설계도 농가교육(횟수)	4	4

3. 성과 및 한계

- 양돈 및 반려동물분야 축사표준설계도 제작을 추진하고(기본설계 완료), 기 제작된 표준설계도는 농가에 교육*하여 동물복지 구현 및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사육기반 조성

* 농가교육 : 1차(청주 50명), 2차(횡성 40명), 3차(함평 32명), 4차(합천 31명)

-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농가는 우선 선정하여 동물복지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유도
- 동물복지형 축사로 개편하고자 하는 농가는 우대 지원(지원한도 10% 상향, 우선 선정)하여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 유도
- 양돈 및 반려동물분야 축사표준설계도를 적극 보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별 자금을 조기 배정할 필요
- 양돈 및 반려동물분야 축사표준설계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심의 차질 및 자문의견 반영 등으로 지연되어, '21.1분기 내 보급 추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인·허가 및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 조기 배정 및 대상자 조기선정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시도별 자금 배정('20.12월)
- 양돈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 및 보급('21.1분기)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 T. 063-238-7430
동물복지연구팀 전중환 연구사, T. 063-238-7051)

1. 과제내용

-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축사관리 기술 개발
 -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기술 개발
 -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구축

-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원격 환기제어, 액상사료급이기·착유시스템·축산분뇨처리 자동화 등

- 생체정보 및 성장모델 기반 미래형 양돈 스마트팜 모델 개발
 - 가축 질병발생징후 예측기술, 사육단계별 정밀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 ICT 기반 동물복지 사육시설 통합관리·생산시스템 개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정보 기반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개발 * ('20) 한우, 젃소 ○ ICT 기반 동물복지사육시설 통합 관리 및 생산시스템 개발·구축 * ('20) ICT장치 표준 고도화 ○ 축사 내부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20) 분뇨처리 자동화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선 및 DB 분석을 통한 정확성 개선 * (한우) 딥러닝 이용 발정감지 정확성 개선 * (젃소) 실시간 행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 ICT 장치 표준 고도화 * 돼지 사양관리장치 국가표준(안) 8종 개발 ○ ICT 융복합 가축분뇨 퇴비화 공정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 분뇨처리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건수	3	3
○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	5	5

- * 축산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 : 3건(퇴비 부숙도 자동측정 장치, 센서를 이용한 퇴비 부숙도 측정장치, 3D 카메라를 이용한 한우 체중 측정 방법 및 장치)
- * 축산 스마트팜 협업체계 강화 건수 : 5건(축산 스마트팜 표준화 전문가 자문, 전북 도청 스마트 축사 모델화 사업 현장점검 지원,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자문, 한국농업기계학회 스마트농업 포럼 발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사업 자문)

3. 성과 및 한계

□ ICT 접목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개선

- 생체정보 DB를 통한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고도화
 - 한우의 발정감지 정확성 개선, 젖소 행동 실시간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4. 향후 추진계획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운송 및 도축 개선 연구

- 동물복지 임신돈 및 분만돈 사육시설 개발('21~'25)
 -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연구 및 행동분석
- 동물복지 군사사육에 따른 임신돈 경쟁 저감 기술 개발('22~'25)
 - 경쟁 저감을 위한 군사사육시설 최적 조건 구명
- 산란계, 육계 행동분석을 통한 동물복지 수준평가 기준 연구('21~'25)
 - 산란계, 육계의 행동패턴 변화 분석 및 동물복지 평가기준 마련
- 축종별(돼지, 닭) 가축 계류 및 인도적 실신 조건 구명에 관한 연구('21~'25)
 - 도축방법에 따른 육질평가 및 실신조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
 - 행동분석을 통한 계류장 및 실신 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연구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②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사무관, T. 044-201-2383)

1. 과제내용

-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 축산농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 대상 컨설팅 제공, 교육·홍보 등 실시(’20)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신규 인증신청 농가·기 인증 농가 대상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지원
 - 동물복지축산 교육·사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교육 방법 다양화·기회 확대 및 축종별 인증 가이드라인 제작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추진 ○ 축종별 인증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동물복지축산컨설팅 사업 운영 ○ 동물복지 축산 인증 교육방법 다양화 및 교육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동물복지 직불금 제도 도입 한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편성 및 운영(’20년 10.95억원 신규반영) ○ 축종별 인증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축종(육계, 젖소, 양돈), 159부 배포 ○ 동물복지축산컨설팅 57농가 추진(228백만원) ○ 동물복지축산 의무교육 기본과정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16차시, 도축장·운송차량 8차시 - 비대면 원격교육 실시(8회, 686명 수료)

추진계획	추진실적
○ 동물복지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홍보	○ 소비자 의식 확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인증제 온라인 캠페인(8월~10월) ○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인증제 및 생산품판로 홍보(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가(개소)	217	297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인증 현황 자료

3. 성과 및 한계

-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 운영
 - 인증컨설팅 사업 추진, 신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유도
 -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가 전년대비 37.8% 증가(증 82농가)
 -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지원 및 홍보 강화(2억원) 사업 신설(21)
-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 제도 도입 한계
 - 동물복지축산인증 직불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공익형직불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과다 소요로 향후에도 개별사업의 직불제도 도입은 어려운 상황

4. 향후 추진계획

-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편성 및 운영(20년 10.95억원 신규반영)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 확대를 추진하여 동물복지축산물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2-1-②	(축산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③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법제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황성철 서기관, T. 044-201-2555)

1. 과제내용

- 가금농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입식 전 신고 의무화
 - 가금농가에서 가금 입식 전 지자체에 관련 내역을 신고토록 하여
예찰·검사 누락 방지, 필요시 방역실태 점검 등 AI 방역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을 통해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 닭·오리 등 사육농가는 입식 전에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규모 등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기 개정('19.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신고 기준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마련·시행('20.2.28) - 가금농가 대상 홍보물 제작·배포 ('20.2월, 15천부), 문자 홍보 등 추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입식 전 신고제 도입	법령 개정	개정 완료

3. 성과 및 한계

- 전국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 시행으로 체계적 방역관리 추진
 - 과거와 달리, 농가 단위 가금 사육 여부 파악이 가능해져 AI 예찰·검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방역 효율성 제고

- 농장에서도 입식 사전 신고 시 방역/소독시설 점검*토록 하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농장 자체 방역관리 도모

* 입식 사전 신고서 서식에 소독/방역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사항 포함

□ 가금농장 입식 신고 실태점검('20.11월)

- 가금 이력제의 이동 신고 정보와 입식 사전 신고 현황을 대조하여 법령 위반 의심 농장 추출 및 지자체를 통해 위반 여부 확인

⇒ 점검결과, 입식 전 미신고 3개 농장* 확인,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경기 용인 1, 안성 1, 충북 제천 1

4. 향후 추진계획

□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 지속 시행

- 입식 사전 신고 여부 점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
- 농장에서 입식 전 방역/소독시설 등을 엄격히 점검토록 지도·홍보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준걸 사무관, T. 044-201-2552)

1. 과제내용

- 축산농가의 해충 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
 - '17.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원인 조사 결과 산란계 농가에서 농약 등 무허가 제품 사용 및 동물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다수 확인
 - * '17.8월 산란계 농가의 계란 살충제 오염 전수조사(1,239농가) 결과 부적합 55농가 中 무허가 제품 사용 10농가, 사용기준 미준수 24농가 등 확인
-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추진
 -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 쥐 방제, 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방제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기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시행규칙 조항 신설)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소독·방제기준, 교육과정 세부규정, 의무적 이용대상자와 구체적 의무사항 규정 등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100개소) : 총사업비 18억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건수	10	33

3. 성과 및 한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9.6)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해충방제활동 기반 마련
 - 신설업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 추진
 -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통보(‘21.2월)
 - 지원농가·방제업체 선정 등 지원사업 추진 (‘21.2~12월)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②	닭 진드기 방제기술 연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양미희 연구관, T. 044-201-2457)

1. 과제내용

- 닭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 방제제 등 종합방제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피프로닐 설폰 제거기술, 살충제 안전·유효성 평가, 농장 위생관리 기준 설정 등 5개 신규 과제 선정(5.6억원) 및 연구 추진('18~)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 목표 달성 여부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적절성 등 최종평가 실시('20.7) * 친환경적인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곤충병원성 진균을 이용한 현장 적용 기술 개발('18.4.~'19.12.) * 종합방제전략(IPM) 개념을 이용한 현장방제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18.4.~'19.12.) *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농장 위생관리 기준 개발('18.4.~'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실시 완료('20.7) - (성과 1) 친환경 닭진드기 살비제 제품화 및 관련 특허출원 7건 - (성과 2) 닭진드기 종합방제제 제품화 3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참여 - (성과 3) 닭진드기 방제용 위생관리 장비 제품화, 분말 살포장치 기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진도점검 및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점검('20.6) * 질병 매개 닭진드기 방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규한 방제법 및 유효성분 발굴('18.7~'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점검조사 실시('20.7) - (성과) 가축 호흡기 질환 예방용 조성물 및 진드기 방제용 조성물 개발(특허출원 3건)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닭진드기 방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1	3

* 특허 출원(1건) 및 등록(2건), (가축 호흡기 질환 예방 조성물, 닭 진드기 흡혈 기피제 조성물 및 사료, 분말 살포 장치 등)

3. 성과 및 한계

닭 진드기 발생 억제 기술개발을 위한 계속과제(1과제) 1.8억 원 지원('20)

- 질병 매개 닭진드기 방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규한 방제법 및 유효성분 발굴(1.8억원)

4.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2-1-③	(축산물)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③	도축장 오염방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T. 043-719-3253)

1. 과제내용

- 도축 전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18)하고 소규모 도축장, 문제업소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상태 집중 점검

*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되어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도축 보류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도축장 등 취약 도축장 선정 위생 점검(1~12월) ○ 체표면 오염 가축의 처리에 대한 도축업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 등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그 오염원을 적절하게 제거하도록 규정 마련(「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 HACCP 운용 부적합 도축장 등 86개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소에서 위반 적발로 확인서 징구 등 조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영업자 준수사항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도살기준에 반영되어 있어 미준수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현행) 경고→영업정지 7일→15일 (개정) 경고→영업정지 10일→20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육 미생물 권장기준 초과율(%)	0.1	0.1
○ 체표면 오염가축 처리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규칙 개정·공포

* 국내산 식육 미생물 검사(일반세균 및 대장균, 1~3분기 누적) : 83,972건 검사에서 122건 검출(0.1%)

3. 성과 및 한계

- 도축장에서 식육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도축장 위생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개선토록 조치
 - * '20년 도축장 86개소 점검, 1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 징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표면 오염 제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20.12.1)

4. 향후 추진계획

- '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21년~)
 - 식육 미생물 관리를 위해 '21년에도 미생물 검사 지속 실시

2-1-4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①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환경 개선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손외학 사무관 T.044-200-5617)

1. 과제내용

- '20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계획 수립('19. 12)
 - 생산해역 위생조사 연구용역 계약('20. 4)
 - 패류 생산해역(64개 해역)에 대한 위생항목 및 육·해상 오염원 조사 추진('20. 4 ~ '21. 3)
- 패류 등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사업보고회 개최
 - 이매패류·피낭류·복족류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 제정('20. 9)
 - 패류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해역 위생조사 결과 공유 및 위생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사업보고회 개최('20. 10)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 패류 생산해역(64개소)에 대한 위생조사(42개 항목) 실시
○ 패류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	○ 패류 생산해역 18개소에 대한 육·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
○ 패류 등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마련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개정('20.7.31)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마련
○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 보고회 개최	○ '20년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20.11) * 코로나19로 '20.9월에서 '20.11월 연기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폐류 생산해역 위생조사(건)	104	115

* 측정산식 : [당해 연도 위생조사 건수/최근 3년간 평균 위생조사 건수]×100

3. 성과 및 한계

□ 폐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내수용 폐류 안전관리 강화 및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대비를 위해 오염우려물질(다이옥신, 항생물질류, 농약류 등) 모니터링 확대

* 위생조사항목: ('19년) 38개 항목 → ('20년) 42개 항목(PAHs 4개 추가)

4. 향후 추진계획

- 폐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항목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소비 되는 폐류의 위생관리 강화 지속 추진

2-1-4	(수산물)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②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담당자 :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형 사무관, T. 044-201-7036)

1. 과제내용

- 생산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22년까지 37개소 추가 확충
 - *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소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31개소 착수* *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중 혹은 공사중	○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34개소 착수 * 미착수 3개소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중 2개소, 기본계획 미수립 1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착수 개소(수)	31	34

* 지표 측정방법 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계나 공사가 착수된 상태

3. 성과 및 한계

- '20년도 성과목표인 31개소를 초과하여 달성(34개소 착수)
 - 미착수 3개소 중 2개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중

4. 향후 추진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인 2개소는 수립 완료 후 예산 반영 추진
 - 나머지 1개소는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예정

참고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현황

□ 해역별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 현황('20년 末 기준)

해역	시군	처리용량	사업기간	추진 현황	비고
한산 거제만 (7)	거제 (6)	50m³/일	'20~'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법동
		45m³/일	'18~'22	공사중('22년 준공 예정)	산달
		100m³/일	'19~'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영월
		35m³/일	'20~'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어구
		25m³/일	'20~'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함박
		35m³/일	'20~'22	공사중('22년 준공 예정)	화도
	통영 (1)	10m³/일	'20~'24	설계중('22년 착공 예정)	비산도
자란만 사량도 (8)	통영 (4)	90m³/일	'18~'22	공사중('22년 준공 예정)	대항
		85m³/일	'19~'21	공사중('21년 준공 예정)	내지
		25m³/일	'20~'24	설계중('22년 착공 예정)	답포
		15m³/일	'20~'24	설계중('22년 착공 예정)	먹방
	고성 (4)	70m³/일	'20~'22	공사중('22년 준공 예정)	용태
		100m³/일	'18~'21	공사중('21년 준공 예정)	송천
		미정	미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	자란도
	미정	미정	사업계획 미수립	와도	
창선 (1)	고성 (1)		'21~'24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FDA
강진만 (10)	남해 (10)	55m³/일	'19~'22	공사중('21년 준공 예정)	초양
		50m³/일	'19~'22	공사중('21년 준공 예정)	고모·광두
		50m³/일	'19~'22	설계중('21년 발주 예정)	고암
		125m³/일	'19~'22	설계중('21년 발주 예정)	정태·상산
		105m³/일	'19~'24	설계중	단항2
		60m³/일	'19~'24	설계중	대벽
		50m³/일	'19~'24	설계중	울도
		50m³/일	'19~'22	설계중('21년 발주 예정)	서대
		45m³/일	'19~'22	설계중('21년 발주 예정)	신흥
		55m³/일	'19~'22	설계중('21년 발주 예정)	지족
칠천도 (3)	거제 (3)	60m³/일	'20~'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황포
		600m³/일	'18~'23	공사중('23년 준공 예정)	하청면
		235m³/일	'20~'22	설계중('21년 착공 예정)	장곶
진동만 (1)	창원 (1)	하수관거	미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연계 처리)	울티·창포
가막만 (4)	여수 (4)	150m³/일	'17~'22	공사중('22년 준공 예정)	소장
		260m³/일	'22~'24	설계중('22년 착공 예정, 3개소)	세포·평사 ·고내
진도 (1)	진도 (1)	50m³/일	'19~'21	공사중('21년 준공 예정)	도목지구
덕적지일면 (1)	옹진 (1)	110m³/일	'19~'22	설계중(설계공정률 50%)	승봉

2-1-5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①	사전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장용호 사무관 T.044-200-5633,
양식산업과 박명래 사무관 T.044-200-5635)

1. 과제내용

- 양식수 정화·관리 시스템 적용 확대 및 우수 양식종자 개발
 - 항생제·소독제 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품종별 예방양식 시스템 개발 및 양식장 수질 정화시설 보급
 - 질병내성 종자개발 및 우량종자생산 등 연구개발 지속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을 위한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 추진('20년) ○ 우수 양식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보급(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 4회 및 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추진(2.18., 3.24., 6.19., 10.15.) - 사업 추진현황 점검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점검(6.12., 6.16., 11.10.~11.13.) ○ 연구개발 우수성과 보고회 개최 (10.30) 및 수산종자산업발전 간담회 개최(10.28)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 양식장 구축(개소)	15	15
○ 신품종 종자 개발(개)	3	3
○ 배합사료 사용 비중(%)	25	27.5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 ① 친환경어업사업(친환경+용수관리)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사업 선정 개소수, ② 골든씨드프로젝트 예산 10억 당 신품종 출원 개수, ③ 양식장 사료 총사용량 대비 배합사료 사용 비율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 양식장 구축 누적목표 달성 및 신품종 종자 개발, 배합사료 사용률 목표 달성

- 친환경 양식장 구축을 위해 양식수 정화 등 첨단양식시스템 지원
 - * 바이오플락 4개소, 순환여과 3개소, 용수정화 5개소, 스마트양식 등 8개소
- ‘수산종자산업발전 및 정책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10.28.) 등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소통 노력 향상
-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67억) 및 배합사료 품질검증 현장시험 등을 통한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어업인 신뢰 제고로 배합사료 사용률 확대
 - * 배합사료 사용률(%) : (‘11) 19.8% → (‘15) 23.1 → (‘19) 27.5

4. 향후 추진계획

- 수처리 시설확대 및 종자개발 등을 지속추진하고, 배합사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용률 향상 추진
- 양식수 정화·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및 종자생산업계 육성정책과 신품종 종자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1-5	(수산물)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②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남백상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한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인 대응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 추진 -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2월)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 수립(5월)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의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 추진 -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12.22)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 수립(5.22) -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의회(12.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 안전기준 적합률(%)	98.5	99.6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수산물 안전성 조사건수 대비 적합률

3. 성과 및 한계

- 안전성조사 강화로 불법·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중금속, 잔류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 * 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 17,828, 부적합 71건
- 분석 장비구축으로 지자체의 분석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지자체의 안전성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 확보 추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다소비 품종 및 부적합 이력 품종 중심 수산물 안전성 조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수산물 검사로 효율적 안전관리

2-1-⑥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중수 사무관, T. 044-201-2278)

1. 과제내용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용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비 지원 ○ GAP 시설에 대한 위생설비 개보수 지원 ○ 수요창출을 통한 인증확대를 위해 다양한 소비접점 대상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GAP 인증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20년 GAP 인증건수 (10,362건 달성, 12월말 기준) * '20년 목표(9,500건 대비 109% 달성) ○ GAP 안전성 분석비용 예산 3,895백만원, GAP 시설보완 예산 2,100백만원 ○ 영양사(130명), 공영도매시장 경매사 (14명), 소비자단체(193명) 대상 교육 ※ 코로나 19로 농업인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AP 인증건수 확대(건)	9,500	10,362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당해연도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건수(누계, GAP정보서비스)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농산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가,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 등을 통해 GAP인증 10,362건 달성(농가 114천호)
 - '20.12월 GAP 인증건수 10,362건, 농가 114,264호(11.3%), 면적 126,986ha(8.0%)
 - * GAP 인증건수 : '17) 6,909 → '19) 9,102 → '20) 10,362
 - * GAP 인증농가 : '17) 86(8.1) → '19) 99(9.7) → '20) 114(11.3)
 - * GAP 재배면적 : '17) 103(6.3) → '19) 112(7.0) → '20) 127(8.0)
 - GAP 안전성 분석비(토양·용수·농산물) 지원, GAP시설(RPC·APC 등)의 위생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으로 인증 취득에 따른 농가비용 부담 완화
- (한계) GAP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인증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GAP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 GAP의 농약 안전성(PLS) 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홍보
- 인증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유통업체와 기획판매전, 정기협의회 개최
-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GAP 질적 내실화 및 단체인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부감독자 제도' 활성화
 - 단체 내부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의 GAP 기준을 전수 관리할 수 있는 내부감독자 운영 활성화
 - * 국정과제(83-4) 목표 : '22년까지 내부감독자 50% 지정
 - 식중독균 모니터링 분석물량 확대, 온라인몰 유통실태 점검 추진

농촌진흥청

(담당자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농업연구관, T. 063-238-3391)

1. 과제내용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기술지원
 - 푸드플랜 연계 GA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GAP 제도의 양적·질적 확대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해미생물 분석기능 확대로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GAP 인증기준의 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 GAP 농산물 생산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현장 방문(4월), GAP 버섯 생산 현장방문(8월) ○ 팡이버섯 소독기술(유기산 등) 및 고칼세척장치 현장 보급 ○ 완주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유해미생물 분석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가공 농산물의 GAP 기준 이행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GAP 농산물 생산현장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과형 딸기 GAP 컨설팅 및 인증 추진 (23농가) ○ 수출 버섯 안전관리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버섯 생산현장 방문 및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6회) - 팡이버섯 소독기술(유기산 등) 및 고칼세척장치 현장 보급(음성) ○ 완주군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을 위한 전문가 기술컨설팅(5, 6월) ○ 시군농업기술센터 유해미생물 분석 담당자 교육(2, 7월) ○ 위생관리지침서 개발 및 보급 : 3건 ○ 위해요소 분석 매뉴얼 : 1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관리지침 개발 보급(건, 누적)	14	15
○ 위해요소 분석 및 신속검출 매뉴얼(건, 누적)	6	6

* 위생관리지침 개발 보급(건)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등록된 지침 개발 건수

* 위해요소 분석 및 신속검출 매뉴얼(1건)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등록된 매뉴얼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 GAP 농산물 생산현장 위생관리 기술 지원 및 인증 확대
 - 대과형 딸기 GAP 컨설팅 및 인증 추진(23농가)
 - GAP 버섯 생산현장 방문 및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6회)
 - 팽이버섯 소독기술(유기산 등) 및 고갈세척장치 현장 보급(음성)

□ 한계

-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소비 증가에 따른 단순처리농산물 시장 확대
- 단순처리농산물 안전성문제는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GAP 제도 보완 및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부족

4. 향후 추진계획

□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생관리 기술 개발

○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 시설 위생관리 실태 조사

- * 대상농산물 : ('21)세척 → ('22) 건조 → ('23)박피·절단 → ('24) 절임 → ('25)냉동
- * 내용 : 위생관리 현황 및 미생물 샘플링(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 단순처리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 대상농산물 : ('21)세척무·참외 → ('22)새싹보리분말 → ('23)박피·절단채소(간마늘, 양파 등) → ('24)절임배추 → ('24)냉동과일

2-1-6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세희 사무관, T.044-201-2439)

1. 과제내용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누계) : ('17) 16개소 → ('20) 64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0.12월) - 친환경농업지구 보완 18개소 선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20.12월) - 친환경농업지구 18개소(신규16, 보완 2) 선정·지원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64	65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친환경농업지구·보완 선정 개소수('17~ , 누계)

3. 성과 및 한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충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 친환경농업지구 18개소* 선정,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지원(39억원)
 - * 강원(1), 충북(1), 충남(4), 전북(3), 전남(6), 경북(2), 경남(1)
 -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지속적으로 확대
 - * 지구·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17) 32.8% → ('18) 33.3 → ('19) 34.3

4.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속 추진
 - 친환경농업지구·보완 18개소 선정·지원('21.12월)

2-1-6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③	HACCP 축산물 적용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T. 043-719-3220)

1. 과제내용

- HACCP 농장표시 우대조치, HACCP 인증 희망 축산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 인증 사후관리 미흡 농가 대상 기술지원
-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가 위주로 HACCP 적용 확대 지속 추진
- 식육가공품 HACCP 적용대상 확대('16년 매출액 20억이상→5억이상), 분쇄포장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 - HACCP 인증희망 농가 대상 신규 컨설팅 사업 추진 - HACCP 사후관리 미흡 농가 대상 기술지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 완료(3~12월) - '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지침 확정 및 통보(3.24) - '20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지원 사업 추진(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1,650백만원(11개 시도, 방역본부 인증원)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업 추진(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1개소(725회)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을 통한 축산물 HACCP 제도 홍보(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2TV 생생정보 방송 송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적용 의무화('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 HACCP 적용 식육가공업 영업자 확대 ('16년 매출액 20억이상→5억이상)('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매출액 기준 단계적 시행('23년~'29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2.1)
------------------------------------------------------------------------------------------------------------------------------------------------------------------------------------------------------------------------------------------------------------------------------------------------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 인증농가수(누적)	7,500개 이상	7,503개
○ HACCP 적용 식육가공업 영업자 확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규칙 개정·공포
○ 식육포장처리업에 HACCP 적용 의무화	법 개정·공포	법 개정·공포

3. 성과 및 한계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및 도축장·집유장 대상 조사·평가 추진

- '20년 축산농가 대상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153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 중 147개 농가(96.1%)에서 HACCP 인증 획득
- HACCP 인증 농장 중 관리운영능력 강화가 필요한 401개소(725회) 선정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대상 농가의 부적합률 감소에 기여
 - * 기술지원 농가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률 0%
- HACCP 인증 목표 누적 농가수인 7,500개를 상회한 총 7,503개 농가에 대한 인증을 완료('20.12.25 기준)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HACCP 운용 수준 조사·평가(5~10월)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시상(16개소) 및 미흡 업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 * 도축장(포유류 84개소, 가금류 50개소), 집유장(59개소) 평가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축산농가 HACCP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2-1-6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④	HACCP 수산물 적용 확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남백상 사무관, T.044-200-5622)

1. 과제내용

- 육상양식장의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관리 지속 강화
 - 항생제·용수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도록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HACCP 등록 양식장 지속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약일~12월말) -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컨설팅·실태조사 - HACCP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28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1.9) 및 계약(2.28) - 컨설팅(100개소) 및 실태조사(155개소) - HACCP 인증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4월) 및 대형마트 입점(8월, 롯데마트·홈플러스)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양식장 HACCP 등록(개소수)	250	284

* 지표 측정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장 HACCP 등록 보고

3. 성과 및 한계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및

○ (성과)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284개소) 및 홍보

-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등록 목표 113.6% 초과달성

* (목표) 250개소 등록 < (성과) 284개소 등록 완료

- HACCP 인증 수산물의 드라이브스루 행사,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HACCP 양식장의 판로 개척 및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 (4월, 드라이브스루 행사) 넙치, 뱀장어, 송어/ (7월, 현대백화점) 뱀장어/
(8월, 롯데마트·홈플러스) 송어

○ (한계)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 및 소비자 인식 부족

- 양식장 HACCP 등록 시 직접적인 금전적 유인의 부재로 양식장의 HACCP 등록에 대한 적극적 참여 한계

- 양식장 HACCP 인증 수산물의 차별화된 시장이 조성되어있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 미미

4. 향후 추진계획

□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 확대

○ 친환경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조건

- HACCP 등록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 지급

* '21년도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인증제도 적극 홍보 연계

○ HACCP 인증 수산물의 대형마트 및 온라인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

2-2 가공식품 제조 관리

2-2-①	일반식품
①	HACCP 적용식품 확대 및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이제명 사무관, T.043-719-2854)

1. 과제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지속 확대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20), 식육가공업(~'24)의 HACCP 조기 적용 및 단계적 확대 추진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의무적용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4단계 및 식육가공업 2단계 HACCP 인증 - HACCP 인증 재정·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 608 개소 * 현장기술 등 지원 : 5,150회 ○ 스마트 HACCP 플랫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준비업체 맞춤형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명회, 기술지원(200개소) - 스마트 HACCP 인증절차 및 우대 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 조사평가 면제, 표시광고 허용 등 고시개정 - 중기부 연계한 업체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57개소 구축(5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의무적용 확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1,135개소 및 축산물 514개소 HACCP 인증 완료(누계 : 11,817개소) -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 식품업체 HACCP 의무 시행일 1년 유예('20.11.24) - 영세 소규모 HACCP 업체 시설개선비 국고 지원(640개소) 및 기술지원(5,526건) ○ 스마트 HACCP 적용 확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알가공업, 150개소) - 스마트 HACCP 도입 유도 사업 설명회(6.26, 7.6) 및 기술지원(200개소) -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및 우대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2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약처·중기부 업무협약 체결('20.5.12)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완료(57억, 54개소, 업체당 최대 1억원 1:1 매칭)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 제품 생산비율(%)	87.5	87.5

* '20년 HACCP제품 생산비율(%)은 '18년 전체 제조업체 생산량 33,289천톤 대비 HACCP 적용 제조업체 생산량 비율(%)

3. 성과 및 한계

□ HACCP 인증업체가 생산하는 HACCP 제품이 국내 전체 식품 생산량의 87.5% 로 확대되어 안전한 식품 제조·공급 기반 구축

* HACCP 제품 생산비율(%) : ('18) 85.2 → ('19) 86.5 → ('20) 87.5%

□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유예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전향적 지원 및 인증 활성화 유도

*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심의·의결(11.17.), 보도자료 배포(11.24.)

□ 「스마트 HACCP시스템(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시스템)」 도입·확대로 데이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식품안전관리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ICT 기술 융합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심사기반 구축 기여

* 스마트 HACCP 등록업체 : 23개소(28개 품목)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 4단계 유예업체 HACCP기준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강화

* 시설개선비: 560억원, 560개소('21)

* 현장기술 및 검증지원 : 5,000회('21)

□ 스마트 HACCP 등록업체 확대·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증 발급, 마크 표시제 도입, 조사·평가 가점 부여(고시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연계 추진(66억원, 60개소, '21)

2-2-①	일반식품
②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박진국 사무관, T. 043-719-3211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 T. 043-719-3220)

1. 과제내용

□ 위생취약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 자유업(비제도권)으로 관리되어 위생이 취약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한 자율 위생관리 지원

* 세척/절단 제품 구입 경험 : ('16) 39.2% → ('17) 46.1% → ('18) 48.9%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4, 11월) ○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농·수협) 자율검사 강화를 위한 협의회(5, 6, 11월)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처리 농·수산물 수거·검사 (농 1,692건, 수 295건) ○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농·수협) 자율검사 강화를 위한 협의회(농협 6월, 수협 5,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협 판매장 및 작업장 대상 자체점검·수거 및 식품안전 교육 실시 -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5,40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온라인 1,898명 / 오프라인 157명 (카드뉴스) 소비자 1,306명 / 농업인 711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컨설팅(업체 수)	60	6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위생관리 환경 조성

- 개인위생, 작업장, 원부재료 및 공정관리, 용수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수칙 지도·교육으로 업체 자율위생관리 역량 강화

□ (한계) 위생관리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교육·홍보·계도 등에 의존

- 대부분 고령의 영세 업체로 오염된 용수 사용 등 식품위생 의식 수준이 낮으며,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 업체 다수 존재

4. 향후 추진계획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21년)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제3조) 및 원료 등의 구비요건(제7조) 조문 검토·개정
 - 현행 조문에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기본 위생규정 있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도 적용 가능
- 단, 단순처리식품의 정의 및 작업용수(식품용수 사용 의무화 필요) 등에 대한 규정 등 신설·개정 필요

□ 권고·계도에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지도·점검으로 관리 전환('22년~)

-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계도·컨설팅 및 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나, 위생수준은 여전히 미흡
 - 기본적인 위생수칙 위반 및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벌 제제 필요
- '21년도는 기본 준수사항을 홍보·계도하고, '22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도·단속 추진

2-2-2	건강기능식품
①	제조기준 강화(GMP 적용 의무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 T. 043-719-2456)

1. 과제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단계적 적용 의무화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 의무화 대상('17년 매출액)중 미적용업소 : '20년(10억 미만) 115개소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P적용 준비업체 대상 전문 컨설팅 확대(20→40개소) 실시 (2~11월) ○ 업체별 책임전담제 운영(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대상업체 40개소 선정 및 컨설팅 실시(3~11월, 업체별 6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GMP 지정 17개소, GMP 유예 12개소, 진행중 4개소(식품제조가공업), 폐업 등 7개소 ○ GMP지정까지 밀착관리를 위한 업체별 책임전담제 운영(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GMP 준비업체 맞춤형 교육(4회), 컨설팅 지원(4~11월) 등 실시 ○ 적극행정을 통한 GMP의무적용 유예 실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사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의 준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GMP적용을 1년간 유예(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GMP 의무화 적용비율(%)	100	91.5 (의무적용 1년 유예)

* GMP 의무화 적용비율(%): GMP 적용업소/GMP 의무적용 대상업소*100
(단, 의무적용 대상업소 중 폐업, 업종전환 업소는 제외)

※ 의무화 대상 전체 421개소 중 GMP 지정 385개소, 36개소 미지정(GMP 지정 1년 유예 33개소, 휴업 3개소)

3. 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사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소규모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의 GMP 의무적용 시기 조건부 유예('20.12.1 → '21.12.1)

○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예 희망업체 조사 및 유예신청 검토를 통해 33개 업소는 GMP적용을 1년간 유예

- GMP 지정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를 진행중인 경우, GMP 기준서 마련 및 GMP 적용 운영기간이 필요한 경우

* 식약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유예 의결('20.11.13)

4. 향후 추진계획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유예기간 안에 GMP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 파악 및 적극 독려('21)

○ 위탁제조 품목이 많은 업체 집중관리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21)

○ GMP 운영규정 상향입법 등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22)

- 시설기준, 품질관리, 조사·평가, 교육·훈련 등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입법 및 정비

2-2-②	건강기능식품
②	기능성 검증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정형욱 연구관, T.043-719-2441)

1. 과제내용

기능성 원료 재평가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정기 재평가)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보고 등이 있는(수시 재평가)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 실시

* 정기 재평가 : ('18) 19종 ('19) 8종 ('20) 8종 ('21) 7종(예정)

* 수시 재평가 : ('18) 7종 ('19) 9종 ('20) 4종, ('21) 2종(예정)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수립(2월)	○ '20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수립(2.11) - 정기·수시 재평가 원료 목록, 실시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마련
○ 건강기능식품 수시재평가 공고(2월)	○ '20년 수시재평가 공고(2.11) - 재평가 대상(엠에스엠 등 4종) 및 자료 제출 방법, 일정 등 알림
○ '21년 건강기능식품 정기재평가 공고(8월)	○ '21년 정기재평가 공고(8.31) - 재평가 대상(프로폴리스추출물 등 6종) 및 자료제출 방법, 일정 등 알림
○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공시(12월)	○ '20년 재평가 결과 공시(12.29) - 재평가 결과(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뉴시스 등 8개 언론사 보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재평가 원료(건수)	12	12

* 재평가 원료 건수 :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보고 등이 있는 원료

3. 성과 및 한계

□ 홍삼 등 재평가 대상 원료 12종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자료 확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결과보고서 마련 및 공개

○ '20년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일섭취량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 인정사항 개정 예정

* 섭취 시 주의사항 수정 또는 추가(1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규격변경(4종)

□ '19년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성 내용 신설,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 후속 조치 완료

○ 베타카로틴 등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크롬의 기능성 신설 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제2020-92호(2020.9.23.)

4. 향후 추진계획

□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추진('21년)

○ '21년도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 수행 및 결과 공개

* (고시형, 7종) 엽록소함유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개별인정형, 2종)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홍국쌀

2-2-②	건강기능식품
③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 T. 043-719-2456)

1. 과제내용

- 이상사례 체계적 조사·분석 운영 및 관련 법령 정비
 - 이상사례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영업자 권고 등 조치
 -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및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연구용역 수행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사례 관리 세부 운영 방안 마련(6월) -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마련의 필요성 검토 연구사업 실시(3~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가 섭취자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증상 진단, 외부 전문의를 통해 이상사례 등 8건 자문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개최(2회) 및 영업자 권고 등 조치*(4건) * 제조업체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판매주의 ○ 이상사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6월) * (시행령) 이상사례 보고 접수기관, 조사·분석 결과 공표 등 (시행규칙) 이상사례 보고 기한 - 건강기능식품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 실시(3~7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2회	2회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중 입원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토대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등급별로 후속조치 실시

3. 성과 및 한계

□ 이상사례 보고·접수부터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완료(6월)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조사·분석 결과 공표, 접수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보고 기한 및 서식 규정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중대 이상 사례에 대해 판매주의 조치로 소비자 안전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 규명 강화('21)

○ 이상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풀 구성

- 중대한 이상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주요 증상별 전문가풀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다빈도 이상사례 유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변경 등 행정조치 강화

2-2-③	주류(술)
①	주류업체 등급별 차등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 T.043-719-2054)

1. 과제내용

- 주류업체의 위생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 강화(위생취약, 자율 등)
 - 위생취약 주류업체 중심으로 ‘위생관리등급제’ 전면 개편하고, 그 외 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위생향상 유도
 - 위생취약업체는 관련 전문교육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지원
 - 계절별, 테마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체계 전면 개편(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취약업체(행정처분 이력, 신규 영업등록 등) 중심 집중관리 * 관리등급(위생취약, 자율)별 정기 평가(공무원점검, 자율점검) 실시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제품 중심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 수준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239개소,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 관리를 통해 주류 위생 관리 준수율 향상 * ('19년) 92.6% → ('20년) 94.3 ○ 주류 유형별 제조·유통업체 기획 점검(674개소) 및 수거·검사(1,386건) ○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181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준수율(%)	92.6	94.3

* 위생취약업체(239개소)에 대한 위생평가 결과(62개 항목)를 반영하여 산출

3. 성과 및 한계

- 주류업체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한 위생수준별 맞춤형 현장 점검에 집중한 결과, 업계 전반의 위생수준 지속 향상
 - 또한, 행정처분 이력 업체는 특별 관리하고, 소비 트렌트를 반영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 제조환경 마련
- 주류업체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점검인력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전체 주류업체 대상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생취약 주류제조업체 중심으로 개편된 점검 방법 적용하여 지속 추진
 - 행정처분 이력업체, 신규업체 등 위생취약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그 외 업체는 자율점검 관리 확대

* 취약 주류업체의 기본적인 위생수준 확보를 위해 영업등록부터 제조까지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집중 관리

2-2-③	주류(술)
②	주류업체 식품용수 안전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T.043-719-2055)

1. 과제내용

- 지하수 사용 주류업체 사전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검사 부적합 검사결과 신속 보고 및 긴급 조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 사항 : 사용중지 및 시설 개수, 상수도 전환 등 ○ 지하수 사용업체 검사시기 도래 알림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시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 문자(SMS)으로 수질검사 실시 안내(매월 2회 발송) ○ 지하수 오염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검사 부적합 검사결과 신속 보고 및 긴급 조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식약처 및 시·군·구로 부적합 시험성적서 메모보고 및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알림 서비스 제공(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검사 사전 알림 문자 발송 (237개소, 474회 발송) ○ 지하수 오염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의 GIS DB 구축, 오염분포도 작성 등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료 확보

- 성과지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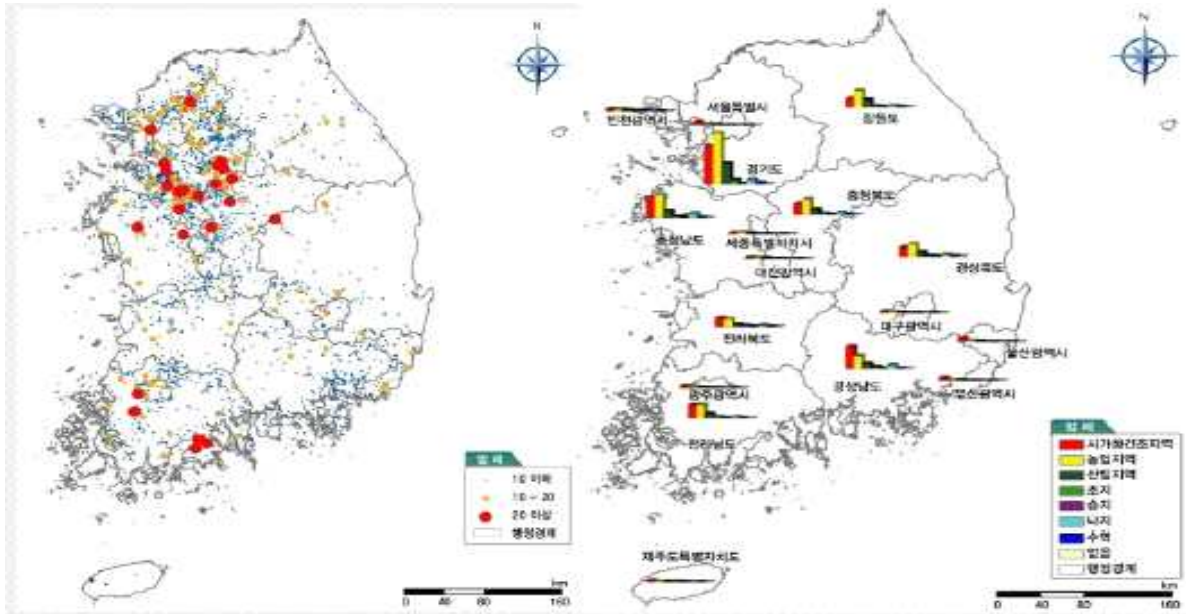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하수 수질안전관리 정보 제공 건수(건)	440	474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문자발송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지하수 오염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료 확보

- 약 67,000여 건의 수질검사결과를 GIS DB로 구축하여 공간분포 특성을 반영한 지하수 분포도 작성



4. 향후 추진계획

□ 지하수 오염 항목별, 지역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 지역별 주요 지하수 오염 항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관리방안 제시

2-2-③	주류(술)
③	소규모업체 안전·품질 관리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정영애 사무관 T.043-719-2052)

1. 과제내용

-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지원 강화
- 주류제조업체의 안전·품질관리 및 법령 위반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확대
- 맥주·탁주 등 소규모 주류 증가 및 다양한 제품 생산 등에 따른 고품질의 안전한 주류 제조환경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4~11월, 180개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컨설팅, 위생·안전교육,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연계 등 실시 ○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확대 (48개소 신규 선발, 연중) ○ 소규모 업체 위생·품질관리 기술 지원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181개소 업체 지원(5~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컨설팅(321회), 위생·분석교육(4회), 우수업체 견학(8회), 소규모 HACCP 기술지원(14개소) ○ 신규 자율안전관리인 50개소 신규 지정 및 보수교육(12월) 실시 ○ 온라인 민원설명회(6월), 수제맥주·막걸리 협회 등 간담회(5월), 소규모 주류 기술지원 세미나(8월)·새내기 업체 맞춤형 교육(10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업체수(누적)	300개소	302개소

* 지표 측정방법 : 소규모 주류업체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업체 누계(2017~2020)

3. 성과 및 한계

-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참여업체의 현장컨설팅 및 우수업체 견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만족 이상 비율 90.1%)
 -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인식수준 향상(사업 전 6.9점 → 사업 후 9.1점)
- 신규 소규모 업체 및 취약업체(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의 경우 자율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 및 취약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류제조 업체 등 지원 강화('21)

2-3	인증제도 개선
------------	----------------

2-3-1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①	인증체계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동언 사무관, T. 044-201-2352)

1. 과제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 인증체계에 맞춰 '유기(Organic)'로 단일화(20)
 - '무항생제'는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분리, 축산법으로 이관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개정 국회 대응(2~3월) ○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3월) ○ 하위법령 개정 절차 진행(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개정·공포(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조 신설 및 개정, 인증근거·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시행(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 범위임사항 구체화 ○ 시행규칙 개정·시행(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 농가 홍보 리플렛 제작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법 개정	시행	시행
○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시행

3. 성과 및 한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완료

- (시행) 축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년부터 개정·시행
- (주요내용)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준을 개선하되 기존 농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 법 11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
 - 항생제 저감과 관련이 없는 규정들은 삭제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유도
 - * 사육장 토양오염 우려기준, 작업자 및 가축 수송시 위생 조치 및 상처 최소화 등
-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인증제 이관 안내를 위한 리플렛 제작
 - 12.30.(수) 조간 보도자료 배포, 기사량 30건 이상(네이버 14건 / 다음 16건)
 - 인증제 이관 홍보 리플렛 제작하여 농가 단위 배포 예정('21.1월)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19년 기준) >

- 인증건수 및 농가수 : 5,626건, 6,087호
- 인증품 출하량 : 957천톤
-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 마켓컬리 홍보·할인 이벤트(8.6.~8.20.)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잡지(매거진 더_이음) 발간(봄, 여름, 가을, 겨울호)
- 인증 농가 대상 교육·홍보 수요조사('20.5.)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연중)
- 축산분야 인기 유튜버(밥굽납, 정육왕) 활용하여 유튜브 홍보(9월~10월)
- 풀무원 올가홀푸드 홍보·할인 이벤트(10월)
- 이마트 온·오프라인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 추진(9~10월)
 - * 오프라인 매장에 무빙위크 광고 등 : 목동, 가양, 세종 및 지점 추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2-3-②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①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감독기관·인증기관·농가 간의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인증신청을 2회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
 - * (심사원 자격 제한 : 기 완료)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8.12.31)
 - * (공직자 재취업 제한 : 기 완료)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적용(정관 개정, '19.3.11)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인증기관 선정 제한)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제한 규정 마련	○ 동일 인증기관에 2회 초과하여 인증신청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9.8.27) - 다만, 인증기관 평가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적용 제외 *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2.1)
○ (인증기관 평가등급 공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농업인 등의 인증기관 선택기회 제공	○ 인증기관 등급평가 결과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시행 *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2.1)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동일기관 2회 연속 신청제한	시행규칙 개정	개정 완료

3. 성과 및 한계

- 인증기관·농가 간의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한 보완책 마련으로 인증 관리 내실화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2-3-2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②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퇴출 규정('16.8~)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집중관리 및 퇴출제 신규 도입
 - (지정취소)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 * (역량평가 : 기 완료) 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농관원)이 평가기관(제3자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18.9.27)
 - * (집중관리 : 기 완료) 역량평가 '미흡'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농관원)이 집중 지도·점검 강화('18~)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취소)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취소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9.8.27)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2.1)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전년도 (1.1.~12.31.) 실적을 익년 6.30.까지 평가·등급 결정 ○ 미흡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인증사업자 연속인증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연속 '미흡'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행규칙 개정	개정완료

3. 성과 및 한계

- 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공정심사 위한 보완책 마련으로 인증관리 내실화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인증취소’ 및 상습 위반자(인증취소 처분 3회) 대상의 영구퇴출제 신규 도입 등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징벌적 과징)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 (인증취소 : 기 완료) 축사에 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한 경우, 축산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8.12.31)
 - * (삼진이웃 : 기 완료) 인증취소 처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 등(친환경농어업법 개정, '19.8.27)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과징)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 과징금 부과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9.8.27)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동법 시행령 개정('20.8.26) · 시행('20.8.28)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시행령 개정	개정완료

3. 성과 및 한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도입, 인증 취소농가의 재인증 신청제한기간 강화 등으로 인증 관련 부정행위 감소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2-3-③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②	친환경인증농가 교육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장성두 사무관, T. 044-201-2437)

1. 과제내용

- 모든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기존 2배로 확대
 - (생산·유통단계 검사)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 취약시기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 인증품 유통단계 조사('18~, 농관원)
 - (의무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신규), 인증을 받은 자(보수) 모두 인증제도 교육 의무화(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18.12.31)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단계 검사) 인증품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및 안전성 검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 계란 사건('17.8.) 이후 '18년 잔류농약, 동물약품 성분 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12천건 → ('18년) 28천건 ○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2단계로 마련하여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인증품 취급자·가공자가 공급 제품을 주기적으로 자체 검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를 농관원 및 인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함('20.12.~) - (2단계) 농관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안전성 부적합 제품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친환경 인증사업자 교육 인원	29,000명	41,637명

3. 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등 도입하여 인증사업자의 불편사항 없이 의무교육 실시(당초 목표 대비 120%)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2-3-③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③	축산농장 HACCP 관리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추가 및 무작위 불시 조사 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장 HACCP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잔류예방관리 추가 ○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평가* 추진으로 축산농가 사후관리 강화 * 축종지역 등 여건 감안 전체 대상 농장의 10%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 농장의 HACCP 인증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 관리항목 신설 완료(17.10.27.시행) -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토록 규정 개정 완료(20.1.1.시행) ○ '20년 HACCP 적용 농장 불시 조사·평가 추진 완료(1~12월)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업 추진(6~11월) * 401개소(725회)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HACCP 인증농가수(누적)	7,500개 이상	7,503개

3. 성과 및 한계

- 축산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및 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불시 조사·평가 추진
 -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20.1.1.시행)하여 닭·오리 외 모든 축종에 대해서도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사항을 평가하도록 인증기준 강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관으로 HACCP 기준 준수 미흡의 우려가 있는 농장을 우선 선정하여 불시 조사·평가 실시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20년 축산농가 대상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153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 중 147개 농가(96.1%)에서 HACCP 인증 획득
 - HACCP 인증 농장 중 관리운영능력 강화가 필요한 401개소(725회) 선정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대상 농가 관리
 - HACCP 인증 목표 누적 농가수인 7,500개를 상회한 총 7,503개 농가에 대한 인증을 완료('20.12월말기준)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농가 HACCP 인증 관리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조사·평가 추진
 - 축산농가 HACCP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3-1 유통 관리체계 개선

3-1-1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류창희 사무관 T.043-719-2852)

1. 과제내용

□ 중간유통단계 이력정보 연계 확대

- 유통단계 이력추적관리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 확대

* (농식품부) 농산물·축산물, (해수부) 수산물, (식약처) 가공식품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 부처간 이력정보 연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이력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6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추적 품목 확대 및 중간유통단계 식품이력추적 적용 등 시스템* 개선 ('19.9~'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tfood.go.kr)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5.18~11.17) ○ 범부처 원재료(농·축·수산물) 이력 관리 정보 연계 확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 확대(가금산물, 조기, 굴 등)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 협의체 개최(6.30, 12.24)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해수부, 식품안전정보원 등 - 원재료인 축산물 이력정보 연계* * 국내산 쇠고기이력시스템과 연계(기존 링크식 → API방식)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이력관리 실무협의체 횟수	2회	2회

* 부처별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 개최 건수

3. 성과 및 한계

□ 범부처 원재료(농·축·수산물) 이력정보 연계 확대 및 협력 활성화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중간유통단계 반영 및 품목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부처별 이력정보 연계방법 개선*, 시스템 화면 및 환경 업그레이드 등('19.9~'20.2)

* 국내산 쇠고기이력시스템과 연계(기존 링크식 → API방식)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5.18~11.17, 6개월)

* 블록체인 적용 현황조사 및 블록체인 적용 대상 검토, 블록체인 적용방안, 플랫폼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편익분석 등

○ 국내산 쇠고기 원재료 이력정보 직접연계('20년~) 및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산물, 조기, 굴 등 추가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6.30, 12.24)

- 코로나 19로 인한 부처간 실무협의체 서면회의 대체

4. 향후 추진계획

□ 원재료 이력정보 연계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반기별)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②	이력추적 대상 품목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류창희 사무관 T.043-719-2852)

1. 과제내용

- 위해 심각성·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확대
 - 비만·당뇨환자식품, 임신·수유부용식품 등 식품유형별 매출액을 고려한 단계적 의무적용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당뇨환자, 임신·수유부용 식품 제조·수입업소 의무적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제조·가공업자(12월)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 등록 의무적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품목류별 연매출액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6월) ○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업체 교육 및 등록 안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 의무 품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식·임산부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확대(~'20.12) * 식품 유형별 '16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체 34개소 371개 품목 등록 완료 -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이력추적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기유통전문판매업자 의무화 302개소 - 이력추적제도 이해와 등록절차 등 산업체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현장방문 기술지원(컨설팅) 및 콜센터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34회, 현장기술지원 4,897개소, 콜센터 17,093건(응대율 93.7%)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개소, 누계)	8,300	8,769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상 등록업체 현황

3. 성과 및 한계

□ 이력추적 의무 품목(대상) 확대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 기여

- 환자식·임산부 식품*,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 등록 의무화

* '16년 식품유형별 매출액이 10억원이상(2단계) 34개소 371개 품목 등록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무화 302개소

- '20년도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수는 8,769개소로 당초 목표(8,300개소) 대비 105.7% 달성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를 위한 산업체 지원 지속 추진

- 산업체의 이력추적관리의 차질 없는 등록을 위하여 제도 설명회 개최, 콜센터 운영 및 현장 기술지원 등 추진(연중)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③	계란·닭·오리 이력제 안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도재규 사무관 T.044-201-2346)

1. 과제내용

- '20.1월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에 따라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정화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육단계 신고정보 정확도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현황 신고정보 관리 - 닭,오리 사육현황 검증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금농장 사육현황이동 신고 편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경영자용 모바일 신고시스템 개발운영 ○사육신고 적극 유도 및 검증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농가 대상 사육현황 등 신고 안내 - 가금농장 신고내용 검증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포장·판매 등 유통단계 현장 점검 및 이력신고 편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체계 구축 - 현장업무 효율화 및 편의개선 -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 간편 전산신고용 ERP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모니터링(주간/상시), 업무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미준수 업체 중점관리, 신규참여 유도 - (포장처리) 묶음번호 사용요령 개선 - 이력표시장비 지원(570개 업소) * 닭·오리 도축 78.8%, 포장 15.1 등 - ERP개발지원(10개), 전산연계(14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업소 중점 교육, 민원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공 - 상담품질 및 민원관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9 비대면 교육 지원 및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QR), 동영상 매뉴얼 제공 - 원격지원상담, 전문상담인력 양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닭·오리·계란이력제 인지도	79.0	76.4

* (측정방법) 축산물이력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매년 12월, 국내산 축산물을 직접 구입(3개월 이내)한 소비자(만 19세 이상) 1,000명(지역별 거주인구 비례할당))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20.1.1)으로 단계별 제도 안정화 추진

- (사육) 농장경영자의 닭·오리 사육현황 및 이동 신고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시스템 운영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 체계 마련
 - *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 농장 간 이동 신고, 종란·부화용알 입란신고
- (도축·포장·판매) 유통단계 현장점검 및 이력신고 편의 지원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계 구축, 시스템 연계,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 전산신고 내용 간소화 등을 통해 신고 의무자의 편의성 증대
 - * 닭·오리의 도축실적, 포장실적 및 판매내역 신고 편의 및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
 - * (PC→모바일 기반) 현장의 열악한 전산환경 극복, 영세·고령 사업장의 참여 활성화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 참여자별 제도 준수사항 안내, 이력시스템 사용요령 동영상매뉴얼 제공

□ (한계) 계란 표시체계 일원화 요구*에 따라 난각표시 정보로 계란 이력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계란이력제 개편 필요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의 조정 결정(12.2)

4. 향후 추진계획

□ 난각표시를 활용한 계란이력제 추진방안 마련·시행('21.1~12월)

-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 등 입법 추진
- 계란이력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 법령 및 시스템 정비 후 의무이행업체 대상 제도이행 교육·홍보

3-1-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④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담당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지현 사무관, T.044-200-5447)

1. 과제내용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

-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대중성 품목을 선정하여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시범운영 추진('19~'21)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이력제 물품·인력 지원 및 홍보 추진('20.4~12)	○ 참여 업체(의무화 시범업체 18개소, 자율참여업체 56개소) 물품 및 인력 지원('20.12)
○ 비축수산물 이력제 시범도입('20.5)	○ 비축 수산물 가공품(참조기, 마른 멸치) 이력제 등록 판매('20.5)
○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단계적 (대형→중대형) 확대('20.4~12)	○ 기업형 슈퍼마켓 4개소(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판매처 확대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20.4~12)	○ 협의회의 개최(총 5회/ 중대형 유통 판매처 2회, 시범품목 가공업체 3회)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43	43.6

* 산출 근거 : 수산물이력제 인지도 설문조사(리커트방식, 성인남녀 2,500명 대상으로 1,090명이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에 답변)

3. 성과 및 한계

- 제수산 활광어 이력제 도입 확대(홈플러스 115개소) 및 비축수산물 가공품에 이력제 시범도입(참조기, 마른멸치)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컨설팅 및 인력교육에 어려움 발생
 - 홈페이지 내 1:1 질의응답 게시판 개설·운영 및 교육교재 배포

4. 향후 추진계획

- 현장 컨설팅 및 인력교육 비대면
 - 홈페이지 내 1:1 질의응답 게시판 개설·운영 및 교육교재 배포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평가 용역 추진('21.2.~)
 - 굴비, 생굴에 대한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18.12~'21.12)에 대한 평가 및 신규 의무화 품목 발굴, 업체 지원을 통한 이력제 경쟁력 강화

3-1-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선
①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T. 043-719-2055)

1. 과제내용

- 위해식품 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시스템 설치 중소매장 사후관리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중소매장 시스템 운영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중앙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소매장에 위해식품 정보의 정상 수신 여부 등 모니터링(상시) - 중소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원격 지원
○ 중소매장 장애처리 콜센터 운영 및 현장 기술지원(상시)	○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발생 중소매장에 대한 콜센터 상담 및 기술지원(상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해식품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고도화	운영	운영

3. 성과 및 한계

- 위해식품 판매차단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매장의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 시스템 설치 매장의 위해식품 정보 수신현황, 위해식품 정보 조치 결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해결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위해식품판매차단 관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사후관리 지속
-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장애발생 중소매장 등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시스템 운영률 제고 및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 콜센터 운영, 현장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예산확보(319백만원)

3-1-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①	농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광병배 사무관 T.044-201-2221)

1. 과제내용

- 농산물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과부류 공영도매시장 위생관리 평가

2. 추진실적

- 주요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농산물폐기량(쓰레기) 감축 노력 평가 - 각 도매시장의 쓰레기 감축 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및 쓰레기 감축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폐기물 감축실적 평가(20.9) - 쓰레기 감축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쓰레기 감축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시장 개설자(지자체)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공판장 위생관리기준 운용 및 준수 여부 평가 - 공영도매시장·공판장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위생관리 노력 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공판장 위생관리 평가(20.9) - 위생관리 계획수립 및 내용의 적절성, 도매시장 위생시설관리기준 매뉴얼 등 관리·운영 성과에 대한 시장 개설자(지자체) 평가 실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전년대비 농산물 폐기량(쓰레기) 감축	전년대비 도매시장 내 쓰레기량 감축 여부	(19) 62,196톤 → (20) 56,729톤 감축실적 : △8.79%

3. 성과 및 한계

□ 도매시장 농산물 폐기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 도매시장 내 폐기물 배출량은 표준규격 출하 확대 등 배출량 감소 노력과 위생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8.79% 감소

* ('19 배출량) 62,196톤 → ('20) 56,729톤, 전년대비 △8.79%

<도매시장별 세부내역>

(단위 : 톤)

도매시장(구분)	2019	2020	증감율(%)
서울가락	15,236	10,527	△30.91
서울강서	2,935	2,260	△23.00
부산엄궁	5,425	5,812	7.13
부산반여	8,300	9,017	8.64
대구북부	9,972	9,931	△0.41
인천남촌	3,656	2,137	△41.55
인천삼산	2,063	2,192	6.25
광주각화	4,593	4,457	△2.96
광주서부	825	568	△31.15
대전오정	2,596	2,490	△4.08
대전노은	3,705	3,962	6.94
울산	558	488	△12.54
구리	2,332	2,888	23.84
합계	62,196	56,729	△8.79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 평가보고서, 도매시장 통계연보

□ 도매시장 시설은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농산물 폐기물 집하시설의 기능성 점검과 단계적 시설현대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도매시장 내 위생환경 개선노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도매시장 농산물 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감소 노력 우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도매시장 위생관리 평가제도 개선

3-1-③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②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 개선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상훈 사무관 T.044-201-2338)

1. 과제내용

-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 의무화('19.4.25, +1년 제도)
 -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18.4.25 시행)
- 제도시행에 대비 계란유통센터 신·증축을 지원하고, 기존 계란집하시설의 선별포장업 허가를 유도
 - * '20.1월 기준, 선별포장업 142개소 허가(2,678만개/일, 일 평년생산량의 67% 수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선별·포장 처리시설의 확충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 소규모농가의 선별포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처리시설 위탁처리 물량 확대 유도 ○ 지자체와 협업하여 제도시행 현장 준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와 계란유통상인간에 선별·포장 주체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사업자 '19.12.(신축 1개소, 증축1), '21년 사업자 '20.10(신축 1개소) 선정 - '20.12월 현재, 공동처리 가능시설 146개소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월) 84개소 → (12월) 146개소 ○ 산란계 농가의 선별포장제도 준비 상황 전수조사 2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1.30, (2차) 3.30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20.6.30.)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계란 선별포장 유통 실적(%)	63.8	127.2%

* 성과지표 측정방법 : (계란 선별포장 유통량 / 계란 생산량) *100

- 선별포장 유통량('20.12, 식약처) : 5,957만개/일
- 계란 생산량('20.12, 가축동향조사) : 4,683만개/일

3. 성과 및 한계

□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선별·포장 처리시설의 확충

○ 원활한 계란유통센터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 '20년 사업자 '19.12(신축 1개소, 증축1), '21년 사업자 '20.10(신축 1개소) 선정

○ '20.12월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40개소 허가('20.1월 142개소)

* 당초 계란유통센터 등 농장 외부 선별포장장을 통해 유통을 계획하였으나, 농장 내 선별포장장 영업 허가(식약처)로 예상보다 많은 계란 선별 포장에 가능해짐

□ 산란계 농가, 유통상인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가정용 계란의 선별 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산란계 농가의 선별포장제도 준비상황 전수조사 실시(2회)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20.6.30)

4. 향후 추진계획

□ 산란계 농가, 유통상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포장 유통 제도 추진 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 등 추진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①	농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박진국 사무관, T.043-719-3211)

1. 과제내용

- 농산물 유통 길목인 전국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20년)
 -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중 24개소에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중('19년 기준)
- 식품 사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점검·검사·홍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사소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2개소 신규 설치(12월, 국비 14억원) -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연중) ○ 식품 사용불가 농산물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대상 점검(9월) -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현장검사소 추가설치 및 잔류농약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사소 2개소(진주·충주) 추가 설치 * 공영시장 거래물량의 97.2% 신속검사 체계 구축 - 잔류농약 검사 수행 (총 58,162건('20.12월기준), 부적합 520건) ○ 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산물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령시장 내 업체 대상 점검·홍보 (온·오프라인 총 1,117건, 부적합 39건) - 식약공용 농산물 수거·검사 (총 407건, 부적합 11건) * 부적합 물량은 회수·폐기 등 조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검사*(건수)	27,000	47,801

* 전년도('19년도) 대비 잔류농약 검사물량(25,000건) 대비 8% 상향 설정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목표치(27,000건) 대비 47,801건('20.12월기준) 검사완료(177% 달성)

○ 전체 현장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물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부적합(504건)을 적발

- 특히, 현장검사소 검사를 통해 차단한 부적합 물량이 전체 물량의 약 99.4%를 차지할 만큼 유통 전 차단 효과가 높음

구분	전체	현장검사소 외	현장검사소	
		유통 中	경매 前	유통 中
검사 합계(건)	58,162	10,361	20,064	27,737
적합(건)	57,642	10,344	19,706	27,592
부적합(건)	520	17	294	209
전체 대비 비율(%)	100	3.27	56.54	40.19
폐기량(kg)	23,284.04	138.75	20,808.20	2,337.09
전체 대비 비율(%)	100	0.59	89.37	10.04

□ (한계) 농산물 등 안전관리 업무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현장검사소에 대한 지원 필요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재료비 지원 등을 통한 검사물량 확대 유도로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현장검사소 농산물 검사 재료비 등 국고지원 예산 확보 추진('21년)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②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축산 농장 등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 검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제도(NRP) 도입 추진(식약처 협업) - 원유(原乳) 잔류물질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시범조사사업 추진 ○ 농가, 도축장 식육,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 (NRP) 도입('20.7.1. 시행, 식약처 협업) - 농식품부가 검사계획(NRP)을 수립* 하고, 시·도에서 검사하는 체계 구축 * 원유 300건 대상 동물약품·농약 등 기항목 검사 → 324건 검사, 부적합 8건(모두 폐기 조치하여 시중유통 원천 차단) ○ 식육, 식용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추진 * 잔류물질 182천건, 미생물 123천건('20년)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검사건수 목표 대비 완수율(%)	100	100

* 20년 목표 계획 건수 17만건 기준(식육·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및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우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해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20.7.1)하여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현행) 집유장 민간검사 ⇨ (추가) 집유장 민간검사 + 정부검증(검사)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총리주재) 안건 보고('20.6.9)

- '20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원유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실시('21년~)
-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시행('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김돈환 사무관 T. 043-719-3245
 변성근 사무관 T. 043-719-3242)

1. 과제내용

- 원유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검사
 - 현행 민간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에 추가하여 정부차원의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도입 운영
- 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확대 실시
 - 생산단계(농가, 도축장 식육, 식용란) 및 유통단계(계란, 닭고기 등)에서 이중 점검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확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운영 - '19년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사업 결과분석(3월) - '20년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 세부계획 수립·시행(7월) ○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계획 등 수립·시행 - '20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운영 - '19년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사업 결과분석(3월) * 324건 검사, 부적합 8건(모두 폐기 조치하여 시중유통 원천 차단) - '20년 원유 잔류물질 검사 계획 수립·시행(7월) ○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검사계획 등 수립·시행(2, 8월) - '20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2월, 농식품부·지자체) - 유통단계 계란 등 잔류물질 수거·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유통 계란 등 잔류물질 수거·검사 세부계획 수립(8월)	검사 계획 수립·통보(8월) * 계란 1,402건, 닭고기 137건, 알가공품 49건(살충제 검사 모두 적합)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성 검사 건수(건)	72,000	128,337

3. 성과 및 한계

- 식육·식용란 외에 원유에 대해서도 국가가 추가적으로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프로그램(NRP)을 도입('20.7.1)하여 유통·소비되는 우유 안전성 강화
 - *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19.12.16), 시행('20.7.1)
-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축산물 위해요인 사전 차단
 - 검출 또는 잔류위반 빈도가 높은 물질에 대한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으로 사전 위생·안전관리 강화
 - 특히 유통계란 살충제 검사 부적합률 감소는 계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핵심적으로 기여
 - * 유통계란 살충제 부적합 : ('17) 1.5% → ('18) 0.2% → ('19) 0% → ('20) 0%

4. 향후 추진계획

- '21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시행('21.1월)

3-1-4	잔류물질 검사 강화
③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 T.043-719-3220)

1. 과제내용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체계 구축·운영
 -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위해 우려 수산물 유통 차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운영(3~12월) ○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5월, 8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처방 또는 부적합이력 동물용 의약품, 금지물질 등 집중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720건) * 동시다분석 동물약품(62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5종), 말라카이트그린 등 금지물질(4종), PCBs,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2종), 알드린 등 유기염소계(8종) ○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5월, 8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처방 또는 부적합이력 동물용 의약품, 금지물질 등 619건 검사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산물 잔류조사 건수	600건	720건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유통·판매 단계의 위해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등 유해물질별 잔류 실태조사
 - 미꾸라지, 조피볼락 등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5건 적발
 - 수산물 품종·생산지역·유통단계별 유해물질 잔류량에 대한 정밀 결과를 분석하여 기준규격 설정 등 정책 수립에 반영
- (한계) 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잔류 개연성이 높아짐
 - 다소비 양식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집중검사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21년도 수산물유해물질 잔류조사 및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집중검사 지속 실시
 -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주로 실시한 유통 중 수거검사를 1차 수집상, 위공판장, 도매시장 등 유통길목 검사로 전환
 -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생산지역 (양식장 등)의 해수·유입수·자재·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원인조사
 - * 해양수산부와 공동 원인조사 실시

3-1-5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반 유통 검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T. 043-719-2055)

1. 과제내용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 통계활용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망 자료를 활용, 안전관리 영향 요인을 고려한 식품유형 수거·검사 실시(연중)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유행 식품 등 수거·검사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식품유형 32개를 지정하여 집중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327건 검사, 339건 부적합 ○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인기제품 검사 확대(분기별 총4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건 검사, 12건 부적합 ** 가정간편식(연중), 하절기 다소비(6월), 가을행락철(9월), 김장철(10월) 등 시기별·테마별 지도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건)	62,200	62,327

3. 성과 및 한계

-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등 안전관리로 소비자 피해 예방
- 가정간편식, 밀키트, 편의점 도시락 등 식품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수거·검사 항목 선정 등 효율적인 수거·검사

4. 향후 추진계획

- 통합망 통계 활용 및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수거·검사 강화
 - 특히, 비대면 수거검사 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거·검사 확대
- * ('19) 412건 → ('20) 701건 → ('21) 1,250건

3-1-5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②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김명호 사무관 T.043-719-19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박현정 사무관 T. 043-719-2055)

1. 과제내용

- 온라인 유행 다이어트 식품 등 소비자 관심제품에 대한 기획조사, 의학적 효능·광고 등에 대한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조사 및 광고내용 검증·공개 - 아이디어 공모전 등 분석 및 소비자 단체 협의 등을 통한 테마 선정 -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점검 및 결과 공개 - 부당광고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기관 및 광고·판매자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조사 및 광고내용 검증·공개 - 설문결과 분석, 소비자단체 협의 통한 기획단속 대상 선정(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분야 : SNS·인플루언서, 온라인 판매 의약품·마약, 쇼닥터, 의학적 효능 표방, 고질·반복업체 중점 단속 - 크릴오일, 과산화수소, 인플루언서 광고 다이어트 제품 등 소비자 관심제품 기획점검 및 결과공개 ('20.1~12, 19회) - 허위·과대광고 사례중심 지자체·지방식약청 공무원, 창업준비자·소상공인, 온라인 광고·판매자 등 대상 교육(4월~12월,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광고판매자 교육은 용역 사업으로 별도 추진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광고 검증단 구성·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식품 등 수거검사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교수·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42명으로 광고 검증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건강증진·여성안심·미세먼지 4개 분과 운영 및 식품분야 광고 검증 4회 - IPTV, SNS, 터미널, 지하철, 전통 시장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근절 홍보 - 전 국민 대상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소비자단체 위탁 4,000명) 홍보 ○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인기제품 검사 확대(분기별 총4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건 검사, 12건 부적합 ** 가정간편식(연중), 하절기 다소비(6월), 가을행락철(9월), 김장철(10월) 등 시기별·테마별 지도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조사	16	19

* 식품분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기획조사 및 보도자료 배포건수

3. 성과 및 한계

- 소비자 관심 제품 집중 기획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소비자 밀접 생활제품인 다이어트, 크릴오일, 유명인플루언서 광고제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점검결과를 주기적 발표로 소비자의 부당광고 인식 확산에 기여
 - * 식품분야 기획점검 보도자료 배포: ('19년) 12회 → ('20년) 19회
 - ** 특히,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내에서 최초 점검 실시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인식 전환 및 추출 용매 등의 안전관리 강화 계기 마련
- 의학적 효능 표방제품의 과학적·객관적 검증 결과 제공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식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여, 소비자 궁금증 충족 및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 * 과산화수소, 타트체리, 여성건강표방식품, 수면영양제 검증 결과 공개
- 부당한 광고 적발시 주로 사이트 차단·시정중심 조치하고 있으나, 반복위반이 근절되지 않아, 고의·상습위반업체 관리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
 - 고의·상습 위반업체 현장 점검 등 집중관리
 - 고의·상습 위반업체 공식 판매사이트, SNS 등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집중 관리

3-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3-2-1 수입 전(前) 관리

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황선순 사무관 T. 043-719-6210)

1. 과제내용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안전관리 상태를 수출국 현지 부터 점검·확인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의 유입을 사전차단
 -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지실사를 비대면 서류심사로 전환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 계획 수립(2월) ○ 통관검사 부적합 이력, 위생안전 문제제기 등 위해우려 업소·품목에 대한 중점관리(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현지실사 추진계획 수립(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실사(서류심사) 전환계획 수립(4월) ○ 해외제조업소 460개소 비대면 실사 실시완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실사 온라인 시스템 개발(6월) - 영상매체 활용 실시간 비대면 실사 시범운영(7~9월) * 영상실사 및 화상회의 10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5.05	5.35

* '17~'19년 실적치 평균(3.73%) 대비 1.57% 높고, '19년 목표치보다 1.65% 상향하여 적극설정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건수] 16,488건 / [전체식품 수입건수] 308,367건 × 100 = 5.35(%)

3. 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류심사 전환으로 위해우려 제조업소 제품의 국내유입 사전차단
 - 서류심사 결과 위해 우려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및 검사강화 조치
 - * 460개소 심사 : 적합 359개소, 부적합 25개소(등록취소 24개소 포함), 보완 76개소
 - ** 수입중단 등 해외제조업소 조치율 : ('19) 14% → ('20) 22%
-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 된 제품 수입률 제고
 - 영업자 책임으로 사전안전관리 되는 우수수입업소 및 OEM수입식품, 비대면 서류심사로 사전안전관리 제품 수입률 지속 증가
 - * 사전안전관리제품 수입률 : ('19) 5.05% → ('20) 5.35%
- 비대면 온라인 심사 시범운영(모바일 영상실사, 화상회의)으로 현지실사 대체 가능성 확인(7~9월)
 - 서류심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검토, 현장점검은 모바일 영상실사를 통해 현장 확인 가능
 - * 영상실사 및 화상회의 시범실시 : 미국, 일본 등 10개소
- 비대면 서류심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서류심사 법적근거 마련으로 서류 미제출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필요
 - * ('20) 수입검사 강화 조치 → ('21) 수입중단 조치

4.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서류심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법」 개정('21.6월)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21.6월)
-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업소 현지실사 대상 선정(410개소)
-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심사 추진(50개소)
 - * 통관단계 부적합 업소를 중심으로 정보화 환경, 시차 등 고려 대상선정

3-2-①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②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해외제조업소 사전점검제 도입

(담당자 :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권혁승 사무관 T.043-719-2162)

1. 과제내용

-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준 강화
- EU, 중국 등 제외국에서 영유아용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최근 프랑스산 산양분유 등 부적합 사례 지속 발생
 - 취약계층인 영유아 대상 식품등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통해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필요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6월) -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신규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대상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7월) - (통관단계) 강화된 기준 규격* 적용,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 모두 적합(영유아용·성장기용 27건) * 가공식품 22개 유형 중 과자류 등 21개 유형의 미생물 등 기준 규격 강화 ** 일반 가공식품 및 축산물 : 5~6% → 영유아 조제유류 : 12% - (사전단계) 영유아용 수입식품 생산 해외제조업소 중 전년도 부적합 발생 업소(1개) 현지실사 실시 ⇒ 적합 - (유통단계) 온·오프라인 판매제품 수거·검사(100건), 해외직구(191건) 구매·검사 실시 ⇒ 모두 적합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국회 제출	미제출 * 대안 마련·추진

3. 성과 및 한계

□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해외 사전 안전관리 사례 수집·검토(4~6월)

- (문제점)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사전점검제를 도입한 제외국 사례가 부재하여, 도입 시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 국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 후 생산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식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추진 한계
 -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등 통상마찰 가능성 고려, 영유아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영유아 대상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7월)

□ 영유아 대상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통관단계) 강화된 기준 규격* 적용,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 모두 적합(영유아용·성장기용 27건)
 - * 가공식품 22개 유형 중 과자류 등 21개 유형의 미생물 등 기준 규격 강화
 - ** 일반 가공식품 및 축산물 : 5~6% → 영유아 조제유류 : 12%
- (사전단계) 영유아용 수입식품 생산 해외제조업소 중 전년도 부적합 발생 업소(1개) 현지실사 실시 ⇒ 적합
- (유통단계) 온·오프라인 판매제품 수거·검사(100건), 해외직구(191건) 구매·검사 실시 ⇒ 모두 적합

4. 향후 추진계획

□ 영유아 대상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지속 운영

3-2-①	수입 전(前) 관리
③	수입위생평가 확대 및 전문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강성필 사무관 T. 043-719-6202)

1. 과제내용

- 수입 전 수출국 위생체계 평가를 통하여 국가단위의 안전성 확보
 - 수출국에서 스스로 한국의 법령·제도와 동등 수준으로 관리함을 입증하는 방식으로의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 전문성 강화
- 식약처와 농식품부 간 소통 활성화 및 정보공유를 통해 단계별 차질 없는 수입위생평가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입위생평가 표준설문서 마련(5월)	○ 수입위생평가 표준설문서 마련(5월) * 자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한국과 동등함을 수출국 입증·제시
○ 수입위생평가 매뉴얼 발간(7월)	○ 수입위생평가 매뉴얼 발간(6월) * 위생평가 각 단계별 평가기준 및 방법 정립
○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2개국)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실시
○ 수입위생평가 연구모임 계획 수립 및 운영(10회 이상, 연중)	○ 수입위생평가 연구회 운영(12회) * 설문서 개선, 위생증명서 표준서식 연구개발
○ 수입위생(위험)평가 협의회 개최 (연2회 이상)	○ 수입위생(위험)평가 협의회(4회) * 전산시스템 연계, 공통설문서 마련 협의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위생평가 현지조사 건수	2	미달성*

*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지속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수행불가

3. 성과 및 한계

- 수입 전 수출국 위생평가를 통한 국가단위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수출국 위생관리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현지조사, 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등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
 - * (설문서 송부) 12개국 15건, (답변서 검토) 8개국 11건, (수입허용) 3개국 5건
 - 수출국의 제도, 시스템, 기준 등이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수준과 동등함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서 및 평가기준 개정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수입위생평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 위생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수입위생평가연구회' 운영(12회)
-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16.2월) 이전 수입이력이 있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
 - * 위생증명서 첨부 대상 60개국 중 37개국 협의 완료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대비, 평가절차 중 현지조사 대체방안 필요
 - 비대면 현지조사를 통한 절차진행 가능성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축산물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수출국간 지속협의를
 - * 협의 진행 중 23개국간 조기 협의완료 추진
- 수출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비대면 현지조사 방안 마련
 - * 다만, 현지조사는 축산물의 최초 수입허용을 위해 국가 전체 위생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은 최소화

3-2-①	수입 전(前) 관리
④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적용 추진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황선순 사무관 T. 043-719-6210)

1. 과제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김치 등 국내 HACCP 의무적용 식품과 동일하게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적용 의무화를 추진하여 사전 안전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입식품 HACCP 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4월)	○ 「수입식품법」 개정으로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 제도 마련(4월) * 개정(4.7) / 시행('21.7.1) / 의무적용('21.10.1)
○ 수입김치 HACCP 적용대상 선정한·중 협의(6월)	○ 수입김치의 주요수출국인 중국과의 국제협력(연중) * 한·중 실무회의 요청(11회), 한·중 경제공동위(7월) 및 FTA SPS위원회(8월) 의제제출
○ 중국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7~12월)	○ 수입김치 HACCP 적용 지원을 위한 선행요건 및 관리지침 등 표준기준서 중문본 제작(11월) * 코로나19 확산·지속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을 서면자료로 대체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현지 설명회 개최(10월)	○ 수입김치 HACCP 적용시기·인증 방식 등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김치생산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의견수렴(4회, 7.27~9.3) * 코로나19 확산·지속으로 국내영업자 대상 설명회로 대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개정	개정

3. 성과 및 한계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수입식품 중 원료관리·생산단계 등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에 국내 HACCP 기준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 적용
 - * 수입식품법」 개정(4.7) / 시행('21.7.1) / 의무적용 시행('21.10.1)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시행 대비 국제협력 강화
 - 對한국 김치 수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대상 지속협약
 - * 한·중 실무회의 요청 서한 11회 발송, 한·중 경제공동위('20.7월) 및 한·중 FTA SPS위원회('20.8월) 의제 제출 등
- 해외 김치제조업소 HACCP 적용을 위한 표준기준서 마련
 - 수입김치 HACCP 적용 선행요건 및 관리지침 등 중요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기준서 중문본 제작(11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측과 협의 및 현지 출장이 불가 및 중국 김치 제조업소 HACCP 적용대상 선정, 현장 점검 및 기술지원 한계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 HACCP 적용으로 인한 무역마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방향* 설정(4회, 7.27~9.17)
 - * 수출량 상위 업소 단계별 적용, 수출국은 김치 제조업체 HACCP 인증·한국은 사후관리

4. 향후 추진계획

- 수입 김치 HACCP 조기 제도 정착을 위한 한·중 실무회의 개최('21.3월)
 - HACCP 인증방식 및 김치 제조업소 기술지원 사업 대상 선정 등 협의
- 수입김치 제조업소 기술지원('21.5~11월)
 - 김치 제조업소 현장조사 및 업소별 맞춤형 HACCP 가이드라인 제공
 - ※ 코로나19 지속·장기화로 현지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3-2-②	통관 단계 관리
①	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박진아 사무관 T.043-719-2210
수입검사관리과 장현철 사무관 T.043-719-2220
수입검사관리과 가정훈 사무관 T.043-719-2230)

1. 과제내용

- 위해정보 및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강화
 - 국가·품목·유해물질 검출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 및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선정
 -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위해정보, 검사정보 등을 분석하여 검사대상 선정, 집중검사
- 위생증명서 허위신고 등 위변조 차단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정밀 및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 부적합·위해 검사항목 위주의 중점 검사항목 선정(6,12월) 및 제품특성(식품 축수산물)을 반영한 검사(연중)
○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전승인 받은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 통관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추진	○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된 제품 수입신고 시 자동수리 (72개품목, 1,281건, 34,130톤)
○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	○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28,082건, 71,274톤)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 호주산 식육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시범운영 - 양고기(7.1~), 쇠고기 등 전체 식육(11.1~)으로 확대 ○ 수출국 정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수입 위생약정 확대(7개국 → 8개국) - 한-노르웨이 위생약정 신규체결(9.23)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부적합율(%)	0.8	0.78

* 상가지표는 수입 식품·축·수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위해요인 등이 없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 통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지표임.

-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부적합율(%) = 수입식품등 검사 부적합 건수(1,029건) / 수입식품 등 실험실 검사건수(132,344건) × 100

3. 성과 및 한계

□ 부적합·위해 검사항목 위주의 중점검사 및 단성분 농약검사

- 식품·수산물·축산물 제품 특성을 반영한 검사계획 수립(반기별)

* ('20년 하반기) 식품(무작위표본)·수산물(중점관리)·축산물 검사계획 수립(6.29~6.30)
(‘21년 상반기) 식품·수산물·축산물 검사계획 수립(12.28)

- 해외 검출정보,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단성분 농약검사(분기별)

* (신규지정) 대마씨유 함유 제품 THC 검사(6.23~), 고품차 금속성이물 검사(8.4~), 중국산 염장바지락살 A형 간염 바이러스(6.10~), 미국산 소족 니트로푸란(9.28~) 등

- * (부적합) 미국산 대마씨유(3건), 인도산 고행차(1건), 벨기에산 영아용이유식(1건) 등
- * (단성분 농약) 2분기(3.26, 펜프로피모르프 등 6개), 3분기(6.26,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4분기(10.8, 피디플루메토펴 등 5개) 단성분 농약검사

□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등을 수입하도록 동기 부여

- 안전성 확보된 신속통관 승인대상 제품 수입신고 시 자동 수리

- * '20년 운영 현황 : 23개소, 72개 제품 / (1~11월) 1,150건(30,961톤)

- ** 정밀검사 대상(규격강화, 위해정보 지시) 자동 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 수출국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우려 식품 수입 원천 차단

- 호주산 쇠고기 등 식육(호주산 수입축산물의 97%에 해당)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시범운영

- * 양고기(7.1~) 및 쇠고기 등 전체 식육(11.1~)

- 수출국 정부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수입 위생약정 확대(7개국 → 8개국)

- * 한-노르웨이 위생약정 신규체결(9.23), 한-칠레 위생약정 발효(3.27)

4. 향후 추진계획

- 부적합 재수입식품 등 정밀검사 시 중점검사항목 및 부적합 이력 항목을 포함하여 검사 실시

3-2-2	통관 단계 관리
①	통관검사 및 감시 체계화

관 세 청

(담당자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권태한 사무관, T.042-481-3243)

1. 과제내용

- 위해성분 함유 개인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 기관간(식약처) 제공하는 위해식품정보의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송화물 뿐만 아니라 항공우편물까지 선별기준 적용 확대·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식약처) 공유하던 위해 식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드백 기능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의 검사결과가 식약처에 피드백 될수 있도록 전산기능 개선 협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수출입안전기관 협의회 (11.25) - 관세청 검사 시 식약처가 제공한 개선제품 정보로 확인된 경우 식약처에 검사결과 전송 * 정보전송 방식, 범위 등 전산기능 개선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기준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위해식품 통관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우편으로 반입되는 개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범화물 선별기준 적용을 위한 우편 화물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 안전관리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식약처 검사직원 추가과건 협의* * '20년 수출입안전기관 협의회 (11.25)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성과) ①위해식품 정보 양방향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특송·항공 반입 대응을 위한 ②전문가(식약처) 신규 파견에 대한 기관 간 협의
 - (시스템) 기존 일방향(식약처→관세청) 정보제공 시스템을 양방향(식약처↔관세청) 시스템 개선 추진으로 업무 효과성 증대
 - 관세청 검사 시 개선제품으로 판명된 경우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과를 식약처와 공유하여 운영 효과성 증대 추진
 - * ① 식약처 위해식품 차단목록 재평가 → ② 관세청 통보 → ③ 관세청 개선제품 검사 시 식약처에 결과 피드백
 - (특송·항공) 현재 국제우편세관에 식약처 전문가가 없어 우편물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
 - 국제우편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식약처 전문가 파견 추진으로 식품 안전관리 업무 대응력 향상
 - * 식약처와 추가 인력파견 협의(11.25), 추진방안 지속 논의

4. 향후 추진계획

- 시스템 개선 및 식약처 추가인력 파견 세부사항 기관 간 협의 지속
 - (시스템) 양 기관 실무협의를 통한 전산기능 개선 세부사항(범위, 방식) 논의 및 추가 개선사항 발굴 병행
 - (인력파견) 식약처 인력증원 사항 등 현안 사항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우편세관 등 인력파견 업무 적극 협의

3-2-②	통관 단계 관리
②	보세구역 등 재고조사 강화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이자열 사무관, T.042-481-7825)

1. 과제내용

- 보세구역에 대한 각종 정보, 순찰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보세구역 위험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화물관리
- 보세구역 법규준수도, 화물특성, 위험동향 등을 종합·분석하여 농산물 등 고위험 화물에 대한 집중관리 및 실물관리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활성화 ○ 세관별·보세구역별 현장중심 실물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매뉴얼 제작·배포* (9.14) * 코로나로 인한 집합행사 자제로, 설명회 대신 온라인 교육자료 등재·활용 ○ 고세율 농산물 등 26개 우범물품군 관리 ○ 인천·부산·평택 등 3개 세관 운영 ○ 세관별로 보세구역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현장중심 위험관리 ○ 특별기동순찰팀 편성·운영으로 실물관리 강화(인천항, ~'20.4) ○ 고위험 농산물 일제 재고조사 실시(10.21~11.16, 15개세관)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위험관리 운영경험을 축적, 특별기동순찰팀 및 일제 재고조사를 통한 실물관리 강화
 - 시스템을 통해 보세구역과 우범화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운영매뉴얼을 갖춰 기능숙달 용이
 - LCL화물에 대한 특별기동순찰팀 활동 및 일제 재고조사를 고위험 농산물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물관리강화 활동 지속
- (한계) 시스템 도입 초기로서 데이터 및 활용사례 축적 필요하고, 지속적인 특별기동순찰 활동을 위해서는 인력 뒷받침 필요
 - 양질의 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보세구역 우범정보의 축적,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스템의 활발한 사용이 필요함
 -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한시적('19.11~'20.4)으로 특별기동순찰팀을 운영하고, 소요정원을 요청(행안부 제출)하였으나 미반영

4. 향후 추진계획

- 보세구역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장려
 - 위험모니터링 사용권한 지속 확대('20. 1분기)
 - 직제개편에 따른 보세화물 현장관리 체계 재편('21. 상반기)

3-2-②	통관 단계 관리
③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박진아 사무관 T.043-719-2210)

1. 과제내용

-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확대 실시
 - 위해우려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위해물질을 사전에 검사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 및 영업자 책임의식 고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명령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규 검사명령 대상으로 선정(분기별) -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제외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명령 대상품목 확대(3, 5, 8,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릴오일(에톡시퀸 등 6종), 구기자(잔류농약 6종), 바질(잔류농약 8종), 분말형태 천연향신료(이물) 4품목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14품목 → ('20년) 18품목 - PCRM 발송, 홈페이지 공지 및 수출국 서면 통보(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수입업체 및 대행업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검사명령 대상 품목 추가	4	4

3. 성과 및 한계

-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수입하도록 검사명령제를 운영(14개 → 18개 품목)하여 사전안전관리 강화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입자에게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명령
 - * 검사명령 검사건수(부적합) : ('18) 2,073(46) → ('19) 2,440(65) → ('20) 1,718(53)
 - 통관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률, 검사명령 기간 중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명령 대상 신규지정·기간연장·해제 등 결정(매분기)
 - * 크릴오일 등 신규지정 4개(3.27, 5.28, 8.12, 9.29), 재지정 10개(4.7, 6.8, 8.12, 9.29, 11.11, 12.15)
- 검사명령 신규지정에 따른 영업자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
 - (이해관계인) PCRМ(팩스, 이메일 등) 발송, 홈페이지 공지 등 사전 홍보실시(4회)
 - (수출국) 검사명령 대상제품 수출국에 검사명령 실시 사전 알림(4회)

4. 향후 추진계획

- 부적합 반복 발생 수입식품 등에 대한 사전 안전강화를 위해 검사명령 대상 신규 품목 확대(연 4회)
 - * 검사명령 운영 현황: ('20) 18개 품목 → ('21) 기존 + 신규 4품목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①	거래내역 신고강화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 T.042-481-7851)

1. 과제내용

□ 수입식품 유통이력신고 점검 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시기별로 집중 감시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시기별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 실시 ○ 수입·유통업체의 유통이력신고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유통이력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통이력 관리품목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점검 업체 2,011곳) 등을 통해 유통이력 신고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이력 신고위반 적발 46건, (과태료 2,400만원 부과) - 원산지위반 적발 22건(717백만원) ○ 유통이력제도 설명 홍보물품 및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릿 5만천부, 홍보물품 1만개 ○ 집중 홍보기간 운영(1·9·11월) ○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20.10.1. 수산물 유통이력 업무 이관 완료 - (농림부) '22.1월 농산물 유통이력 업무 이관 예정*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중</p>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취약 시기별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 사전차단

○ 유통이력신고 실태 집중점검(설명절, 김장철 등)을 통해 2,011업체 점검, 46건 적발(과태료 2,400만원 부과)

* 냉동조기, 명태 등 수산물 17종, 김치, 콩, 팥 등 농산물 9종

□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유통이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농·수산물의 경우 전문성 있는 소관부처로 업무 이관 추진

○ (수산물) '20.10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해수부로 이관 완료

○ (농산물) 관계부처 협의 완료 및 농식품부 관계 법령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22년 업무이관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지속 추진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②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사무관 T.043-719-6256
수입유통안전과 설찬구 사무관 T.043-719-6257)

1. 과제내용

- 유통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검사 추진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수입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 식품 수거 검사 강화(연중)	○ 국민다소비식품, 장기간 서류통관, 부적합 이력,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품목 등 수거·검사(7,331건)
○ 잠재적인 이슈관리를 위한 수거 검사(연중)	○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수거·검사(511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유통 수입식품 수거 검사 건수(건)	7,500건	7,842건

- * 지방청별 수거·검사 실적 : 서울청 1,099건, 부산청 1,337건, 경인청 1,462건, 대구청 1,285건, 광주청 1,318건 대전청 1,341건
- * 품목별 수거·검사 실적 : 가공식품 3,371건, 농산물 1,618건, 수산물 1,270건, 축산물 1,180건, 건강기능식품 403건

3. 성과 및 한계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장기간 서류통관 제품, 부적합 이력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

* 설·추석 명절(1, 9월), 발렌타인데이(2월), 가정의 달(5월), 성탄절(12월) 성수식품 등

□ 검사 부적합 제품 및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제품 등 수거·검사 및 사회적 이슈품목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

○ 수입 크릴오일 제품의 에톡시퀸 및 추출용매 부적합 보도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 확산 → 유통제품 신속 수거·검사 및 결과 발표

* 총 140건 수거, 49건 부적합(회수·폐기 조치)

○ 소비자원 등에서 분말제품의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검출 문제 제기 → 품목별 수입량 상위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 검사 및 결과 발표

* 총 47건 수거, 2건 부적합(회수·폐기 조치)

□ 소비자 식품 구입 시 안전성 외에 고려하는 영양성분 검사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 급증(25%)*에 따른 기능성분 관리 강화 필요

* 건강기능식품 수입량: ('19.1~10) 12,841톤 → ('20.1~10) 16,043톤(25% ↑)

4. 향후 추진계획

□ 수입식품(다소비 및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기능성분 검사(연2회)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및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사회적 이슈제품 등의 수거·검사 지속 추진(연중)

3-2-③	수입 후(後) 관리
③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사무관 T.043-719-6256
수입유통안전과 설찬구 사무관 T.043-719-6257)

1. 과제내용

- 인터넷 불법 판매행위, 무신고 수입행위, 다빈도 행정처분 수입업체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 도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연중)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 다빈도 행정처분 업체, 최근 3년간 미점검 수입실적 상위업체 등 1,750개소
○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추진(수시)	○ 위해정보 등에 따른 특별 지도·점검(30개소)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점검(연중)	○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 개인 휴대반입품 판매 도·소매업체, 고의·상습 위반업체 등 1,561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수입식품 영업자 점검 건수	1,107건	1,750건

* 지방청별 지도·점검 실적 : 서울청 556건, 부산청 367건, 경인청 390건, 대구청 142건, 광주청 135건 대전청 160건

3. 성과 및 한계

- 선제적 유통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 조치로 부적합 식품 유통차단 및 국민 안심 확보
 - 최근 3년간 「수입식품법」 위반(행정처분 이력) 업체 및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수입실적 상위 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 * 지도·점검 : ('19년) 1,006개소/23개소 부적합 → ('20년) 1,750개소/35개소 부적합
 - ** 업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 무신고 기구·용기(고무장갑, 감자칼 등), 유통기한 변조 등 통관단계에서 관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수입업소 지도·점검 강화(30개소)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특별 점검(12회, 누계 7,774개소)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상시점검 8회, 정부합동점검(식약처·농림부·지자체 등) 4회

4.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연중)
- 위해정보 등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점검 추진(수시)
-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강화(연중)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①	보따리상 등 휴대반입식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박주환 사무관 T.043-719-6252)

1. 과제내용

-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 실시로 유해 반입식품 차단
 - 중국·일본 등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항구별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위해 우려 차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반입식품 구매·검사를 통한 안전관리(주2회, 1,300건) - 4항구(인천, 평택, 군산, 부산) 보따리상 (개인휴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영향으로 '20. 1월 이후 보따리상 반입 실적 없음 - 20년 구매·검사 실적 : 총 35건(인천항 8, 평택항 27), 검사결과 모두 적합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화객선 휴대반입식품 수거·검사 건수	1,300	37

3. 성과 및 한계

- '20년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보따리상 휴대식품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우려되는 유해반입식품 반입이 불가한 상태임
 - * 본 과제의 목적인 '유해식품 안전관리 목적'은 사실상 달성함

4.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보따리상 휴대식품 국내 반입 재개 시 구매·검사 실시 예정

관 세 청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헌주 사무관, T.042-481-7831)

1. 과제내용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
 - 농축수산물 반입 기준 엄격 적용 등 유해식품 반입 방지
 - 식품검사 부적합 물품 반입 차단 및 우범여행자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과다 반입 방지를 위한 통관관리 강화 ○ 휴대 반입 식품 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 확인 철저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 우범여행자 선별 및 휴대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ray검사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반입 총량(40Kg)·품목별 (5Kg) 기준 엄격 적용 및 초과 시 전량 유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평택/군산)보따리상 반입 물품 33,798건 면세범위 준수여부 확인 ○ 식약처 식품 부적합 통보 물품 반입금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 수거검사) 30건 ○ 사전선별 우범여행자 집중검사* 및 중국 위해, 연태 등 유해식품 반입지역 여행자 휴대품 전량 X-ray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선별)181명, 총 202건 검사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자 휴대반입식품의 안전 관리

○ 불법의약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등 국내 반입 차단

- 사슴태반 영양제 등 불법의약품 미신고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68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대상 물품 관계 기관 인계 철저(26천건)

○ 항만 보따리상* 검사 강화를 통한 1인당 농산물 면세범위 엄격 적용

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보따리상 입국횟수(A)	424,436	445,790	498,296	33,798
농산물 반입실적(톤)(B)**	20,867	18,722	19,546	1,357
1회 평균 반입중량 (kg, 추정)(B/A)	49	41	39	40

* 대중국 항만 여행자(입국 횟수 3회 이상/1개월), '20년 코로나19로 대폭 감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중국發 선박 이용 보따리상 휴대 반입 식품 검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식품 부적합 통보 제품 반입금지 실시

* '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총 30건(식품정보활용시스템)

○ 사전 선별 우범자* 철저 검사 및 중국 위해, 연태 등 유해 식품 빈번 반입 지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전량 X-ray 검사 실시

* 181명, 202건 검사(유치 11건, 검역인계 4건)

4. 향후 추진계획

여행자 휴대반입 식품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 불법의약품 및 검역대상 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검사 강화

보따리상 휴대반입 물품 검사 및 농산물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식약처 기준 부적합 식품의 철저한 반입 차단 및 보따리상 집중검사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②	해외직구제품 등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최은주 사무관 T.043-719-6256)

1. 과제내용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

-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 우려 식품 구매·검사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구매검사(1,500) ○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 차단(상시) ○ 해외직구식품 주의사항 홍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검사* 1,63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 표방 등 위해우려식품, 취약계층식품(분유, 이유식 등) ○ 국내반입차단* 44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검사 부적합 제품, 해외 위해정보 제품 → 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 ○ 해외직구식품 주의사항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뉴스(4월, 6월), 보도자료(8월, 9월, 영상송출(서울정부청사(7~12월), 공항철도 및 지하철 행선안내기(10월))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	1,500	1,513

3. 성과 및 한계

-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강화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성과 달성
 - 해외직구식품 규모는 해외직구 전체 시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시장의 30%로 소비자 구매제품 1순위 차지
 - * 식품 : ('16) 578만건 → ('17) 779 → ('18) 997 → ('19) 1375(37.9% ↑)
 - ** 전체 : ('16) 1,740만건 → ('17) 2,359 → ('18) 3,226 → ('19) 4,299(33.3% ↑)
 - 또한,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구매검사 강화*
 - * 구매검사 건수 : ('19) 1,300건 → ('20) 1,630건(전년 대비 25.4% 증가)
 - 구매검사 및 해외 위해정보 등으로 확인된 위해식품 국내 차단*
 - * 차단 건수 : ('19) 309건 → ('20) 442건(전년 대비 43% 증가)

4. 향후 추진계획

- 구매검사 건수 확대 및 검사대상 다양화
 - 구매·검사 건수 확대* : 1,300건('19) → 3,000건('21)
 - * 연구사업(해외직구식품의 소비자 구매 동향 및 안전성 실태조사·분석) 추진
 - 검사대상 다양화 :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다소비 식품(영양제,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국내 이슈제품(시서스 등) 확대
 - * 다이어트·근육강화·성기능개선 표방 식품 위주의 검사 → 다양한 식품 검사

3-2-4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③	자가사용 위장 수입식품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정수민 사무관, T.042-481-7835)

1. 과제내용

해외직구 식품 통관관리 강화

-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위해성분 함유 식품 등 국민 건강 안전 위해 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 추진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위해 식품 등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식품 반입 차단을 위한 목록통관 수하인 검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및 정확도 검증* 강화 * 통관목록 수하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을 비교하여 불일치 시 오류 통보 등 추진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우범화물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강화 및 사후심사 실시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신고정확도 제고를 통해 위해식품 등 불법 물품 반입차단 기반 마련
 -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 시에도 수하인을 식별하여 통관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 * 제출율 : '19년 대비 43.9% 상승, ('19년) 58.3% → ('20년) 83.9%
 -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하는 식·의약품 등 밀수입 등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시도한 건 차단 강화*
 - * 적발건수 : '19년 대비 35.4% 상승, ('19년) 15,654건 → ('20년) 21,202건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통관이 의심되는 빈번반입자나 우범화물에 대한 사후심사 및 검사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위해식품 등 불법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급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고정확도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 강화를 추진하여 위해식품 등 불법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3-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3-3-①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① 영업자 실증(實證) 및 자율심의 제도 정착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 T.043-719-2188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김미자 사무관 T.043-719-2194)

1. 과제내용

- 식품 표시·광고 영업자 실증(實證) 및 민간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영업자 실증) 영업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실증자료가 없는 표시·광고는 금지
 - (자율심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심의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숙취해소”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 표준 실증 가이드라인 마련	○ 숙취해소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 마련 * 정의, 시험자수, 시험시간, 설문지 조사 방법, 평가지표 및 시험방법 등 제시
○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내용에 대해 영업자에게 실증자료 요청 및 검토 - 실증자료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실증 자문단 운영	○ 내부계획 및 민원신고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 추진 - 아보카도오일, 식물성콜라겐 등 8개 주제(65개 업소) - 실증위원회 전문분과(5개) 구성·운영
○ 자율심의기구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건강기능식품의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 등 재심의 추진(2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표시·광고 실증 및 자율심의 이의신청 심의 건수	10	10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내용에 대해 영업자에게 실증자료 제출 요청 및 검토한 주제별 건수 + 자율심의 이의신청 심의 추진 건수

3. 성과 및 한계

-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표현에 대해 영업자에게 객관적·과학적인 실증자료 제출 요청 및 검토
 - 아보카도오일(2개소), 식물성콜라겐(3개소), 바이러스 소독력(1개소), 생맥주(1개소), 숙취해소(21개소), 크릴오일 인지질(34개소), 원조(1개소), 브로콜리새싹분말(2개소) 8개 주제, 65개 업소 실증 추진
 - (한계) 민원인, 동종 업계 신고에 의한 수동적 실증 위주
- 표시·광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2건) 및 합리적 자율심의제도 정착을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12.29)
 - 법에서 정한 의무표시사항만(법 제4조부터 제6조)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자율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4. 향후 추진계획

- 실증제도 도입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추진
 - 소비경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우려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영업자에게 실증 자료 제출 요구
 - * 실증계획 : MCT오일의 지방산 효능, 기구·용기 항균 등 매월 1건 이상

3-3-①	식품 표시·광고 체계 개선
②	식품 등의 표시정보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조혜영 사무관, T.043-719-2182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 T.043-719-2188)

1. 과제내용

-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 커피전문점 조리커피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방법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 6월)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추진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의원발의(12월) ○ 조리커피 및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산업체·학계 전문가 회의(1.29, 6.2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7.2) * 강병원의원 등 13인 ○ 조리커피 및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권고 규정 마련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9.9.)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9.18.) -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강화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 추가)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9.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 건수	2	4

*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역: ①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의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 표시, ③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④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성과 및 한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입법 추진(법률안 의원발의, '20.7.2)

○ 소비자단체·산업체·학계 등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기한 도입 방안 협의 및 법률 개정 추진으로 법적근거 마련 노력

□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커피 및 건강기능식품에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9월, 시행규칙 개정)

4. 향후 추진계획

□ 조리커피의 카페인 표시가 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표시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21.1, 고시 개정)

3-3-②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
①	민간 플랫폼 등 활용 식품안전정보 전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정진목 사무관 T.043-719-4052)

1. 과제내용

-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플랫폼 등 대국민 접점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11월) ○ 식품안전나라 웹 접근성 개선 ○ 식품안전나라 붙임파일 즉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등을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제공(11월) *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및 위생등급 정보 ○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이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접근성' 개선(12월) ○ 각종 첨부파일을 별도 프로그램 없이 즉시 확인가능한 문서뷰어 서비스 적용(10.23)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민간플랫폼 연계 건수	3건	3건

3. 성과 및 한계

- 배달앱, 맛집정보 제공사이트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등) 제공으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 ('19) 13개(배달앱·네이버 등) → ('20) 16개(한국에자이, 필로시스생명과학 등 앱)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및 지원 필요
 - 민간분야(스타트업)에서 편리하게 식품정보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및 동반성장 지원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배달앱·건강앱 등 대국민 접점에서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제공 확대
 - * ('20) 배민·요기요·포털 등 16개 → ('21) 쿠팡이츠·배달의명수 등 19개

3-3-③	식품의 영양·위해 정보제공 확대
①	알레르기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제공 확충

(담당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김미자 사무관 T.043-719-2194
 위해정보과 백남이 사무관 T.043-719-1760)

1. 과제내용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
- 해외에서 품질 부적합 등으로 회수되는 제품 등 위해식품 관련 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제공하는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다모아) 운영
 - 해외정보리포터를 통한 다양한 해외 위해정보 수집 및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알레르기 예방 맞춤형 교육 교재, 동영상 자료 개발 및 전국 순회 대상별 교육 실시(연중) ○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다모아)에 어린이,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수행(5~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총 7,028명 교육 이수(소아 1,162명, 초등학생 4,371명, 학부모 454명, 교사 1,041명) ○ 어린이, 임산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34건, 어린이 69건, 청소년 109건, 임산부 250건, 산업체 8,789건 등 * ‘다모아’ 사이트 홍보란을 통해 외국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정보리포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 제공(연중) ○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연중) 	<p>식품 규제·표시정보(41건) 추가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정보리포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309건, 2분기 413건, 3분기 601건, 4분기 337건 ○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위해식품 정보 230건, 해외여행객 주의정보 91건, 수출지원정보 113건 ** 외국위해정보 533건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알레르기 표시제도 교육 인원(명)	3,500명	7,028명
○ 위해정보 조치율(%)*	95.0%	96.6%

* 조치율 = 주요 위해정보 조치건수(544건) / 주요 위해정보 조치요청건수(563건) * 100

3. 성과 및 한계

코로나 19 확대로 비대면 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효율적 교육 수행

해외 식의약 위해정보의 신속 수집·분석·공유 체계 유지

- (성과) 식의약 위해정보 수집 및 국내유통 여부·위해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전 조치 및 참고자료로 제공

* 총 44,982건(식품 24,164건, 의료 20,818건) 정보 수집·분석 후 1,289건 관계부서·기관에 공유 및 563건 조치 검토 요청

- (한계) 수집된 위해정보 조치율 외에 위해정보를 신속·수집·전파하여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별 맞춤형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주요 위해정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평가('21~)
- 위해 식의약품 수입·판매금지·회수(건), 기준규격 개선·검사강화·안전정책 반영(건), 섭취주의·안전성서한 등 대국민홍보(건) 등
 - * 제5차('21~'25)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3-3-3	식품의 영양·위해 정보제공 확대
②	영양표시 의무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유유순 사무관, T. 044-719-2181)

1. 과제내용

- 식생활 트렌드를 고려하여 당·나트륨 주요 급원 식품 등을 중점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 단계적 확대
- 영양표시 허용오차 초과비율이 높아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의 1일 영양성분기준치 표시 개선
 - 주로 성인의 1일 적정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영유아 대상 식품의 경우 과잉섭취 예방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떡 등 나트륨·당류가 많은 식품 및 다소비식품 등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추진(현행 115개 → 150개 식품유형)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개정(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떡 등 나트륨·당류가 많은 식품 및 다소비 식품 등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추진(현행 115개 → 176개 식품유형)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 비용검증 및 비용적정성 심의(11월), 국조실 규제심사(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비율 표시토록 개선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개정(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마련 및 개정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개정(9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표시 올바른 이행을 위한 점검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 적절성 모니터링을 통한 영양표시 준수 관리 - 영양표시 인식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표시 올바른 이행을 위한 점검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표시 적절성 모니터링을 통한 영양표시 준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5건(적합 747건, 부적합 128건) - 영양표시 인식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75명(초등학생 1,375명/ 산업계 200명) 만족도 91점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표시 활용도(%)	73.5	73.6

*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도 조사: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있다’ 응답자 비율] × [‘영양표시 내용이 식품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친다’(보통이상) 응답자 비율] × [‘영양표시를 읽는다’(가끔 읽는다 이상) 응답자 비율] × 100
 ※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2,057명 대상 조사

3. 성과 및 한계

□ 김치류 영양표시 반대*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김치류 중 적용 품목 및 적용 시기 조정

* 김치 원재료가 계절, 생산지 등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이 달라 영양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치 영양표시 반대(대한민국김치협회 등, 7.13)

○ 배추김치 우선 의무화, 중소기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300억 이상 업체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조정(120억이상 →300억이상)

○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로 개정 지연

4. 향후 추진계획

□ 영양표시 확대를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1.6.)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21.3.), 개정 공포(‘21.6.)

3-3-③	식품의 영양·위생 정보제공 확대
③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민간제공 확대

(담당자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최용민 연구사, T.063-238-3561)

1. 과제내용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영양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범부처 성분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 농축수산식품의 영양·기능성 정보 통합 DB(공공데이터명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구축 진행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발간 및 대국민 공개(5년 주기,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 보유 DB 현황 ('20)>

- 영양 성분: 식품 3,088종, 성분 130종 함량 DB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20)
 - * '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5,327건 : 식생활교육 콘텐츠 및 앱 개발 등
 - * 협업부처 : 국립수산물연구원, 질병관리청
- 기능성 성분: 플라보노이드('16~'17) ⇒ 페놀화합물('17~'19) ⇒ 사포닌('21)
 - * 플라보노이드 DB : 식품 268점, 세부성분 1,684종, 페놀산 DB : 식품 308점, 세부성분 1,163종
 - * '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1,324건 : 기능성분 섭취량 및 건기식 개발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고도화 및 실용성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공개 - 데이터 최신화를 위한 DB 확충 ○ 기능성성분 DB 구축 및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사포닌 성분 DB 구축 - 플라보노이드 DB 개방 및 페놀산 DB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개방('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3,088점, 성분 130종, 데이터 20만건 *DB 제공 : ('19)4,182건→('20) 6,651 - 식품 연 350점 분석을 통한 데이터 최신화 *'10년 이전 노후데이터 비율: 44%('16)→42%('20) ○ 기능성분 DB 구축 및 개방('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포닌 조성 분석완료(콩, 대추 등 70점) -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 DB Open-API 개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수(단위:건)	2,350	6,651

* 공공데이터 제공 수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를 통한 '국가표준식품성분 DB'와 '플라보노이드 DB 1.0', '페놀산 DB 2.0' 제공 건수를 의미 하며 최근 3년(17년 160건, 18년 2,713건, 19년 4,182건)의 평균치 유지

3. 성과 및 한계

□ 식품 영양·기능성분 DB 신속 공개 및 개방 확대로 국민 식생활 영양안전 향상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 공개(4월) 및 산업적 활용 요구 반영

- 식품 수 : 3,088점 * 신규추가 98점, 데이터 교체 82점, 삭제 45점

- 버섯, 감귤, 포도 등 농산물 품종과 젤리, 초콜릿 등 영유아 다소비식품 보완

* (정보 개방) 공공데이터포털 및 농식품올바로 ('17) 164건 → ('18) 2,968 → ('20) 5,327

* 데이터 최신화 : '10년 이전 노후데이터 비율 44%('16) → 42%('20)

○ 기능성분(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 DB 개방(12월)

- 콩, 병풀, 더덕, 대추 등 원재료 및 가공조건별 사포닌 조성 분석완료(70점)

-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 DB의 상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Open-API 서비스(12월)

* 기능성분 섭취량 분석 등 다분야 활용 목적으로 DB 1,324건 제공('20), 전년대비 2배 ↑

□ (한계) 국가표준식품성분 DB의 양적 확대에 식품산업, 식생활 유용성이 제고되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 확대 및 통합정보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고도화 및 실용성 강화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3 공개 및 기능성성분표 3.0(사포닌편)('21)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데이터 최신화

* '10년 이전 데이터 비율 : 44%(9개정, '16)→30%(10개정, '21) → 20%(11개정, '26)

○ 공공영양정보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업과제 추진('21~'22)

- 공공영양정보 작성을 위한 표준 정의서 개발 및 공개 방안 논의

* 과제명 : 식품영양성분정보 원스톱 서비스

* 참여부처 : 농식품부, 식약처, 교육부, 농진청, 수과원, 행안부 참여

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1 균형잡힌 영양 섭취 지원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① 주요 저감대상 집중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 043-719-2262)

1. 과제내용

- 식생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공·조리식품 분야별 공급단계에서 나트륨·당류 저감대상 선정 및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류·나트륨 주요 섭취 기여식품 중심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 가정간편식(식사류, 비식사류) 영양성분 함량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영양성분 전수조사 완료 * (2월) 컵밥 등 254개 / (7월) 국·전골 등 687개 / (12월) 국내 유통 가정간편식 6,391건 전수조사 및 청소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결과 ○ 중소제조업체 제품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등 기술지원 완료 * 냉동야채솔밥 등 6종 개발, 홈플러스 등 3곳 판매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급식에서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제공 확대 * 개별 음식점에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참여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음식점(외식)·삼삼급식소(급식소)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 1,264회 실시 * 컨설팅 참여업소 : 147 ('19) → 1,411 ('20) ○ 외식 업체 나트륨·당류 줄이기 확산을 위한 자율영양표시가이드 마련·배포 * 어린이 기호식품, 커피전문점 영업자 등 대상 영양표시 적용 방법 안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나트륨 저감 참여 음식점·급식소	1,000	1,411

*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음식점 및 급식소 현황

3. 성과 및 한계

□ 소비가 급증한 가정 간편식 영양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 가정간편식 모니터링 결과 및 영양성분 표시 등 소비·섭취 가이드 제공
- 중소제조업체 저염·저당 제품 개발 지원 및 유통망 확보에 기여로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선택 기회 제공

4. 향후 추진계획

□ 나트륨·당류 저감 종합계획 수립('21~'25)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생산, 유통 및 구매 환경 조성, 소비자 식습관 유도를 위한 세부과제 수립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②	범국민 참여 행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실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참여 행사 개최
 -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지역별 캠페인 수행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트륨·당류의 적정섭취 유도 및 건강한 식생활 확산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저염·저당 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에 대한 관심유도 및 홍보 콘텐츠 발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참여행사(10월) 및 지역별 릴레이 Low 단짠 캠페인(8월~) - 청소년 당·나트륨 줄이기 체험 홍보관 운영(10월) ○ 국민참여형 식습관 개선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참여행사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 운영(11.20~12.11) 및 '푸드 토크콘서트(6.20, 7.25)'; '마이나슈 쿠킹클래스(7.15, 8.21, 10.21)' 실시 - 청소년 당·나트륨 줄이기 체험 홍보관 운영(12.10~12, 부산백스코 & 온라인) ○ 국민 참여형 식습관 개선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 3,000mg만큼' 실천 프로그램 운영(5.6~7.25)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포스터 공모전 (4~11월), UCC 공모전(6~11월), 공모전 특별 전시(연중) ○ 요리경연대회 개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 - UCC 공모전(5.15~9.11) 개최 및 수상작 전시(연중) * 총 183건 접수, 12건 선정 ○ '20년 나트륨·당류 저감요리경연대회 개최(11.3, 수원전통문화관) * 예선 174팀, 본선 10팀 경연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	개최	개최

3. 성과 및 한계

□ 우리 국민 나트륨·당류 줄인 건강 식생활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및 홍보를 통해 저감 인식도 개선

○ 나트륨·당류 저감 인식도 증가

- 나트륨·당류 걱정 섭취량 인지, 덜짜게 덜달게 먹기 실천 노력 등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저감 인식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

* 나트륨 저감 인식도(%) : ('16) 56.1 → ('17) 59.8 → ('18) 61.1 → ('19) 62.6

* 당류 저감 인식도(%) : ('16) 42.4 → ('17) 43.0% → ('18) 51.2% → ('19) 53.3

4. 향후 추진계획

□ 대상별·테마별 나트륨·당류 줄이기 국민 참여 행사 운영

○ 범국민 참여 온라인 행사 개최 및 캠페인 수행(연중)

○ 나트륨·당류 줄이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5월~)

○ 나트륨·당류 줄인 요리경연대회 개최(11월)

4-1-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④	(학교) 나트륨·당류 저감화 실천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 환경 개선

-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청 운영평가 시 반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달(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 등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 등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교육 실시, 권고염도(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 학교 나트륨 저감화 추진실적 점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지침 시행(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등 영양관리 강화(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1.13.)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 및 이행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토록 안내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낮추도록 안내 (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1.13.)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11,770 개교, 99.1%)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나트륨 저감화 시행 학교수(%)	97	99.1
○ 당류 저감화 운영계획 수립 학교 수(%)	96	98.5

*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학교단위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한(학교급식 국 염도 관리, 나트륨 교육 실시 등) 학교수

*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당류 저감화 계획을 반영한 학교수

3. 성과 및 한계

- 학교급식에서 저염·저당 식단 제공 등 노력(국 염도 0.6~0.7%)
- 급식종사자 교육 활성화 및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당류 저감화 노력

4. 향후 추진계획

-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 및 저감화 실천도 조사 등을 통해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지속 추진(계속)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고대웅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미설치지역 센터설치(4개소) 및 기존센터 사업 확대(1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급식소 지원율 : 9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급식소 등록 의무화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2.29공포, '21.12.30시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 확대, 인력 확충 및 급식지원 서비스 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224 → ('20) 228개소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75 → ('20) 90% * 영양사 등 전문인력 확충(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755 → ('20) 1,811명 - 맞춤형 식단 매월 11종 보급(총 132건) - 센터 식단운영·관리지침서 등 교육자료 및 가정통신문 등 제작·배포(20건) - 부실급식소 등 집중관리대상 지정·관리(73개소) ○ 중앙센터 사업을 위탁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완료(1월) ○ '급식관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개통(1월) 및 기능 고도화(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수혜율(%)	100	90

$$* \text{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 수혜율(\%)} = \frac{\text{센터 지원을 받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text{급식관리 지원대상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수}} \times 100$$

3. 성과 및 한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확대를 통한 급식관리 지원 수혜율 확대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40,091개소(90%)와 어린이 123만명 대상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19) 224 → ('20) 228개소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지원율 : ('19) 75 → ('20) 9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설치 및 어린이급식소 등록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하였으나, 법안 개정지연에 따라 100% 등록 미달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12.29. 공포, '21.12.30. 시행)되어, 법 시행에 따라 모든 소규모 급식소 등록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신규 6개소) 및 사업규모 확대(60개소)를 통한 모든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②	(어린이)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준범 사무관, T.044-202-2821)

1. 과제내용

생활 터 중심의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 성장기 아동의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습관화를 통해 비만예방을 실현하고자 영양 및 신체활동 중심의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 (구성) 놀이형 영양(24주차) 및 신체활동(48주차) 프로그램, 비만도 모니터링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강사교육 등 실시 - 프로그램 교육매체 고도화 ○ 사업 효과평가 및 사업성과 지자체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매뉴얼 보급("20.2월) 및 코로나19 비대면 사업 운영 방향 안내("20.5) - 부모교육용 영양건강정보지 6종, 아동용 가정연계 학습지 6종 개발·보급("20.2월), 비대면 학습을 위한 건강습관 실천영상 개발·보급("20.9) ○ 사업 효과평가 및 주요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성과·우수사례 자료집 제작·보급("20.4) - 사업성과 분석·공유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20.11)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프로그램 참여 아동 비만율*	유지	분석 중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전·후 체중 및 신장 실측을 통해 비만도 산정(2017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 의거)하여 전후 비교

3. 성과 및 한계

□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사업운영 기술지원

- ('19년) 121개 지자체, 397개 초교 및 지역아동센터 →('20년*) 102개 지자체, 297개 초교 및 지역아동센터

* 코로나19 확산 및 등교 중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제한으로 연초 계획대비 운영 규모 축소됨

- 사업 운영 매뉴얼 보급('20.2월)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방향 안내 실시('20.5월)
- 가정연계 학습 자료(부모교육용 영양건강정보지 6종, 아동용 영양교육 주제 연계 과제지 6종) 개발·보급('20.2월)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연계 '건강습관 실천하기' 영상 개발·보급('20.9월)

□ 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평가 및 사업성과 지자체 환류

- 최근 3개년의 사업 운영성과를 정리한 사업성과 자료집 제작·보급('20.4월)
- '19년 사업성과 공유, '20년 사업성과 분석 방법 안내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20.11월)
-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서식 배포 및 성과분석 방법 안내

4.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형태 다양화 및 교육매체 개정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형태(대면, 대면-비대면, 비대면) 다양화 및 지역별 탄력적 운영
-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매체 개정 추진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③	(어린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김혜올 사무관, T. 044-201-2252)

1. 과제내용

-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과일간식 지원
 - 아동·청소년기에 다양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고,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와 저변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간식 1인당 연간 30회 제공 -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2월) - 가공업체 공급계약체결(지자체, 2~3월) - 과일간식 공급 실시(3월) - 공급업체 현장점검(6, 10월) - 성과 조사(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교실 아동 대상 과일간식 지원(연 30회) - 적격업체 선정(2.10) - 지자체별 가공업체 공급계약 체결(3~4월) - 과일간식 공급 개시(6월) - 현장점검(6.17~7.10, 11.6~19) * 코로나19로 등교개학 연기에 따라 공급계약 및 개시, 점검일정 등 지연 - 추진성과 설문조사(11.30~12.13)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86.0	86.4

* 수혜자 설문조사(측정산식: 리커트 5점척도 등으로 측정 후 100점 만점 기준 환산)

3. 성과 및 한계

- (성과) 204개 지자체 약 5천개교 약 23만명(사전신청기준) 대상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기존간식(빵, 핫도그 등)을 국산 제철 과일로 대체, 어린이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가능성 확인
 - 지속적인 등교일 축소 등에 따른 꾸러미 공급 등 학교-공급업체-지자체 간 과일간식 공급체계 안정적 기반 확보
- (한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개학 지연 및 축소로 상반기 공급개시 일정 등 지연

4.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인해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학생들의 정기적인 과일 섭취 지원을 위해 학교 자율적으로 꾸러미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 보완 추진
 - * 과일간식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 등교 금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꾸러미 공급시 위생·안전 등을 고려하여 껍과일이 아닌 과일 원물 형태로 공급하고,
- 주기적인 과일 섭취와 함께 학교 내 식습관 교육과 병행하는 사업 취지를 최대한 저해하지 않도록, 1회당 공급 분량을 제한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④	(청소년) 학교 내 고카페인 판매 금지 등 영양·안전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정 사무관, T.043-719-2255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카페인, 식중독 예방 교육 등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용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적정 섭취 유도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영양이론, 조리실습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 안전·영양교육 지원 * (주제)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영양 표시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 안전·영양교육 지원(3월~) * (주제)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영양 표시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10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등 지도·점검	10회	10회

3. 성과 및 한계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
 -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확산

4.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도 중·고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 * (내용)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영양표시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 * 전담관리원 교육 강화 및 홍보, 지도·점검(월1회)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⑤	(청소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관리기준 등 강화
 -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및 체위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안) 시범적용 결과를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계획 수립(5월)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9.25.~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영양관리기준 마련, 기존 현행화 ○ 개정·시행('21.1.)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완료	개정완료

*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3. 성과 및 한계

- '21.1월부터 학교급식에 유치원이 포함됨에 따라, 유아 영양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관리 강화 기반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1.1.)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⑥	(성인) 개인별 영양섭취관리 지원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T. 043-719-226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김종수 연구관, T.043-719-4403)

1. 과제내용

- 식품영양성분 DB의 개선·확충을 통해 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최신 영양정보 통합 제공* 및 영양성분 제공식품 확대** (16→30천개 이상) 등 식품영양성분 DB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2월) * 식약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영양성분 통합 제공 ** 과자류, 빵류, 가정간편식 등 영양성분 표시 정보 추가 조사 ○ 영양기반 산업 창출 위한 '산·관·학 정기협의체(가칭)' 구성(5월) * 참여업체 : 닥터키친, 키오스크 등 메디푸드 스타트업 등 10여개 ** 공공기관 :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 다소비식품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 및 정보 생산(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최신 영양정보 통합 제공 및 영양성분 제공식품 확대 등 식품영양성분 DB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완료(2.27) - 각부처 영양DB를 통합하고, 식품 38,223건에 대해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제공 - 가정간편식, 과자류, 빵류 등 약 1만 2천건 영양성분 조사 완료 ○ 영양기반 산업 창출 위한 '식품영양DB 활성화 협의체' 구성 완료(6.25) * 식품영양 안전·빅데이터 활용분야 산·관·학 전문가 30명 ○ 소비 트렌드등 고려 200품목, 108종 영양성분 정보 확보 및 DB 반영(12월) *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NLS) 사업 (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영양성분 DB 공공데이터 연간 활용횟수	25	32,837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식품영양성분 DB 공공데이터 연간 다운로드 건수 ('20년 식품영양DB 개편 이후 연간 활용횟수를 연간 다운로드건수로 산출하여 제시)

3. 성과 및 한계

□ 소비자 맞춤형 영양정보 대폭 확대 완료, 지속적 확대 필요

- 가공식품, 외식정보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 DB를 확대 조사하여 대국민 공개 완료 이후 이용자수 대폭 증가

* 연간이용자수: ('19) 4,700 → ('20) 100,454

□ (성과) 식품영양성분 DB 최신 영양정보 반영 및 활용 확대

- 다빈도,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한 가정간편식 등 200 품목에 대한 108종의 영양성분 분석데이터 확보 및 식품영양성분 DB 확충
- 국민의 영양섭취관리 지원을 위해 「식품영양성분자료집」 과 「한눈에 보는 조리음식 영양성분표」 발간 및 제공

4. 향후 추진계획

□ 식품영양통합 DB 확대 및 활용 강화('21~)

- 식품영양정보 추가 확충 및 데이터 수록

* 가정간편식, 어린이 기호식품 등 가공식품, 외식 등 영양정보 추가 조사·확보

** 식품건수: ('20) 30,000건 → ('21) 50,000건 → ('23) 70,000건 → ('25) 100,000건

- 식품영양성분 DB 표준화 및 부처간 통합 추진

-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 및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제공기반구축
- 통합 DB 표준화코드 결정, 음식 및 가공식품 등 DB 정보 표준화
- 식품영양정보 개선 관련 산·학·연·관 협의체

* 부처 중점협업과제(행안부, '20.9.11) 확정

- 학교급식시스템(NEIS, 나이스) 식품영양DB 정보 연계를 통한 학생 급식의 영양정보 제공('22)

- 사용자(영양사, 대학생 등) 대상 영양정보DB 홍보 및 교육

□ 코로나-19로 소비패턴 및 선택변화 등을 고려한 배달·간편식 등 (200품목)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생산(12월)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⑦	(고령자) 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 관리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고대응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및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시범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의 건강 식생활을 위한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1월~)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의 건강 식생활을 위한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 사업 연장 실시(1월~) * 7개 센터, 307개 급식시설 지원 -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운영(6월) ○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3.7억 → ('21) 7.4억(3.8억 ↑)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수혜율(%)	3	3.3

$$* \text{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수혜율}(\%) = \frac{\text{센터 지원을 받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수}}{\text{급식관리 지원대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수}} \times 100$$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7개소 시범·운영중
 - 사업운영비(국비+지방비) 1억당 40개 급식소 지원 가능*하여, 총 사업운영비 7억으로 280개 급식소 지원 가능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 소규모 급식시설 9,120개소* 중 280개소에 해당하는 3%를 목표치 설정
 - * '19년 노인복지 급식시설 현황(지자체)

3. 성과 및 한계

- 짧은 운영기간 및 시범사업의 한계에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정당성 및 효과성 확인
 - * 보조금 사업 적격성 심사('20.4) 결과 적합 판정(96점/100점, 보건사회연구원)
 -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 ('19) 83.8점 → ('20) 86.3점
- 일부 지역에만 운영 중인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추가설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21년)
-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영양관리에 고품질화식품 활용 및 홍보 확대

4-1-②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⑧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신지영 서기관, T. 044-201-2274)

1. 과제내용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연구 등을 토대로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 * 사업 설계를 위한 실증연구 실시('18),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정 품목 구매지원과 식생활 교육 병행 등 올바른 식품선택 환경 조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바우처 사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범지역 공모 등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홍보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도입 계획 수립('2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계, 예산배정 등 기재부협의 ○ 사업체계 구축 및 '20년 시범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전담기관 선정(4월, aT) - 바우처 실증연구 계약(6월) - 공모·심사를 거쳐 시범지자체 선정(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지역 / 18,180가구 / 2,615백만원 규모 - '20.9월부터 12월까지 바우처 지원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소비자단체 협의회 시 설명(4월) - 제도 도입 전문가토론회(11월)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 체감도(점)	70	86.8

- * 수혜자 1,200명 설문조사 (지역/성별/나이별 계층에 따른 표본설계, 95%신뢰수준, 표본오차 ± 3.10%p)
- * 조사항목 : 사업 만족도, 식생활 및 건강 개선 도움 정도, 바우처 활용성
-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3. 성과 및 한계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개선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정책 신규 도입
 - 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 과일, 계란, 우유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원 사업체계 구축, 15천가구('20.9~12월, 4개월) 시범 지원
 - * 사업 전담기관 지정('20.4월, aT), 시범 지자체 및 실증연구기관 선정(6월)
 - * 수혜자의 사용 편의 및 부정사용·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사업설계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 (지원방법) 전자카드 (구매처) Pos시스템 구축된 농협소매유통 및 직거래매장
 - 바우처 지원에 대한 수혜자 편의성 증진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농식품부, aT, 농정원, 지자체, 민간네트워크(이장, 부녀회장, 복지시설 관계자 등)
 -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영양상태 개선에 대한 긍정의견 제시 등 국민 관심 증가 및 체감 성과 확산
 - * '20 수혜자 설문결과('20, KREI) : 바우처지원 필요성에 공감(88%), 영양상태 개선 기대(78%), 농식품 소비·섭취량 증대에 도움(82%), 식생활 개선에 도움(76%)이 된다고 응답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등
 - 11개 소비자단체와 농식품부 협의체인 소통협의체에서 제도 설명(4.7)
 -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11.13)
 - 농식품지원제도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획기사(11월)

4. 향후 추진계획

- (지원 확대) 취약계층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신선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농식품 지원 확대* 및 본사업화 추진('21.3~ 예비타당성 조사)
 - * ('20) 18천가구, 3개월 → ('21) 28천가구, 12개월
- (실증 연구) 영양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먹거리 정책을 검토하여 수혜자 중심 운영방안 마련('21.12월)
 -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한 본사업 구체적 설계
 - * 농식품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21.1, KREI+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 연구('21.4, KREI)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⑨	(취약계층) 우유급식 지원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 T.044-201-2340)

1. 과제내용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1월), 사업비 배정(3~9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6~7월), '21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학교우유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1.28), 사업비 배정(2.21, 6.15, 9.25),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6~7월), '21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9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원대상 학생수(천명)	577	635

* '20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근거로 실적 산출

3. 성과 및 한계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유가공산업 발전 도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약 635천명 학교우유급식 지원
- 학교우유급식 입찰·계약·공급·정산 등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지원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지원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21년)
- '21년부터는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50%에서 60%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57.4만명→ 70만명)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⑩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준범 사무관, T.044-202-2821)

1. 과제내용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임산부·영유아 보호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시스템 점검·고도화
 - 비만예방 및 식생활 관리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개발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연계 교육매체 제작·배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중·비만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영상강의 보급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신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자문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콘텐츠 강화 ○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및 확산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홍보 및 활용안내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보호자를 위한 영상강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콘텐츠 (중국어, 베트남어) 10종 개발(20.12월) ○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식품위생, 빈혈 등) 6개 과정 개발(20.12월) ○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PPT, 리플렛) 개발·확산(20.12월) ○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홍보 및 활용안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설명회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20.11월) ○ 온라인 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교육 활용률(%)*	78%	80.6%

* (온라인교육 활용 보건소 수/영양플러스 운영보건소 수)*100

3. 성과 및 한계

□ 온라인 영양교육시스템 신규 과정 콘텐츠 개발

- 영양플러스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동영상 강의 6종 제작(20.12월)
- (주제) 식품위생, 식품 알레르기, 빈혈예방, 보충식품 활용 조리실습 등

□ 다문화 가구용 영양교육 강의 콘텐츠 강화

- 기 개발된 비만 및 아동 식행동 관련 교육과정(5편)에 대해 최빈도 언어(중국어, 베트남어)로 더빙·번역 등 다문화 과정 개발(20.12월)

□ 영양플러스사업 교육매체 제작 및 보급

- 온라인 강의 콘텐츠 및 교육자료(식품위생, 식품 알레르기 등)를 활용한 리플렛, PPT 등 제작·보급(20.12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및 시스템 활용 안내 교육

- 2020년도 사업설명회 및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과정 안내 및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실시(20.11월)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 담당자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주제로 신규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발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 영양교육 시스템(LMS) 기능개선 및 이용자수 증가 대비 서버 운용 및 스토리지 관리 강화

4-1-2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⑪	(환자) 환자용 식품의 맞춤형 기준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 T.043-719-2414)

1. 과제내용

- 질환자 대상 식품의 시장 확대 요구에 대응한 안전관리 기반구축
 -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분류 신설 등 메디푸드 분류체계 개편
 - 도시락, 밀키트 등도 질병명 표시가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개편 및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특수의료용도식품 확대 개편 및 제품 특성에 맞게 재분류 - 가정간편식 형태 환자용 제품의 기준규격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개편 및 기준규격 개선 개정고시 완료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위에 3개 중분류 및 11개 식품유형 신설 - 당뇨·신장질환자용 가정 간편식 제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p>※ 추진경과 : 전문가회의(4회), 제조업체 현장방문·간담회(2회), 산업체 의견수렴 및 설명회(3회), 유관기관·부서회의(2회) 등 → 개정(안) 마련 → 행정예고('20.6) → 식품위생심의('20.9) → 규제심사('20.10) → 개정고시('20.11.26)</p>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개정고시 완료

* 당초 목표는 '20년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는 것이었으나,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6)하고, 고시개정까지 완료('20.11)

3. 성과 및 한계

□ 취약자 대상 식품의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 강화

- 식사관리식품 시장 창출 기대효과 연간 1.5조*(잠재수요 29조 이상) 및 적절한 질병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 당뇨 및 신부전 환자(3,310,934명, '18)의 5%가 매일 식사관리식품 이용시(단가 8,000원 가정)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투석단계 이행을 1년 지연시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투석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 향후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규격 마련 필요

- 현재는 일부 질환(당뇨·신부전·장질환)에 대해서만 표준 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장수요를 감안한 추가 개발 필요
- 신설된 제도 정착을 위한 영업자 교육·홍보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환자용 식품 기준·규격의 현장적용 촉진

- 고혈압·암 환자 등을 위한 표준 제조기준(안) 추가 개발
- 영업자를 위한 교육 및 환자용 식품 제조가이드(안내서) 제작·보급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활동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 043-719-2102)

1. 과제내용

-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로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음식점 위생등급 ‘우선구역’ 지정을 통한 확대 추진(연중)	○ 다중이용시설 중심 ‘우선구역’ 지정 등 위생등급 지정 계획 수립(3월)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 누계: ('19) 5,194 → ('20) 15,185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평가 전문가 양성을 통한 평가인력 확대(연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평가자 양성교육 실시(11월, 240명)
○ 문체부와 협업을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과 제도 연계(6월)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체부 고시 개정(2월)
○ 위생등급 희망 영업자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2~11월)	○ 위생등급 신청 희망 영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2~11월, 3,807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2~12월)	○ 생활방역과 연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 위생등급 제도 및 평가기준 소개 영상 게시(5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홍보 동영상 리플릿 배포, 우수실천 현장방문, 인증샷 이벤트(6~8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 위생등급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평가기관 확대(11월)	○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증가에 대비하여 평가기관 확대(안) 의견수렴(5월) * 평가 객관성 유지 및 예산 소유 등 사유로 지자체·인증원 반대의견 제기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수	6,300	16,852

*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수

3. 성과 및 한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등) 및 프랜차이즈의
신청 확대로 위생등급 참여 분위기 확산

* ('19) 7,275건 신청, 3,125 지정 → ('20) 16,852건 신청(231%↑), 9,991건 지정

생활방역과 연계하여 음식점 안전 환경 조성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음식점에서 실천
하도록 지원 및 홍보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동영상, 리플릿(9만부) 배포 및 인증샷 이벤트 실시

○ 음식점의 거리두기 등 실천을 유도하도록 위생등급 연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고시 개정, 7.31)

(한계)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위생등급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및 언론·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연중)

4-2-①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②	배달음식 및 가정간편식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 T. 043-719-2054)

1. 과제내용

- 도시락, 김밥 등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 등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 배달앱 사업자에게 통보되는 이물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키트,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연중) - 온라인 판매 가정간편식 등 집중 수거·검사(분기별)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집중 점검(연2회) - 배달앱 이물 통보 사후관리(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키트,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대상 기획점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점검 업체 (점검/적발)</td> <td>수거·검사 (검사/부적합)</td> </tr> <tr> <td>5월</td> <td>124개소/9개소</td> <td>52건/모두적합</td> </tr> <tr> <td>8월</td> <td>1,156개소/44개소</td> <td>63건/모두적합</td> </tr> </table> - 온라인 판매 가정간편식 등 대상 수거·검사(분기별, 4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수거·검사(검사/부적합)</td> </tr> <tr> <td>1분기</td> <td>150건 / 1건</td> </tr> <tr> <td>2분기</td> <td>193건 / 5건</td> </tr> <tr> <td>3분기</td> <td>120건 / 모두 적합</td> </tr> <tr> <td>4분기</td> <td>150건 / 모두 적합</td> </tr> </table>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앱 업체, 이물 1,230건 통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점검 업체(점검/적발)</td> </tr> <tr> <td>2월</td> <td>3,110개소 / 38개소</td> </tr> <tr> <td>5월</td> <td>617개소 / 9개소</td> </tr> <tr> <td>8월</td> <td>3,384개소 / 28개소</td> </tr> </table> 		점검 업체 (점검/적발)	수거·검사 (검사/부적합)	5월	124개소/9개소	52건/모두적합	8월	1,156개소/44개소	63건/모두적합		수거·검사(검사/부적합)	1분기	150건 / 1건	2분기	193건 / 5건	3분기	120건 / 모두 적합	4분기	150건 / 모두 적합		점검 업체(점검/적발)	2월	3,110개소 / 38개소	5월	617개소 / 9개소	8월	3,384개소 / 28개소
	점검 업체 (점검/적발)	수거·검사 (검사/부적합)																										
5월	124개소/9개소	52건/모두적합																										
8월	1,156개소/44개소	63건/모두적합																										
	수거·검사(검사/부적합)																											
1분기	150건 / 1건																											
2분기	193건 / 5건																											
3분기	120건 / 모두 적합																											
4분기	150건 / 모두 적합																											
	점검 업체(점검/적발)																											
2월	3,110개소 / 38개소																											
5월	617개소 / 9개소																											
8월	3,384개소 / 28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생취약분야 지도·점검	5건	5건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횟수의 합산

3. 성과 및 한계

- (점검)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
→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부적합 식품 유통 사전 차단
 -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 1,280개소 점검/53개소 적발, 115건 검사/부적합 없음
 - * 배달음식점 : 7,111개소 점검/75개소 적발
 - 온라인 판매 가정간편식 등 수거·검사 결과
 - * 총 613건 검사/6건 부적합
- (이물) 배달앱 이물 클레임 통보를 통해 이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식약처에 통보된 총 1,230건 중 조리단계 혼입으로 230건 판정·조치
- (한계점) 한정된 점검인력으로 매년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에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및 배달 음식점 등 집중점검 강화
 - 배달음식점에 대한 연 2회 특별점검을 연 4회로 확대 실시
 - * 부적합 이력 등을 토대로 우선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점검
 - 가정간편식 등 온라인 인기제품에 대한 검사건수 확대
 -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배달앱 사업자에게 통보되는 이물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

4-2-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①	지하수·생산해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환경여 연구관, T. 043-719-2104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 T. 043-719-3241)

1. 과제내용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하수·수산물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우려 수산물 노로바이러스·패류독소 검사 등 집중 관리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사용 업소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 수립(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집단급식소 등 노로바이러스 검사(연중) -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장치 현장점검(연 2회) ○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우려 해역 생산 수산물 등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3~6월)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안전관리(5~10월)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관리(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사용 업소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 연간 계획 수립(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680건 검사(1건 검출) -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점검 ○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우려 해역 생산 수산물 패류독소 검사(3,119건)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비브리오균 안전관리(1,647건)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관리(1,435건)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건수)	680	680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노로바이러스(A, E형 바이러스 포함) 검사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수 감소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환자수 : ('18) 57건/1,319명 → ('19) 52건/1,152명
→ ('20.12월말) 26건/239명(잠정치)

○ 계절별 위해우려가 높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위해요소별·품목별 집중관리와 학교 학생들의 급식인원 감소,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실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봄) 담치류 등 패류독소 검사, (여름) 다소비 수산물 비브리오균 검사 및 수산물 취급업소 점검(1,309개소), (겨울) 굴 등 노로바이러스 검사

□ (한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환자 구토물 및 환경 전파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환자 구토물 소독 등을 통한 확산방지 필요

○ 특히 환경적 요인에 의한 해수오염 기인 수산물 오염인 경우 해양 유입 오염물질 차단·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수거·검사 및 홍보·교육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 안전사고 지속 발생

4. 향후 추진계획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에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지속)

□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 수거검사 실시(지속)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②	연안 생산해역 및 패류 양식장 감시체계 운영

(담당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손외학 사무관 T.044-200-5617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유흥식 연구관 T.051-720-2630)

1. 과제내용

- 굴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1월~4월, 11~12월)
 - 안전한 굴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26개 해역/총 39개소)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파악
 - (조사빈도) 중점관리 해역(23개소)/격주조사, 일반관리 해역(16개소)/월 1회
 - 패류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어업인 단체(수협)에 정보 제공
- 전국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1월~12월)
 - 동·서·남해안 패류 생산해역의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정기조사 50개소, 확대조사 102개소) 조사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1~2월, 7~12월)
 - (확대조사) 불검출시 매주 또는 격주 조사, 패류독소 발생시 주 2회, 기준 초과시 주 1회 조사(3~6월)
 - 패류독소 조사결과는 지자체 및 관련 수협에 제공하고, 발생상황은 홈페이지(수과원) 게재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굴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 서·남해안 패류양식장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25회 완료 및 지자체 및 관련 수협에 자료 제공
○ 전국 연안 패류양식장 패류독소 모니터링	○ 전국 연안 패류양식장(102개소)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실시 완료 (91회, 3,091건) 및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식중독 사고 Zero 달성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횟수)	25	25
○ 패류독소 모니터링(건수)	1,850	3,091

* 성과지표 측정방법 :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실시 횟수 / (패류독소) 당해연도 총 분석시료 건수

3. 성과 및 한계

전국 연안 패류 양식장 감시 결과 제공

- 해수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노로바이러스(25회) 및 패류독소(91회) 조사결과 제공

4.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및 패류독소 조사 지속 추진

4-2-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③	범부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유미숙 사무관, T. 043-719-2105)

1. 과제내용

-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운영으로 부처협력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추진
 - * 농식품부(농축산물), 해수부(수산물), 환경부(수도시설), 교육부(학교 급식소) 등 각 기관별 위생안전취약분야 관리·교육·홍보 계획 등 포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고위급 회의 개최(2월)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고위급 회의 개최(2월) - 각 부처 및 시도, 협회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20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실무 협의회 개최(5월, 11월)	○ 범정부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 실무급 회의 개최(5월, 11월) - 여름철 및 겨울철 식중독 예방 대책 수립·시행
○ 식중독 관련 현안 발생 시 관계 부처 회의 개최(연중)	○ 어린이·유치원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8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십만명당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명)	42	8.3

* 십만명당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 A/B × 100,000

A :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수(식중독 통계시스템)

B : 학교급식 이용자 수(교육부)

** 12월말 기준 잠정치이며, 2020년 역학조사 중으로 변경 가능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코로나19와 연계한 개인위생관리 실천 홍보와 학교 등교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발생 역대 최저 수준

* 십만명당 환자수(명) : ('17) 39 → ('18) 59 → ('19) 27.9 → ('20.12월말) 8.3(잠정치)

○ '19년부터 식중독 발생이 감소 추세이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실천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한계) 환경오염, 폭염 등 기후 변화, 신종 병원체 발생 등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및 유치원 등의 집단 식중독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범정부적 집단급식소 급식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집단 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명) : ('18) 5,011 → ('19) 1,834 → ('20.12월말) 1,534(잠정치)

4. 향후 추진계획

□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 및 급식환경 등 모든 과정을 HACCP수준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 제시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점검리스트 작성·배포('21.3월)

* 식재료의 검수, 보관, 조리, 배식 등 급식 과정 관리 및 기록 유지 등

4-2-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④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진숙 연구관, T. 043-719-2103)

1. 과제내용

- 지자체 등 식중독 현장 신속대응 능력 및 전문성 강화
 - 식중독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역할 수행 등 현장 신속대응 모의훈련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5~8월)	○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201개 기관 실시) * 지방식약청 주관,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참여, 학교(7~8월) * 시·도 주관, 시·군·구 등 지자체 참여, 음식점(6~12월)

*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 현안대응으로 모의훈련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 기관(수)	28	29*

* 참여기관 : 29개(지방청6, 시·도 17, 시·도 교육청 6)

- (성과) 식중독 발생 시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기관별 대응 임무 숙지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 신속보고 등 전년도 대비 급식소 조기경보 전파율* 향상으로 동일 식재료 납품 급식소에서의 환자발생 신속 차단
 - * 전파율: ('19) 91%(발생:128건, 전파:116건) → ('20) 96%(발생:46건, 전파:44건**)
 - ** 미발송 2건은 위탁급식시설 발생으로 연계 시설에 유선으로 통보
- (한계)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 시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대응 모의훈련 지속 실시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한 권역별 모의훈련 지속 운영
 - 학교 개학 시기 및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한 신속 보고, 현장대응 훈련 강화
 - 식중독표준업무지침 개정본에 기관 간 정보전달 및 조사체계 구체화
 - * 효율적인 모의훈련을 위해 식중독 현장대응 동영상 제작·배포('21.1월)

4-2-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⑤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진숙 연구관, T. 043-719-2103)

1. 과제내용

-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으로 사전예방 체계 확립
 - 식중독 발생·예방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및 식중독 발생분석 정보(지역·시설·원인균) 제공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개선(연중)	○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납품 및 인근 시설에 조기경보 전파(44회) * 조기경보 연계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활용
○ 시기별·계절별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요령 등 대국민 정보 제공(수시)	○ 기상정보 및 식중독 발생 통계 등 빅데이터를 활용, 식중독 예측 서비스 제공(연중), 계절·시설별 식중독 주의정보 제공(매월 1회)
○ 집단급식 식중독 원인 품목별·사례별 주의사항 등 교육(연중)	○ 학교급식 관계자(학교장·영양교사 등)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176회, 21,832명, 상반기), 식중독 주의정보 업무수첩 제작·배포(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집단급식소 조기경보 전파율(전파건수/식중독발생건수)	93%	96%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인근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정보 제공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식중독 발생·예방 정보 제공으로 식중독 경각심 제고
 - 일부 위탁급식시설 발생 등을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시 식중독 주의 정보 전파(연중)
 -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aT), 조달청 나라장터와 식재료 계약 품목별, 기간별 납품정보 실시간 연계하여 정보 활용
 - *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신고 46건 중 조기경보 전파 44건(95.6%)
 - ** 미발송 2건은 위탁급식시설 발생으로 연계 시설에 유선으로 통보
 - 최근 5년간('15~'19) 식중독 분석을 통해 원인·계절·지역별 식중독 예방요령 제공(월1회) 및 계절별 식중독 예방수칙 보도자료 배포(수시)
- (한계) 학교외 급식소의 경우에는 급식담당자가 직접 조기경보시스템에 연락처, 납품업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독려방안 모색 필요
 - * 학교는 식재료 계약정보가 조기경보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나, 병원, 기업체 등은 업체별 사용 전산시스템이 달라 자동 연계에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외 집단급식소의 조기경보 시스템 등록 확대 지속 추진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시스템 등록 방법 안내 및 유도
 - *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점검 시 확인 항목에 조기경보 등록 확인 명시
 - 산업체 운영 집단급식소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적극 권고
- 조기경보 시스템 전파 내용 구체화로 조기경보 효과 제고
 - 수신자 별 전파대상 선정 이유 명시(동일 식재료 납품, 인근 지역 시설)
 - 인체검체 신속검사 결과 공유로 주의 식재료 및 예방법 제공
 - 2개 이상 시설에서 동시 발생 시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을 확인하여 공통으로 제공된 추정 원인식품에 대한 주의 정보 제공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①	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 043-719-2102)

1. 과제내용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 봄·가을 개학 시기 이전 범정부 합동점검, 식중독 발생우려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예방진단 컨설팅 병행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등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강화 - 학교 등 급식시설 위생 점검(3, 8월) -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급식시설 특별점검(6, 11월) - 식중독 예방 컨설팅(연중) -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생 점검(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등 급식소 지도·점검(전국,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소 전수점검(총10,236개소, 6월·10월)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전수점검(총15,953개소, 7월) - 식중독발생 이력 및 법령 위반 학교·유치원·어린이집·수련시설 등 특별점검(총403개소, 11월)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 컨설팅(연중)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 점검(코로나로 미점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소 등 점검횟수(회)	3	4

* 전국단위 학교급식소 등 점검을 실시한 횟수(점검결과 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성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 등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범정부 전수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건강취약 계층 안전 강화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②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철희 사무관, T. 043-719-2102)

1. 과제내용

-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차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3, 8월) 및 법령 반복 위반업체(최근3년간 2회 이상) 특별점검(11월)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사업 기간 도시락 등 대체식 및 임시급식 납품업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 지도·점검(3회, 전국)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 점검(총3,283개소, 6월·10월) - 식품위생법령 위반 식재료공급업체 특별점검(총53개소, 11월) * 도시락 등 대체식 및 임시급식 납품업체 점검(코로나-19로 미점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횟수(회)	3	3

* 전국단위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횟수(점검결과 보고서)

3. 성과 및 한계

- (성과) 학교급식소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사전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 및 사전예방 강화
 - 봄·가을 개학기(6, 10월) 학교 등 식재료 공급업체, 부적합 이력 위생취약시설(11월) 등 3,336개소 점검(3회)
 - 김치류, 빵류 등 학교급식 다빈도 제공식품 및 도마, 식칼, 식기 등 수거·검사(6, 10월, 1,684건 검사)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 등 식재료 납품업체 안전관리 지속
 - 학교급식 납품업체 정보 사전입수를 통한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점검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 지속 공유
 - 학교급식소 현대화사업 기간 중 대체식 등 제공업체 사전점검 및 식중독 발생우려 식재료 및 다빈도 제공식품 검사 지속 실시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③	학교급식소 관리책임 강화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
 - 학교급식 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 위생·안전점검
 -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위생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 ※ 당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연 2회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점검 횟수와 점검 방법을 교육감 자율로 결정
 - 학교급식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
 - 학생에 제공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급식 행정 지침 시달 - 학교급식소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20.1.13) - 점검대상 학교 9,637교 대상 자체 점검실시 및 점검 결과공개(9,637교 공개/ 공개율 100%)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 학교급식 현장소통 강화(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식단 사진 공개 안내(1월) -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시도 교육청 영상회의 개최, 변경사항 안내 공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횟수,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항 -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관련 내용 포함하여 안내(‘20.1.13.) - ‘학교급식 정보마당’ 운영(계속)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율(%)	99	100

*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학교수(상반기) / 점검실시 학교수 × 100

3. 성과 및 한계

- ‘학교급식 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학교 내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식중독 발생 시 학교장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계속)

4-2-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④	학교급식소 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

-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매년 500개소 수준) 및 조리실 적정 온도 유지 등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 IT 활용 축산물 검수시스템 도입·추진
 - 축산물 검수 시 식재료 정보*를 자동 기록하는 검수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
 - * 생산정보(생산지역, 친환경 여부), 위생정보(원산지, 위해 축산물 여부 등), 유통정보(부위, 유통기한, 냉장·냉동, HACCP인증 등)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방학 집중점검 통한 일부 시설 개·보수 조치 및 노후 급식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전면 개보수) 추진(772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검수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12월, 축평원 협업) ※ QR코드 스캔 통한 정보 자동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급식용 모바일 앱 서비스 사용 편의성 개선(~'20.9월) 및 시범사업 추진(330개교) ※ 납품서류 4~6종을 통합증명서로 대체 하고, 검수등록용 QR코드 추가로 검수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개선

추진계획	추진실적
	※ 시범대상 품목 확대는 '축산물 거래 증명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후 추진 예정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학교수	500	772

*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실적 합계

3. 성과 및 한계

- 노후 급식시설·기구 개·보수 조치를 통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철저한 품질 확인 및 검수시간 단축 등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소 급식시설 및 관리시스템 개선(계속)

4-2-4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①	위생 사각지대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심연 사무관, T. 043-719-205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반경녀 연구관, T. 043-719-2107)

1. 과제내용

- 시기별·대상별 다소비식품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시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검사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대상별 다소비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위생관리 강화(연중) -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 명절, 휴가철 등에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식품에 대한 점검(연 5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검사차량 검사 지원 및 홍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대상별 다소비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버거 패스트푸드 대상 전수점검(연중) 및 기획점검 실시(5·6·10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td> <td>점검 업소(점검/적발)</td> </tr> <tr> <td>전수점검</td> <td>10,067개소 / 97개소</td> </tr> <tr> <td>기획점검</td> <td>1,609개소 / 2개소</td> </tr> </table> * 점검 대상 : 3,531개소(전수) - 햄버거 프랜차이즈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12월) - 명절, 휴가철 등에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식품에 대한 점검(5회) 		점검 업소(점검/적발)	전수점검	10,067개소 / 97개소	기획점검	1,609개소 / 2개소
	점검 업소(점검/적발)						
전수점검	10,067개소 / 97개소						
기획점검	1,609개소 / 2개소						

추진계획	추진실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점검 업소</th> </tr> </thead> <tbody> <tr> <td>설 성수식품 점검(1월)</td> <td>3,793개소</td> </tr> <tr> <td>봄 행락철 점검</td> <td>가을점검과 병합*</td> </tr> <tr> <td>여름 휴가철 점검(7월)</td> <td>9,235개소</td> </tr> <tr> <td>추석 성수식품 점검(9월)</td> <td>5,067개소</td> </tr> <tr> <td>가을 행락철 점검(10월)</td> <td>6,405개소</td> </tr> </tbody> </table> <p>*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봄·가을 점검을 병합 실시</p> <p>○ 식중독균 신속검사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생활시설 제공 도시락 검사(2월), 학교 및 군부대 식중독 신속검사 지원(726건, 108회 운영) - 관광지 등 지역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식중독 예방 홍보(588회) - 신속검사차량 신규 배치(12월, 대구청) 	점검 업소		설 성수식품 점검(1월)	3,793개소	봄 행락철 점검	가을점검과 병합*	여름 휴가철 점검(7월)	9,235개소	추석 성수식품 점검(9월)	5,067개소	가을 행락철 점검(10월)	6,405개소
점검 업소													
설 성수식품 점검(1월)	3,793개소												
봄 행락철 점검	가을점검과 병합*												
여름 휴가철 점검(7월)	9,235개소												
추석 성수식품 점검(9월)	5,067개소												
가을 행락철 점검(10월)	6,405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다소비식품·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5건	5건
○ 신속검사차량 운영 횟수*	400회	696회

* 식중독 발생현장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검사차량 운영

3. 성과 및 한계

□ 다소비 식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

○ (성과) 위생점검 결과

* 햄버거 패스트푸드 : 11,676개소 점검/99개소 적발

*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

	점검	수거·검사
설 성수식품 점검(1월)	3,793개소 점검/135개소 적발	1,498건 검사/10건 부적합
봄 행락철 점검	-	-
여름 휴가철 점검(7월)	9,235개소 점검/127개소 적발	1,225건 검사/17건 부적합
추석 성수식품 점검(9월)	5,067개소 점검/59개소 적발	2,116건 검사/2건 부적합
가을 행락철 점검(10월)	6,405개소 점검/20개소 적발	436건 검사/부적합 없음

- (한계) 한정된 자원(단속인력, 예산 등)으로 다수의 업체를 관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점검체계 마련 필요
- (성과) 신속검사를 통한 초기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역대 최저 수준('13년 대비 45% 감소)
 - * ('14) 145 → ('15) 116 → ('16) 139 → ('17) 109 → ('18) 222 → ('19) 79 → ('20) 53
- (한계) 권역별 신속검사체계 미구축으로 전국단위 국제행사 시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에 어려움 발생
 -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8월) 당시 차량 3대 지원으로, 타 지역 국제행사 및 식중독 현장 대응에 한계

4. 향후 추진계획

- 계절별·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및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연중)
- 식중독 발생 초기 신속 대응 및 검사를 통해 식중독 확산 방지, 국제행사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 지속 전개(연중)

4-2-4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②	식중독균 추적관리 기반 마련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반경녀 연구관, T. 043-719-210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황진희 연구관, T. 043-719-4303)

1. 과제내용

- 식중독 원인규명 기반마련을 위한 유전정보 DB 확보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미생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된 식중독균 유전자형 분석 및 DB 관리를 통해 식중독 원인규명 개선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식중독균 탐색조사(12,000건)	○ 해수 등 환경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18종 모니터링 * 13,016건(12월 펄스넷 기준, 2,957건 검출)
○ 식중독 균주 유전적 상동성 등 특성정보 분석 및 DB화(1,500건)	○ 식중독균 특성분석* 및 DB화(1,506건) * 균주 분리이력, 병원성 유전자, 혈청형, 유전적 상동성(PFGE) 등 분석정보 DB화
○ 식중독균 전장유전체 분석 및 DB화(2,500건)	○ NGS 분석을 통한 식중독균 전장 유전체 분석 및 DB화(2,500건)
○ 균주 계대배양 등 자원 표준화(320주)	○ 식중독균 안정적 장기보존을 위한 품질관리 등 자원 표준화(350주)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중독균 DB화(건수)	1,500	1,506

* DB화 측정방법: 식중독균 통합정보망(KIPIN)에 '20년 추가된 식중독균 특성분석 DB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식중독균(1,506주)의 분리이력 및 특성정보 DB화를 통한 식중독 추적조사 및 원인규명 기반 마련

* '20년까지 누적 분석 및 DB화 건수(균수): 13,560주

- 식중독균 전장유전체(WGS) 정보확보를 통한 식중독 원인조사체계 정확성 향상

* 전장유전체 DB(누계): ('18) 1,050건 → ('19) 3,050건 → ('20) 5,550건

4.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식중독균의 유전정보 분석 및 DB화 지속 추진(연중)
 -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된 식중독균의 병원성 유전자, 혈청형, 유전적 상동성(PFGE) 등 특성분석 결과 DB화
 - 주요 식중독균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식중독 원인조사 수행

4-3 생활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① (학생) 식품 안전·영양 교육 확대

교육부

(담당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T.044-203-6543)

1. 과제내용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지원

- 영양(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연령별 식생활 교육 교재 지원 및 실천프로그램을 강화한 실천학교 운영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추진(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행정지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지침 시행(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 실시 (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추진(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반영,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시(월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추진(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반영하여 교육 안내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식생활 교육 교재 개발(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현황 및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 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등 추진상황 점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현황, 영양상담실 운영 현황,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p>(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1.13./ 2020년 교육부 주요 정책안내, '19.1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개발(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발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자료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실험학교, 교사연구회 운영 - 보완된 영양교육 가이드라인 등 현장 보급(~'21.12) ○ 학교급식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월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83.4%)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율*	85%	83.4%

* 영양교사가 관련교과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평균 월 2회 이상 실시한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한 경우

3. 성과 및 한계

□ 단위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향후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으로 영양·식생활교육 지속 확대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시수 감축, 원격수업 등으로 기존과 같이 교육과정(영양교사의 월 2회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발생

※ 다만, 영양교사 직접 교육 대신 담임·교과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영양사·영양교사가 식생활·영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영양 교육 교재 및 교구 지원

* (식약처) 교육교재·교구 제공, 설명회 등을 통한 활용법 제시, (교육청) 수요 조사, (학교) 교육 운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연중) - '20년 식품안전·영양교육 운영계획 수립(1월) - 전국 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학교 수요조사(1~2월) - 교재·교구 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 운영(3월~) · 식약처(주관)·교육부 협조를 통한 식품안전·영양교육 제작·배포 * (교재) 초·중·고등학교 교재(e-book포함) 및 지도서 (교구) 미각키트, 핸드플레이트 등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안전·영양 전문 교육과정 운영(7~8월) * (구성) 총 4기(각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영양 교육 지원(연중) - '20년 식품안전·영양교육 운영계획 수립(1.7) - 전국 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학교 수요조사(1.13~2.14) - 교재·교구 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교육운영(3월~) · 식약처(주관)·교육부 협조를 통한 식품안전·영양교육 제작·배포 * (교재) 초·중·고등학교 교재(e-book포함) 및 지도서 (교구) 미각 키트, 핸드플레이트 등 - 영양(교)사 대상 식품안전·영양 전문 과정 운영 * 총 4기(8.11~8.21. 4회, 88명) -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1~12월) - 영양교사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효과평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최(11.27.) - 영양교사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효과평가(12.31)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식품안전·영양교육(명)	21만7천	21만8천

*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대상 초등학생 수

3. 성과 및 한계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
 -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확산

4.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도 전국 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
 - * (내용) 카페인, 식품첨가물, 식중독, 영양과 식사, 비만과 식이장애, 영양표시

4-3-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②	(고령자) 찾아가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계선 사무관 T.043-719-2275)

1. 과제내용

-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실생활 활용 가능한 영양 교육 및 조리실습 등 체험형 교육 수행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 운영(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및 건강간식 만들기 조리실습 * 경로당, 노인복지관 대상 20회 (286명) 체험형 식생활 교육 수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건강백세 영양관리 체험교실(회)	20회	20회

3. 성과 및 한계

-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식 체험 교육실시에 따른 높은 교육만족도 및 식습관 개선 실천 의지 제고

* 체험교실 운영 현황 : ('20) 20회, 286명 참여



(이론) 스토리텔링식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실습) 건강 간식 만들기(치킨빈또띠아말이)

4. 향후 추진계획

□ 노인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 '건강 백세 식품안전·영양관리 체험교실' 지속 운영(연중)

- 어르신들의 식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영양 실천방법 및 건강 간식 만들기 등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현장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목표 총 20회)

4-3-②	지역 먹거리 통합관리
①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문지영 사무관, T. 044-201-2217)

1. 과제내용

-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물류 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푸드플랜 수립·운영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 포괄 지원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역농산물 안전 관리 지원 및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농가조직화 지원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 시민사회 및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기반 조성 - ‘로컬푸드 지수’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지자체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플랜 수립·실행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3월~) - 지역농산물 안전 관리 지원(14개소) 및 농가조직화 지원(15개소) - 푸드플랜 수립 우수 지자체 8개소를 선정하여 먹거리 계획 협약 체결, 관련 사업 패키지 지원(3월~) ○ 교육·홍보를 통한 지자체·시민사회 중심 확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 및 성과를 지수화하여 로컬푸드 지수 발표(11월) * 우수지자체(완주군 등)에 대한 시상 실시 - 푸드플랜 아카데미(시민사회-지자체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측정·모니터링(1월~) - 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 운영(3월~) - 로컬푸드 활용 민간 우수모델·활동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소통 프로그램 4기) 운영(3월~) - 로컬푸드 활용 민간 우수모델·활동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5월) * 두레박 협동조합 등 18개소 선정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지자체 수	18	18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수립 지자체 조사

3. 성과 및 한계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산 촉진을 위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 및 성과를 지수화하여 로컬푸드 지수 발표

* 전국 159개 시·군,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 평가

☞ 로컬푸드의 생산, 소비 체계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에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능으로 활용 가능

* 로컬푸드 지수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지자체(완주군 등)에 대한 시상

□ 푸드플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자체·농업인·소비자의 낮은 인식으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동력 부족

4.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 실현이 지역사회 내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 지역 관리 강화 등 지역 푸드플랜 내실화에 집중

○ 푸드플랜 이행점검·관리 강화하고, 지자체, 농업인, 소비자 등 관련 교육을 통해 가치 인식 확산 추진

4-3-3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①	GAP 농산물 소비촉진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김중수 사무관, T. 044-201-2278)

1. 과제내용

- 유통관계자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로 GAP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유통에서의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 도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유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판매코너 설치(연중), 유통업계 업무협의회(2회), 기획판매전(6회), GAP 급식주간 운영(2회) 등 추진 ○ 소비자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 영양사 등 협업을 통한 체험학습활동 추진 ○ 대중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유통업계와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GAP 인증농가 확대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계 업무협의회)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이커머스까지 확대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5.8, 하반기 11.6 - 전용판매대 100개소 운영 - 기획판매전 6회, GAP 급식주간 운영 2회 ○ 소비자단체 및 영양사 등 소비주체 대상 GAP 가치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리더 90명(9개 단체) 양성 및 영양(교)사 GAP 학습조직 운영(81명) ○ 언론기획보도(신문 10회, 라디오 460회, TV 4회), 아파트 엘리베이터(24백회), 지하철(162만회), 정류장(1,500회) 등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비자 인지도(%)	82	77.0

* 성과지표 측정방법 : 리서치 업체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활용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소비자 단체와 영양(교)사 등 소비주체 대상 GAP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GAP 저변 확대

○ (교육) GAP 소비자 리더 90명(9개 단체) 양성 및 영양(교)사 8개팀 81명에 대하여 GAP 학습조직 및 팸투어 추진

* 소비자단체(10.26), 영양사(11.7) 학습성과 보고대회 완료

○ (홍보) 생활밀착형 맞춤형 홍보 실시

- 언론기획보도(신문 10회, 라디오 460회, TV 4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24백회), 지하철(162만회), 정류장(1,500회) 등

○ (판매) 인증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획판매전(4회), 전용판매대 설치(100개소), GAP 급식주간 운영(2회)

○ (협의회) 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마켓컬리 등)을 참여시켜 GAP인증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논의 및 협업체계 구축

□ (한계) 그 간 GAP인증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에 주력, 향후 일반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GAP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GAP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GAP 판로지원” 사업(’21년 신규) 추진

- GAP인증농산물 홍보마케팅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기획전 프로모션 지원,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 등

○ GAP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집중 홍보 및 SNS 등 디지털홍보 강화

4-3-③	건강한 농산물 소비촉진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조재성 서기관, T.044-201-2443)

1. 과제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
-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다양한 판로 확대

2.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지원(2개소 선정, '20.9월) ○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4개소, 19~'23년)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교육·홍보 및 직거래·온라인·홈쇼핑 등 판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선정 추진(2개소, '20.11~'21.2월) 및 지원 (누계 7개소) ○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지원(4개소, 19~'23년) ○ 현장체험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가치소비 확산 <p style="margin-left: 20px;">* 홍보 282,295회(TV 887, 라디오 1,296, 언론 648, 유튜브 홍보 28만건 조회, 라이브커머스 564명 시청)</p>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개소, 누적)	7	7
○ 소비자 구매도(%)	85.0	85.9

* 지표 측정방법 등 설명 작성 : 당해연도까지 조성된 산지조직 수('17~누적)

* 2020년 국가농식품인증제도 및 소비정책 인식보고서(코리아리서치)

3. 성과 및 한계

- 광역단위 산지조직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확대 및 광역도 간에 품목교류 협의회 구축
 - '20년 친환경농산물 총 매출액 1,695억원, 공공수요 매출액 949억원으로 매출 증가
- 비접촉 시대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 지원
 - * 57개 농가 대상 79개 상품 온라인 입점 판매 지원(381회, 704백만원 매출)
- 현장체험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가치소비 확산
 - * 홍보 1,288회(TV 887, 라디오 1,206, 언론 648, 유튜브 홍보 28만건 조회, 라이브커머스 564명시청)
-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 * 전국 초중고 학생 531만명 학생 대상 농산물꾸러미 공급(2.7만톤)으로 소비위축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광역단위 산지조직 간에 품목교류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유도
 - 중앙정부, 지자체, 광역단위 산지조직 간에 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과·부족을 해소하고,
 - 지역 내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촉진 유도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
 - 판촉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 및 교육·홍보 추진
 - 유통업체 판촉사업, 친환경가치확산 교육, 홍보 등 추진
 - * 학교급식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친환경농산물 판로지원(연중), 가치확산 교육홍보 추진(연중)

5

[관리 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5-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① 부처간-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최기환 사무관 T.043-719-3244
 축산물안전정책과 김돈환 사무관 T.043-719-3245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 T.043-719-3224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강금자 사무관 T.043-719-3220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손외학 사무관 T.043-719-3205)

1. 과제내용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채널 구축·운영

-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및 지자체와의 업무 협업채널 구축으로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 등의 수립 시 긴밀한 협조 유지
- 관계부처 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 공유·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과제의 협의·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정기협의체 운영(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련 국과장급 참석 ○ 관계부처 간 실무자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운영(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및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상호협력을 통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체(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해수부 등 - 농축수산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원유 잔류물질검사계획 설명 및 농축수산물 관련 개정고시 논의 * 지자체 농산물 현장검사소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전 농산물 검사 지원 * 부적합 정보(총 24회) 등 공유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회)	3	8

3. 성과 및 한계

-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통합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 협업체계 운영을 인정받아 축수산물 협업정원 정규직화 성과달성(12.14)
- (농식품부·해수부) 축수산물 협업정원을 운영하여 상시 소통채널 운영, 공동대응, 문제해결형 정책개발 → 안정적인 협업기반 구축
- (지자체) '20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 추진사항 점검 및 현안 대응전략 논의

4. 향후 추진계획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채널 구축·운영(지속)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②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김행열 사무관 T.043-719-4056)

1. 과제내용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한 생산단계 등 정보 공유 확대
 - 환경오염 등 부처별 보유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식품정보를 융·복합하여 안전관리 지원 기반마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고려한 정보연계 확대(12월) ○ 지도기반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등 위해요인을 고려한 정보연계 확대(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해양수질·폐광산 등 환경·공간 등 식품안전 관련 외부 요인 정보까지 연계 확대(14종) ○ 지도기반 식품안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서비스 제공(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정보 등 식품정보를 통합망에 시각화 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기능 구축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정보제공 확대 서비스 구축	1	1

3. 성과 및 한계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기관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확대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주기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농업용저수지 수질정보, 골프장현황도, 친환경인증 등 14종 연계 확대 및 연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지도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
 - * 부처 간 식품안전 연계정보 6% 증가(전년대비) : ('19) 220종 → ('20) 234종
- 통합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가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연계·통합한 데이터는 향후 관계행정기관에서 식품정책 분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기관별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지속 확대 및 통합망 데이터 활용방안 검토(통합망 범부처 운영협의회 등)

5-1-①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③	지자체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이병용 사무관, T. 044-201-2975)

1. 과제내용

- 지자체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지원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장비 확보 지원 ○ 지자체 축산물 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관 교육 추진(연중) - 식용란 미생물 검사 항목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 실시(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구축비 65억원 지원(국비 40%) ○ 축산물검사 전문인력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지자체 검사관 286명 대상 도축검사교육 9회 추진 완료 - 원유 등 잔류물질 분석·검사 실무 교육 실시(3월, 6월)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 없음

3. 성과 및 한계

- 생산단계 원활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장비 예산 지원 및 교육 추진
 - '20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구축을 위한 국비 65억원(국비 40%) 지자체 지원
 - '21년 축산물검사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19억 확보
 - 원유 잔류물질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전에 검사계획(안)에 대한 협의 및 검사법 교육 실시(3.18, 6.17~18)

4. 향후 추진계획

- '21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도축검사교육 등 지속 추진
 - '21년 도축검사교육 계획(안) 수립·시행('21.1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박정규 사무관 T.043-719-1821)

1. 과제내용

- 시·도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능력 강화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 중앙-지자체간 현장중심 업무협력 활성화
 - 시험검사 현안 공유 및 시험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소통체계 정착
-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시·도) 시험·검사기관의 첨단 분석장비 도입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 국고보조 지원장비 운용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시·도) 시험·검사기관의 첨단 분석장비 도입지원 완료 - '20년도 국비 교부계획 수립('20.1.) - 교부('20.1.~2, 13.6억) 및 장비 도입 15개 기관) - 전년도 국고보조장비 운용현황 조사 완료(16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업무 협력 활성화 - 정책설명회 -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 시험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을 위한 설명회 및 회의 완료 - 정책설명회(1회) - 보건환경연구원(1회) 및 동물위생 시험소 회의(1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집행율	96	96

* 시도별 국고보조 실 예산집행액/국고보조금 교부금액 ×100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실험실 역량강화 기반 마련

-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 15개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첨단분석장비 17대 도입 지원

- 식·의약품 안전관리정책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한 소통강화

* 안전관리 및 시험·검사 정책, 시험법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 추진(84건)

□ (한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첨단분석장비 도입 및 관리, 인력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 발생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 지원대상에 동물위생시험소 확대에 따른 첨단분석장비 수요 증가

4.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활성화(지속)

- 첨단분석장비 도입 예산 확보 및 지자체 시험검사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회의 등 소통 추진

5-1-2	법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①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규호 사무관, T. 043-719-2011)

1. 과제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20)
 -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제도화로 안정적인 정착기반 구축
 - * 공유주방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 추진(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12월)
 - 식품 영업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추진(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제출, 10월)
 - * 이의제기 → 확인검사(타 검사기관 2곳 이상) → 부적합 판정 철회 검토
 - 식품의 위생안전 등에 위해가 없는 경우 카페, 음식점 등에서의 옥외영업 허용 추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 제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 추진(2월) -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 제도화 추진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 제도화 관련 연구사업 실시('20.3월, 식품안전정보원) - 공유주방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20.9) 및 개정·공포('2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20.11.14, 남인순의원)

추진계획	추진실적
○ 옥외영업 허용 추진(10월)	○ 음식점 등에서 옥외영업 허용 (‘20.12.31 개정, ‘21.1.1 시행)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법령 제·개정	입법추진	입법완료

3. 성과 및 한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공유주방 영업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영업 근거 등 마련

- 공유주방 영업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위생관리책임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마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7809호, ‘20.12.29.공포)

□ 자가품질검사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

□ 옥외장소에 대한 영업장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식산업 활성화 도모

-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변경) 시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 안전기준* 신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2.31.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1661호, ‘20.12.31.공포)

** 손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시설 등 설치 / 옥외장소는 조리음식만 제공 가능 등

- 옥외영업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영업 운영 안내서’ 등 배포·교육(‘20.12.)

4. 향후 추진계획

- 공유주방 영업 등에 대한 세부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추진, ~21.12.)
 - * 공유주방 영업을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매뉴얼 등 교육·홍보 병행('22.1~)
-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응('21.1~)
- 옥외영업 업체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등 지속 점검('21.1~)

5-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①	전문가·소비자 등 참여 확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신지영 서기관 T.044-201-2274)

1. 과제내용

- 농축산물 수급과 안전에 대한 농업정책 개선방향을 소비자단체·전문가와 소통·협업하여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 소비자단체와 소통협의체* 및 협력사업을 운영하여 농축산물 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역량을 강화

* 11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농식품부로 구성(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석)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소비자단체와 농정 협의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제도 홍보, 모니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4.7) 화훼·친환경 소비촉진 등 - (2회, 5.12)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등 - (3회, 6.2) 식문화 개선방안 등 - (4회, 10.2) 재사용 화환 표시제 등 - (5회, 11.6) 도매시장 공익형직불추진 등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서면·발표평가 사업선정(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소비자단체, 13개사업 6.5억원 - 공익직불 등 농정홍보 및 모니터링 - 사업결과 전문가 성과평가회(12.9)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소비자 농정 인식도(점)	75	71.4

* GAP, 원산지, 로컬푸드 등 농정제도 인지도, 이해도, 행동유형 등 조사

3. 성과 및 한계

□ 11개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소통협의체 운영(연 5회)

- 소비자단체 관심 농정 이슈에 대한 소비자단체와의 협의 추진
 - (1회, 4.7) 화훼·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푸드플랜·농식품지원 확산방안 등
 - (2회, 5.12)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및 식생활교육 설명 등
 - (3회, 6.2) 지역 푸드플랜 확산 추진, 식문화 개선방안 등
 - (4회, 10.20) 재사용 화환표시, 농업재해, 농산물 수급동향 등
 - (5회, 11.6) 도매시장 거래제도, 공익형직불제 추진현황 등

□ 농식품-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13개사업, 6.5억원)

- 원산지, GAP, 친환경, 로컬푸드 등 농정제도 홍보·교육과 현장모니터링, 실태 및 인지도 조사 등 소비자단체(11개 단체) 협력사업 추진
 - 농림부 내 필요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사업 발굴(20.1월)
 - 사업 공고를 통해 소비자단체별 매칭과제 전문가 평가(2월)
 - 사업 추진 및 사업종료 후 전문가 성과평가(발표평가) 실시(12.9)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단체·전문가 소통 추진 애로

- '21년은 비대면 교육·홍보프로그램을 발굴해 대면사업과 적절히 병행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활동역량 강화 및 다양한 방식의 전문가·소비자 농정참여 유도

- 농정제도 교육·홍보의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동향조사 및 농업현장 모니터링 과제 등 정책협력과제를 확대 추진

5-2-①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②	국민청원 창구 등 운영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 김재현 연구관, T.043-719-1051
소통협력과 최원영 연구관·소담이 사무관, T043-719-2553, 2555)

1. 과제내용

- 국민청원 창구 운영을 통해 다수 국민이 청원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단' 및 '열린포럼' 운영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 선정, 수거·검사 및 결과 공개(연중) - 표어 공모전 개최(3~5월) - 운영지침 및 규정 개정(6월) ○ 국민의견수렴 및 피드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통단 구성·운영(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요청사항 조치보고서 마련 - 국민중심 양방향소통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운영(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 진행(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 결과 발표(인공눈물 등 총 3건) 및 심의위원회 개최(총 8회) - 표어 공모전 개최(4월) 및 심사(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식의약품 불안할 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운영지침 및 규정 개정(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내용) 인증·홍보 수단 변경,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 등 ○ 국민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통단 1,000명 구성(3월) 및 소비자 니즈 발굴·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건수(조치건수): 46건(40건) → 소비자요청사항조치보고서(4회) 마련 -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개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언 14건 발굴 및 조치완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8	8

* 국민청원 안전검사 관련 대상 선정·결과 타당성 검토·자문 등

3. 성과 및 한계

□ 국민소통에 기반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제품에 대해 직접 청원·추천을 하고, 식약처가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안심 제고

* 결과발표 : 인공눈물(49품목 적합, 6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45품목 적합, 8월), 새싹보리 분말(77품목 중 12품목 부적합, 10월)

- 운영 지침 및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심의위원회 규모 확대로 전문성·객관성 제고

*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위촉 : 83명 → 100명(외부 95명, 내부5명)

- (한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가 불가능하여 인지도 제고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심의위원회 8회 개최) 대비 1회 미달성되었으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 청원 채택 기준수(추천수2000건) 충족 청원 등 채택 가능 청원 부족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

□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추진

- 국민소통단과 열린포럼 운영으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불안요인 등 잠재이슈 발굴 및 선제적 조치로 정책 신뢰도 제고

- (국민소통단) 소통단을 구성·운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지속 발굴·조치하여 식·의약 분야 불안감 해소

* 소비자 니즈 발굴(조치): 46건(40건) → 소비자 요청사항 조치보고서 마련(4회)

- (열린포럼) 온·오프라인 참여자 증가로 홍보 효과 개선
 - * ('18.3월, 1회) 151명 → ('20.10월, 23회) 1,600여명
- (한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 위해요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소비자단체의 정책참여 확대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탄력적 운영
 - *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 등으로 수거·검사 곤란 시 위탁용역 활용,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등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실생활에서의 불안·관심사안 발굴 강화 및 소비자 참여를 강화한 국민소통단 지속 운영('21년)
-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및 소비자 토크콘서트 지속 개최('21년)

5-2-2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①	국제식품 기준·규격 설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김승래 사무관, T044-201-208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이주영 사무관, T.044-201-2121)

1. 과제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 및 농축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제규격 제·개정에 적극 대응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총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수출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에 우리나라 기준(입장)을 반영 노력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식물보호협약(IPPC) 및 검역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동축산물 및 식물 위생·검역 기준 제개정 대응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X 총회·분과위별 국제동향 파악 및 논의 의제 검토 대응 ○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등 동식물 검역기준 제·개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대응 계획 수립 완료(1월) - CODEX 총회·분과위별* 국제동향 파악 및 논의의제 검토 대응 완료(연중) * 식품위생, 식품오염물질, 동물용의약품분과,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에 의견 제출(5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국제기준 제개정 대응(건)	5	5

* 국제기준 제·개정 시 의견제출 건수

3. 성과 및 한계

□ (성과) 고추장 Codex 지역규격(아시아, '09)의 세계규격 채택(제43차 총회, '20.10월) 등 전통식품 국제규격화 추진

○ 전통 발효식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수출 촉진 기반 마련 등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고추장 수출량 : ('10) 7.6천톤 → ('15) 12.5 → ('20.1~11월) 19.7

□ (한계) 코로나19로 인해 IPPC(세계식물보호협약) 총회(4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5월) 및 Codex 분과위원회 회의 등 취소·연기

○ 팬데믹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영상회의) 방식 개최에 따른 소통역량 약화, 회의 대응 연속성 저하 등 개선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예상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방식 변경(영상회의)을 건의하고, 전자작업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Codex 김치(세계규격) 개정, 즉석밥(지역규격) 제정, 회원국 제안 규격(바실러스 중 발효 대두제품, 급속냉동만두, 식물있으로 감짬밥) 등 적극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 T.043-719-2020
 식품기준과 최윤주 연구관 T.043-719-2415
 축산물안전정책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242)

1. 과제내용

- 총회 등 20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 국제 논의 동향 사전 검토 및 국가 대응 방안 마련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국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1월) ○ CODEX 총회, 하부분과 등 13개에 회의에 참석 및 대응(연중) ○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회의가 '21.10월로 연기 ○ 코로나-19로 인해 CODEX 총회 (온라인) 참석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분과는 전자작업반에 지속 참여 및 대응 * (식품첨가물) 가공유 중 식용색소적색 제40호와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국내 사용기준(사용불가)을 코덱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으로 논의 추진(12.3) * (총회) 우리나라 고추장·곶감 국제식품 규격으로 최종채택(11.6) * (향신료 및 요리용허브) 신선 마늘에 대한 국제 규격 최종채택(9.24) * (식품위생) 식품업계 관리자를 위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관리 실행규범 최종채택(9.25)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및 특수용도분과) ‘6-36개월 영·유아의 필수영양성분기준치(NRV-R)의 설정을 위한 일반원칙 개발’ 의견 제출(8.24) ○ 국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협력회의(8월) - 인니 국가기준청 실무협약(12월) -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국제워크숍 참석(12월) -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회의 및 훈련 개최 횟수(회)	5	5

3. 성과 및 한계

- 식품분야 항생제내성 관리와 관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 도입을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
 - 항생제 내성 저감 및 최소화 실행규범 5단계 채택(CODEX 총회 승인, 11월)
- CODEX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기준에 적합한 의견이 반영·채택되도록 적극적 의견 개진
 - 다만,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식품분야 항생제내성 관리와 관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기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 국가 간 식품 기준 국제조화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4. 향후 추진계획

- '21년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적극 대응, 당사국간 양자협약 등 국가 간 협력체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지속)
- 2021년도 CODEX 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연중)
- 제15차 한·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개최('21년)
- WHO 코덱스 신탁기금 협약 체결 및 운영('21년)

5-2-②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②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황명실 연구관 T.043-719-4504)
 축산물안전정책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242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권용관 연구관 T.043-719-2456
 수입식품정책과 최충렬 사무관 T.043-719-2160)

1. 과제내용

- 국가 간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정보교류 네트워크 확대
- 아시아개도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소개 및 참가국 식품 정책정보 교류
- 수출식품 국가인증 및 수출 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등 지원으로 우리식품의 원활한 수출 도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위해평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 위해평가 분야 국제조화를 위한 ILMERAC 국제협의회(10월) 및 한국·독일·프랑스·덴마크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11월) ○ '20년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실시(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위해평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 국제식품화학물질위해평가협의회(ILMERAC)에서 화학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식품 중 오염물질 노출의 위해평가 방법 등 논의(4.28, 6.25, 11.25) - 식품위해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위해성 평가 국제 기술교류(11월) <p>* 「Advanced approach for risk assessment」</p>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 및 수출 상대국 대응(연중) 	<p>(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1월) 국제 심포지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행사 미개최 ○ 축산물 수출작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 및 수출 상대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3월) - 축산물 수출 안내서(4월) - 수출업체 담당자 등 역량강화 교육 38명(12월) -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5,10월), 싱가포르(5월), 캐나다(11월) - 對미 동등성 평가보고서 제출(7월) - 對일 수출 식육·가금육 HACCP 적용 관련 일본측 질문서 회신(12월) - 對EU 삼계탕 수출허용 대응(연중) - 對캐나다 미량육류 함유식품 긴급 대응(11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해평가 분야 회의 및 훈련 개최횟수	1	4
○ 한-아세안 위생협력 사업 자체평가 결과*(등급)	A	미개최

*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등급 평가 결과(OECD 기준에 따라 A~D까지 4등급으로 결정)

3. 성과 및 한계

- 위해평가 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강화
 - 유럽 각국 위해평가 전문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한국□독일□프랑스□덴마크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연기에 따른 방안 모색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심포지엄의 온라인 개최 등 검토
- 국내산 축산물 신규 수출허용 타결
 - (캐나다) 23년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삼계탕 첫 수출(2월)
 - (싱가포르) 돈육통조림(런천미트) 첫 수출(6월)
- 수출 상대국 정부에 축산물 수출작업장 신규 등록(25개소)
 - (홍콩) 돈육 13, 식용란·알가공품 4, 쇠고기 1 (싱가포르) 돈육통조림 1, 삼계탕 1, 식용란 1, 가금가공품 1, 가금육 1 (미국) 삼계탕 1 (중국) 유제품 1

4. 향후 추진계획

- 위해평가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 협력 강화
- '21년 아시아 개도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 신규 수출시장(품목) 확대(연중)
- 시험검사기관 국제 공인 인정 지원 등 동등성 기반 확충(연중)
- 수출식품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운영(연중)

5-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①	수사역량 강화

(담당자 : 법무부 형사기획과 류승진 검사, T.02-2110-3271)

1. 과제내용

- 위해식품 집중 단속을 통한 부정식품 근절**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해식품사범 단속에 대한 수사력 집중
 - 법무연수원 전문교육 및 각급 검찰청별 수사실무 교육 확대
 - 범행동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 철저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대응 강화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20. 1.~12. 검찰 직접단속 12명(구속 2명)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범죄 유인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강화 - ‘20. 1.~12. 범죄수익환수(333,010,000원)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	○ 검찰청별 특사경 전담검사 지정하고 ‘특사경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실효성 있는 합동 단속 실시 - ‘20. 1.~12. 협의체 회의 및 교육 등 12회 개최
	○ 법무연수원, 각급 검찰청 등을 통한 특사경 교육 지속 실시

추진계획	추진실적
	- '20. 1.~12.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 집합교육(6회, 186명) 및 사이버교육(12회, 7,017명), 검찰청 별 관내 특사경 교육(6회, 172명)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불량식품 관련 회의 개최 실적	16회	12회
○ 수사전문화 교육 실적	30회	24회

*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및 수사전문화 교육 일정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일부 취소되어 성과목표치 미달성

3. 성과 및 한계

□ 성과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지검)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 실시

* 전체 부정식품 단속인원 12,618명(구속 17명), 검찰 직접단속 12명(구속 2명)

□ 한계 : 해당없음

4. 향후 추진계획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속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지속 단속('21. 연중)

- 불량식품·원재료의 적극적 몰수·폐기처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국세청 탈세정보 통보 등 근원적 범죄 차단 노력('21. 연중)

○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21. 연중)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지속('21. 연중)

- 법무연수원, 검찰청 특사경 대상 직무교육 확대 및 지속 실시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 전담 특사경 타겟형 교육 실시

5-3-①	감시·감독 역량 강화
②	감시기법의 과학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중유해물질과 김형수 연구관 T.043-719-4452
 첨단분석센터 김진호 연구관 T.043-719-5324)

1. 과제내용

- 위변조 식품 및 불법 혼입성분 등의 과학적 감시 기술 개발
 - 위변조 식품·소비자 기망(欺罔)식품(저가·불량원료) 판별법 확대 및 저가어종의 고가어종 둔갑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물 판별법 개발
 -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식용금지 원료 등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 개발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식품의 현장 신속 및 소비자 기망 행위 판별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센싱 기법을 활용한 히스타민 등 정량 리더기 개발(11월) - 재사용 식용유 판별을 위한 식용유 신선도 간이판별기술 개발(11월)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불가 원료 및 저가 원료 판별을 위한 종특이 판별법 마련(12월) - DNA 바코드법을 이용하여 육안 구별이 어려운 식품 및 미래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식품의 현장 신속 및 소비자 기망 행위 판별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위·변조 물질(히스타민, 멜라민) 고감도 현장 검출을 위한 휴대용 센서 및 리더기 개발(11월) - 재사용 식용유 여부 판별을 위한 알데하이드 검출 간이 지시약 개발(11월)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우려 식품의 종(種) 특이 유전자 판별법 10건 개발(12월) - DNA 바코드법을 이용한 미래식품(식용곤충, 식물성 고기) 등 식품원료

추진계획	추진실적
<p>(곤충, 대체육 등)에 대한 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및 유통조사(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신속 현장 검사법 및 키트 개발(12월) <p>○ 식용금지 원료 및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의 분석법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립선 치료 효과 표방 식품 중 의약품 성분 분석법 개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식용금지 원료(백굴채, 블랙코호시 등 2종)에 대한 혼입·판별법 개발(12월) 	<p>유전자 바코드 정보 확보 및 원료 실태 조사(34건)(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전자 바코드 30종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11월) - 실시간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현장 적용 신속 검사법 8건 개발(12월) <p>○ 식용금지 원료 및 불법 혼입 의약품 성분의 분석법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립선 치료 효과 표방식품 중 의약품 21개 성분 동시분석법 개발(12월) - 부정물질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가 및 구매불가 표준물질 비만 치료제 유사물질 등 15개 성분 합성·확보(12월) - 식용금지된 원료(백굴채, 블랙코호시) 불법 혼입을 검출하기 위한 이화학·유전자 분석법 듀얼시스템 개발(12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위·변조식품 판별법* 개발 건수	70	85

* 유전자 바코드 정보 및 진위, 혼입 판별법

3. 성과 및 한계

□ 위·변조 여부 현장 확인을 위한 신속검사법 개발

* 큰구슬우렁이/물레고동, 고추냉이/서양고추냉이 등의 현장 신속 검사법 8건

** 멜라민, 히스타민 휴대용 센서 및 정량 리더기 개발, 재사용 식용유 검출간이 지시약 개발

□ 식품 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종(種) 특이 판별법 개발 및 미래식품 등 원료 실태 조사

* 마카, 만새기, 대서양 먹장어 등 10건

** 식용곤충 및 식물성고기 유통제품의 원료실태조사 34건, 방어류, 서대류, 해삼류 등 다소비 수산물 30종 표준염기서열 확보 및 DB구축

□ 불법 식·의약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분석체계 강화

○ 불법 건강식품 중 ‘전립선 치료제 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 HPLC 및 LC-MS/MS를 이용한 테라조신, 실로도신, 알푸조신 등 21개 성분

○ 부정물질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가 및 구매불가 표준물질 합성·확보

* 비만치료제인 펜타민 계열 및 디에틸프로피온 계열 유사체 6개 성분

** Desmethyl thiosildenafil, Dipropylaminopretadalafil 등 첨단분석센터에서 최초 화학구조 규명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등 5개 성분

*** 고가로 판매 중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계열 4개 성분

○ 식용금지된 원료 불법 혼입을 검출하기 위한 이화학·유전자 분석법 듀얼시스템 개발

* LC-MS/MS를 이용한 지표성분 검출 및 RT-PCR을 이용한 특이유전자 분석

* 대상: 백굴채(Chelerythrine, Chelidone 등 4개 성분),

블랙코호시(Cimicifugic acid, 26-Deoxyacetic acid 등 4개 성분)



< 듀얼시스템 모식도 >

○ 신규 분석법 및 신종부정물질 화학구조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

- 세계·국내 최초 검출·규명한 신종 부정물질의 구조·분석조건 등을 수록한 「신종 부정물질 규명 사례집」 개정판 발간(11월)

* 신종 합성대마,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량성분 및 발모제 등 35개 성분 수록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뢰 분석 관련 수사매경, 보도사례, 물질특성 및 분석법 등이 수록된 「수사·분석 사례집」 발간(12월)
 - *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 성분 동시분석법 등 (666개 성분·48개 분석법 수록)
 - ** 배포처 : 검찰, 관세청, 국과수, 지방청 등 부정물질 관련 분석기관

4. 향후 추진계획

- 부정·불량 식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분석법 지속 개발
 - 저가원료를 고가원료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식품 판별 시험법 개발
 -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간편 조리세트 등 식품원료 진위 여부 조사
- 첨단분석기법을 이용한 불법 식품 중 부정물질 분석법 개발 지속 개발
 -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의 식품 혼입 차단을 위한 첨단분석법 개발
 - * SARMs(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성분 분석법 등
 - 부정불법 식·의약성분 표준품 합성

5-3-2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①	전통시장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변성근 사무관 T.043-719-3242)

1. 과제내용

- 전통시장 내 식육 판매업체 및 식용란 취급업체 집중 점검
 - 위생관리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으로 판매되는 닭고기, 식용란 등에 대한 점검 강화로 안전성 확보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 집중점검(1월, 9월)	○ 명절 성수기(1, 9월), 하절기 위생 취약 시기(6월) 식육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행위 집중점검(6,390개소)
○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점검(7월)	○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행위 등 집중 점검(7월, 1,164개소)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전통시장 등 합동점검 횟수(회)	2	3

3. 성과 및 한계

- 위생 취약지대 중점 단속을 통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4.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등 축산물위생 취약지대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5-3-2	위생 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②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김명호 사무관 T.043-719-1902)

1. 과제내용

- 민·관 협력 등을 통해 SNS 등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효율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심위와 업무협력 강화로 심의前 검토일수 최소화 ○ 온라인 쇼핑협회 및 회원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해외 SNS 플랫폼과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심위 차단 요청 시 위반사항 정형화 및 법령해석 등 지원 강화 - 방심위 차단 소요일수 단축 * (19) 61일 → ('20) 16일 ○ 온라인쇼핑협회, 포털사,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등과 간담회 개최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율관리 기반 조성(6월~10월, 4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국내운영자와 협력을 통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직접 차단 요청 채널 확보(6월)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소요일수	40	16

3. 성과 및 한계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불법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 획기적 단축
 - 방심위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 정형화, 법령해석 지원 강화를 통해 방심위의 심의前 사전 검토일수 단축 개선
 - * 차단소요일수: ('17) 165일 → ('19) 61일 → ('20) 16일
 - 온라인 쇼핑협회·홈쇼핑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그 회원사, 해외 SNS업체와 협력 강화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요청
 - * 차단소요일수 : ('17) 5일 → ('19) 5일 → ('20) 6일

⇒ 불법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 단축('19년 24일 → '20년 9일)

4.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차단 지속 추진
 - 방심위,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협회, 포털사 등과 간담회 및 협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견인

5-3-②	위생 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③	취약계층 보호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정 사무관 T.043-719-2255
 식품안전관리과 오세동 사무관 T.043-719-1962)

1. 과제내용

- 학교주변 위생취약 조리·판매업소 지속적 안전관리
 - 개학·어린이날 등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가 많은 시기를 대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사전점검 실시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에 판매하는 ‘뺏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 위생취약기간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가을 개학 및 어린이날 등 - 학교 주변 조리업소 대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상시점검 (월회 이상) 및 봄·가을 개학맞이 위생 취약분야 특별점검(5.20~6.17, 8.1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개학맞이·어린이날) 31,127개소 , (가을 개학맞이) 30,475개소 점검 ○ 학원가 등을 시범보호구역으로 지정 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지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보호구역 141곳 조리판매업소 2,090 개소 6,982건 점검(20.9기준) ○ 학교 주변 앞치마, 위생모 등 위생 개선 캠페인(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673개소 대상 위생마스크, 앞치마, 위생모 등 79,099개 배포(20.9기준)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위생 취약 업종 및 부적합 이력업소 점검 및 관리 ○ 전담관리원 역량강화 및 점검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관 교육, 업무매뉴얼 배포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정책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 탄산음료 등 3,810건 검사결과, 1개 부적합(20.9) ○ 지자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상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판매업소 34,753개소 대상, 전담관리원 2,886명 배치 상시 관리 * 점검 시 영업자 대상 위생기본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12,000부 배포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156,940건 점검 결과 14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점 및 문방구 등 17,648개소 월1회 이상, 자동판매기 등 기타판매업소 17,105개소 및 위반실적이 없는 업소 격월 1회 점검 실시 ○ 지자체별 전담관리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관리원 8,380명 대상 1,086회 교육 실시('20.9기준) ○ 전담관리원 업무매뉴얼 및 이력 점검표 3,490부 제작·배포(2.7) ○ 품질인증제품 및 정서저해 식품 등 관련 정책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 지하철 광고('20.4~5), 카드뉴스 등을 통한 SNS 활용, 정서저해 홍보리플릿 배포(39,900부)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0회	12회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

3. 성과 및 한계

□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지속 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강화 및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등 관리 지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환경 조성

* 업소 위반율 : ('11) 0.09 → ('14) 0.07 → ('17) 0.03 → ('20.9) 0.01

4.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주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 관리 지속 실시 및 점검 내실화를 위한 전담관리원 역량 강화

* 전담관리원 업무매뉴얼 배포 및 구역별 교차 점검 등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 실적 대국민 홍보

* 학교주변 판매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학생,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5-3-②	위생 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④	수입식품 관리 강화

(담당자 :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승현 사무관, 042-481-7742)

1. 과제내용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산하세관에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국민감시단을 활용한 정보수집으로 민간의 감시 역할 강화하여 표시위반 고위험 품목*에 대한 단속

* 민물장어, 미꾸라지, 굴비 등 수산물 및 농산물

2. 추진실적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① 산하세관에 전문요원을 추가 배치 ② 정보분석 강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중점단속 ③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로 우범 정보를 상시 수집 ④ 원산지표시단속기관협의회 지자체와 협업단속 체계 마련 ○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법규 준수 환경 및 민간 감시역할 강화 ①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사전안내 실시 ② 소비자 및 민간전문가로 '국민감시단'을 구성 ③ 민간의 원산지표시단속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위반 단속 강화 등 ① 여수·전주·평택세관 전문요원 추가 모집 배치(총3명, '20.7월, 12월) ②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7월), 중대위반 적발 증가(전년대비 중대사건 단속실적 증가 : 건수 60%, 금액 585% 증가) ③ 위생도기협회('20.4월), 철강협회('20.5월) 간담회 개최 ④ 농관원·수품원·서울시·강원도·경북·대구·부산·경남 등과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20.8~9월) ○ 사전안내 강화 및 민간의 단속 참여 프로세스화 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사전안내 건수(1,087건) 전년대비 2% 증가 ② 정보근원 확대를 위해 국민감시단 40명 추가 모집

□ 성과지표 달성도 : 해당없음

3. 성과 및 한계

□ 중대사건 단속 강화 및 민간 참여 강화

○ 허위표시·손상변경 등 중대위반 적발 증가

- 전년대비 중대사건 단속실적 증가 : 건수 60%, 금액 585% 증가

○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 국민감시단 참여 전격 추진 등

□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표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

- 사전안내 제도를 도입하여 1,087개 업체 대상 홍보('19년 1,065개)

4. 향후 추진계획

□ 중대위반(허위·손상변경)중심 표시단속 지속

○ 생계형 위반업체에 대한 단발성 단속보다 기업형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기업검사방식 도입, 중대 위반단속에 역량집중

5-3-3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①	축산농가 살충제 불법사용 처분기준 강화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주원 사무관, T.044-201-2326)

1. 과제내용

-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 (기존)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
 - (개선) 살충제 성분 함유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함

2. 추진실적

- 주요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추진계획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시행령 개정('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시행시기('20.2.28.)에 맞춰 축산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법 시행령 개정완료('20.2.25.)

-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축산법」 개정	'19년 개정완료	'19년 개정완료
○ 「축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개정완료	'20년 개정완료

3. 성과 및 한계

- 「축산법」 개정 등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

□ 관련 법령 개정

- 농약 사용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안 발의('18.10, 임이자 의원)
- 「축산법」 개정·공포(법률 제16550호, '19.8.27. 공포, '20.2.28. 시행)
- 「축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477호, '20.2.25. 공포, '20.2.28. 시행)
- 입법예고('20.1.21 ~ '20.1.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민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축산업 영업정지·허가 취소 규정 신설로 살충제 사용 등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축산농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4. 향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법령 개정 완료)